

FIS 해외재정동향

2026년 5-8월

- Ⅰ 주요국
- Ⅱ 국제기구
- Ⅲ 현안분석



일 러 두 기



1. 주요국의 재정동향과 국제기구 연구동향은 월간 「나라재정」 각월호의 내용을 재구조화하여 편집하였습니다.
2. 현안분석은 당시 작성시점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FIS 해외재정동향」 발간시점과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재정동향의 관련 출처와 원자료는 각주의 URL 및 인용정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FIS 해외재정동향

총 괄 재정혁신본부 홍학의 본부장

연 구 진 (현안분석) 김명규 연구위원, 김민경 부연구위원, 서영빈 부연구위원

(재정동향) 김도일 연구원, 김도현 연구원, 엄용현 연구원, 김미영 연구원, 최민혜 연구원

문 의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부(02-6908-8200)

Contents

I. 주요국

미국	6
독일	18
영국	30
프랑스	42
일본	52
중국	60

II. 국제기구

OECD	68
IMF	76

III. 현안분석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CEFP) 사례 조사	86
확장재정 기조 국가 동향 사례	89
초과세수 재정운용 사례 분석 및 시사점	95
대만 반도체 호황과 재정정책 변화	107
대만 인구대책 신전략 - 가족지원편	115
OECD 경제전망 및 한국 재정정책 제언	126
일본 특별 예산 체계의 특징	131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骨太方針)2026 내용 및 시사점	136
2026-2027년 유로존 재정 기조 평가	148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AI 활용 동향	154
재정·통화정책의 비동조화 사례 분석	163
대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양극화 지표 영향 분석	175
금리 상승에 따른 주요국의 재정부담과 대응	190

I. 주요국

미국	6
독일	18
영국	30
프랑스	42
일본	52
중국	60

주요국 재정동향은 월간 「나라재정」 각월호의 내용을 재구조화하여 편집한 것임.



미국

(1) 통화정책·물가

▣ (4.8) 이란 전쟁 장기화가 미 인플레이션·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¹⁾

- 달라스 연준 연구(4월 7일)에 따르면, 이란 전쟁으로 세계 원유 공급이 장기간 차질을 빚을 경우 2026년 말까지 미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를 크게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
 -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이 1분기(약 3개월) 지속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15달러에서 167달러 수준까지 급등하면서 단기적으로 연율 기준 인플레이션을 5%p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추정
 - 봉쇄가 1분기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의 누적 효과는 약 0.35%p, 세 분기(약 9개월) 지속 시에는 연말 인플레이션이 최대 1.8%p 상승할 수 있으며,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도 0.18~0.49%p 추가 상승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등 유가 경로에 따라 물가 경로가 크게 변화될 가능성 상존
- 4월 8일 공개될 3월 연준 회의 의사록 전망에 대한 보도는 연준 위원들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에너지 가격 충격을 반영해 2026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전체·근원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Price Index) 모두 연말 2.7% 수준으로 전망치를 높인 것을 언급
 - 보도에 따르면, 연준은 2025년 12월 점도표에서 제시했던 2026년 PCE 인플레이션 전망치 2.4%를 3월 회의에서 2.7%로, 식품·에너지 제외 근원

1) <https://www.reuters.com/business/iran-war-may-boost-inflation-not-expectations-per-dallas-fed-research-2026-04-07/>
<https://www.reuters.com/business/fed-minutes-march-meeting-could-flesh-out-how-policymakers-view-war-risks-2026-04-08/>

PCE는 2.5%에서 2.7%로 각각 0.3%p, 0.2%p 상향

- 연준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호르무즈 봉쇄 기간이 3~6개월로 길어질 경우, 유가가 132~167달러까지 상승하면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최대 1.47%포인트 추가로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해, 단기적으로는 통화완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
 - 달라스 연준과 연준 의사록 관련 보도는 이란 전쟁이 미국 인플레이션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며, 에너지 가격 충격이 단기 물가를 크게 끌어올리지만,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 물가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

■ (5.12) 인플레이션, 3년 만에 고점 근접 및 연준 금리 인하 지연 우려²⁾

- 미국 노동부 통계국(BLS)이 12일 발표한 자료와 이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3월 이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기준으로 최근 약 3년 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다시 꺾였다는 평가가 제기
 - 로이터는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거의 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고, 4월도 에너지·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망하였으며,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관세 구조가 물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
 - 로이터 설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4월 CPI가 에너지·교통·주거비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상승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져 통화정책 완화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
- 물가 재상승은 연준의 올해 기준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시장 기대를 크게 제약
 - 월가는 이란 전쟁·에너지 가격 상승·관세·재정지출 확대가 중첩되며 2026년

2) <https://www.reuters.com/business/us-consumer-inflation-expected-have-increased-further-april-amid-iran-war-2026-05-12/>
<https://www.reuters.com/markets/us/iran-war-stasis-brings-us-inflation-expectations-back-boil-2026-04-30/>

내 금리 인하 폭이 줄어들거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전망하였으며, 일부 금융기관은 첫 금리인하 시점을 연말 이후로 늦춰 잡고 있다고 분석

-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채권·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 지표와 연준 인사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채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 지표가 재상승하면서 연준의 여지를 제약
- 종합하면, 3~4월 미국 내 물가 재상승은 이란 전쟁·유가·관세·재정 확대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구조적 충격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장과 언론에서는 공통적으로 연준의 통화완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

■ (6.9) 5월 기존주택 거래 반등, 그러나 여전히 높은 모기지 금리에 묶인 미국 주택시장 회복세³⁾

- 전문가들은 5월 들어 기존주택 거래가 예상보다 늘며 미국 주택시장이 부분적인 회복 신호를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모기지 금리와 높은 집값이 거래 회복과 신규 수요를 제약하며 향후 1~2년 동안은 제한적인 거래와 완만한 가격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
-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6월 8일 발표에 따르면, 미국 5월 기존주택 매매(Existing Home Sales)는 전월 대비 3.2% 증가한 417만호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
 - 5월 기존주택 거래는 4월 대비 3.2% 증가해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 매물 부족이 완화되고 거래가 회복되는 조짐이 관측
 - 다만 여전히 높은 모기지 금리와 제한된 매물이 주택시장 회복을 제약하고 있으며, 금리 수준이 역사적 평균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첫 내집 마련 수요와 이사 수요를 동시에 억제

3) https://www.tradingview.com/news/reuters.com,2026:newsml_L1N42G0R0:0-us-existing-home-sales-increase-more-than-expected-in-may/

- 한편, 6월 11일 공개된 로이터 설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높은 모기지 금리가 2027년까지 주택시장의 거래를 억누르고, 가격 상승률도 완만하게 유지시킬 것으로 전망⁴⁾
 - 전문가들은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당분간 약 6.4% 수준에서 소폭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높은 금리와 이미 오른 집값이 향후 1년 동안 주택 구매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분석
 -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19명 중 약 3분의 2는 향후 1년간 주택 구입 여건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높은 모기지 금리와 높은 주택가격은 첫 주택구입자들에게 주택구매 제약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평가

■ (7.30.) 장기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차입비용 확대⁵⁾

- 미 연준의 7월 30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3.5~3.75%) 직후 장기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 기준금리 발표 직후 미국 30년물 장기 국채금리는 최대 0.14%p 상승하였으며, 이는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가장 큰 상승폭으로 나타남
 - 한편 2년물 단기 국채금리는 4.28%로 하락
- 파이낸셜타임즈는 장기금리 상승과 단기금리 하락으로 인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 시장에서는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소비자·생산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 트럼프의 관세정책 및 AI 호황에 따른 경기과열도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

4) <https://money.usnews.com/investing/news/articles/2026-06-11/high-us-mortgage-rates-to-keep-housing-market-subdued-reuters-poll>

5) <https://www.ft.com/content/c4eedbe8-6345-48b6-8d44-5cc5b0bea2c7?syn-25a6b1a6=1>

- 미국의 장기 차입비용 상승 영향으로 미·유럽 등 글로벌 금융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S&P500가 1.5% 하락하고, 나스닥100도 2.1% 하락
 - 미국발 채권 매도세가 유럽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면서, 독일의 30년만기 국채(Bund)는 3.68%, 영국의 30년만기 국채(Gilt)는 5.76%로 상승
-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물가상승 목표(2%)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

■ (B.3.) 고용 부진으로 9월 금리인상 기대 약화⁶⁾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한 7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2만 3천명 감소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으며, 실업률은 4.1%로 전월(4.2%)과 유사하였으나 취업자 증가가 아닌 경제활동 참가자가 감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
 - 특히 지난 5, 6월 고용통계가 당초 발표보다 총 10만 3천명 하향 수정되는 등 최근 고용 여건이 부진하였음을 시사
 - * (5월) 12만 9천명→ 6만 3천명, (6월) 5만 7천명→2만명
-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지표 발표로, 금융시장의 9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
 - 9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43.9%로 고용보고서 발표 전(57%)보다 크게 하락하였으며, 반면 금리 동결 가능성은 60.4%로 이전(43.2%)보다 크게 상승
- 노동시장 지표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물가가 목표치(2%)를 상회하고 있어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6) <https://www.reuters.com/business/us-rate-futures-cut-chances-september-rate-hike-after-jobs-data-2026-08-07/>

(2) 재정·예산

■ (4.10) 3월 재정수지: 이란 전쟁지출 지연 속 적자 확대⁷⁾

- 미국 연방정부의 3월 재정수지는 1,64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소폭 확대되었으며, 이란 전쟁 관련 군사지출 일부가 4월 이후로 이연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 재무부 자료를 인용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3월 개인 소득세 환급은 전년 동월 대비 150억 달러(22%) 증가한 850억 달러로 나타났고, 기업 환급은 50억 달러(215%) 증가한 80억 달러를 기록해, 감세·공제 확대와 환급 일정이 재정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
 - 기사에서는 이란 전쟁과 관련한 일부 군사비 지출이 회계상 4월 이후로 이연되면서, 3월 적자는 예상보다 소폭에 그쳤으나, 향후 몇 개월 동안 국방·안보 지출 확대가 누적 적자와 국채 발행 규모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
- 이란 전쟁과 기존 감세·관세 조치의 결합 효과를 반영한 의회예산국(CBO) 전망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 8,530억 달러 수준으로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증가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CBO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연장, 관세로 인한 세수 구성 변화,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충동으로 인한 국방·이자지출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기 둔화가 없더라도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
- 3월 재정수지 관련 로이터 기사와 CBO 전망은, 이란 전쟁이 단기적으로는 군사비 이연 등으로 월별 적자 흐름에 불규칙성을 주지만, 중기적으로는 국방비 확대·이자비용 증가를 통해 연간 재정적자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

7) <https://www.reuters.com/markets/us/us-march-budget-deficit-rises-slightly-164-billion-war-outlays-delayed-2026-04-10/>

■ (6.23) 트럼프행정부, 876억 달러 규모의 긴급 추가예산안 제출⁸⁾

- 트럼프행정부는 대이란 군사작전(Operation Epic Fury)을 위한 군사비용과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876억달러 규모의 긴급 추가예산안을 의회 제출
 - 이번 추정안의 대부분인 671억달러가 탄약 및 무기조달(210억 달러), 군사작전 비용(173억 달러) 등 중동 지역 군사 비용과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국방비로 편성
 - 중앙아프리카 에볼라 방역(14억 달러), 미국 농업지원(111억 달러) 등 국방 외 예산도 일부 포함
- 전문가들은 이번 긴급 예산안이 의회 통과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평가
 - 공화당 대부분은 찬성 입장이지만, 민주당(패티 머레이 상원의원 등)은 2027년 회계연도에 요청한 국방비가 이미 1.5조 달러로 사상 최대인 점을 지적하며 추가 지출에 대해 강력히 반대

■ (7.4.) 연방정부 예산으로 아동 자산형성 지원 본격화⁹⁾¹⁰⁾

- 재무부는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일에 맞춰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포함된 신규 재정사업 중 하나인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를 본격 시행
 - 트럼프 계좌는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의 일시금(Seed Money)을 최초 적립해 주고, 이후 아동이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가족·친지·고용주 등이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자산 형성 프로그램
 - 개설된 계좌는 대형 자산운용사 운용을 통해 S&P500 등과 같은 저비용 ETF에 투자

8) <https://breakingdefense.com/2026/06/white-house-sends-87-6b-supplemental-to-congress-with-67b-for-defense/>

9)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554>

10)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6/07/11/heres-why-new-trump-accounts-wont-make-your-children-rich/>

- 계좌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전 인출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도 부과 이연
- 정부는 트럼프 계좌를 통해 미국 아이들에게 금융교육과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현금성 지원을 통해 불평등 격차도 축소할 계획
- 다만 외신과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의 현금성 지원책들이 빈곤층을 돕는데 실패한 사례가 많고, 오히려 추가 적립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 (7.22., 8.8.) 임시예산안(CR) 처리로 정부 셧다운 방지를 위한 조기 대응 노력¹¹⁾¹²⁾

- FY2027 정규예산이 회계연도 시작(10월 1일) 전까지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방지를 위한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CR) 처리에 착수
 - 임시예산안은 연방정부 예산을 현행 수준으로 일정 기간 연장하여 정규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의 필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임
 - 과거에는 회계연도 종료 직전인 9월 말에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올해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혼란과 셧다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조기 추진
- 선거를 앞두고 정부 기능 마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당 모두 셧다운 방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양원 간 이견 및 대통령 서명 절차를 고려할 때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 하원은 정부운영을 12월 4일까지 연장시키는 비교적 단순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킴(7.22.)
 - 상원은 정부운영을 12월 11까지 더욱 연장시키는 한편, 행정부의 예산 집행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킴(8.8.)

11) <https://www.reuters.com/world/us-house-passes-short-term-funding-bill-avert-pre-election-government-shutdown-2026-07-22/>

12) <https://www.reuters.com/world/us-senate-passes-short-term-funding-bill-avert-federal-shutdown-before-election-2026-08-08/u>

- * 타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의 전용 금지, 보조금 관련 권한 일부 제한 등 포함
- 향후 하원이 상원의 수정예산안에 동의하고, 양원 간 이견 해소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확정 예정

(3) 금융·외환시장

■ (6.24) 국채시장의 구조적 불안 우려 지속¹³⁾

-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는 최근 대규모 재정적자와 수요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증가
 - 2026년 6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30년물 국채의 발행금리 또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정부의 차입비용 부담이 증가
 - 과거에는 중국 등 수출 중심 국가들이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에 적극 투자하며 국채 수요를 뒷받침하였으나, 최근에는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주요 투자자의 수요 감소로 인해 글로벌 저축 과잉(Global Saving Glut)에서 글로벌 채권 과잉(Global Bond Glut)으로 국면 전환
 - 중앙은행·연기금 등 장기투자자 중심이던 시장에서 헤지펀드사 등 단기투자자의 영향이 확대된 것도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 중 하나로 평가
- 주요 외신인 파이낸셜타임즈는 미국 국채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시
 -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추진 중인 국채거래의 중앙청산(Central Clearing) 의무화는 거래상대방 위험을 축소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여 국채시장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의 자본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경우 은행권의 국채 보유 여력이 확대되어 안정적 수요 기반 확보 가능성

13) <https://www.ft.com/content/fd5b3c1e-b5b2-41d2-839f-c437f5f40232?syn-25a6b1a6=1>

- 미국 단기국채를 준비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 역시 국채 수요 확대에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규제를 동반한 제도화 검토
- 한편, 신임 연준의장인 케빈 워시는 상대적으로 긴축적 통화정책 성향으로 평가되며 향후 국채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연준의 긴급유동성 공급장치 마련 등과 같은 국채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

(4) 산업·통상

■ (5.7)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¹⁴⁾

-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5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Trade Expansion Act §122)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이라고 판결, 관련 관세 부과를 취소하도록 결정
- 재판부는 무역법 122조가 허용하는 것은 국제수지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단순 상품교역수지 개선과 대외 협상 지렛대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법이 요구하는 ‘국제수지 위기’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
 - * 무역법 122조(Trade Expansion Act §122): 국제수지 악화를 이유로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까지 ‘일시적(Global)’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970년대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IEEPA 상호관세 위한 판결 직후 이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면서 다시 쟁점이 되었으며, 이번 CIT 판결에서 법적 남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
-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대해 10% 글로벌 관세 징수를 영구 금지하고 이미 부과된 관세를 환급할 것을 명령

14) <https://www.reuters.com/world/us-trade-court-rules-against-trumps-10-global-tariff-2026-05-07/>

- 단, 판결 범위가 원고에 한정돼 있어 다른 수입업체에 대한 관세 징수는 별도의 소송·판결이 없는 한 당장은 유지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
- 이번 판결은 2월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은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플랜 B’로 내놓은 글로벌 10% 관세 역시 사법부 제동에 직면하면서 관세 정책 전반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제기
-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수십 개 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의회의 과세·관세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무효화한 바 있으며, 이번 CIT 판결로 IEEPA 상호관세와 10% 글로벌 관세라는 두 축 모두가 법적 근거를 상실
- 트럼프 행정부는 CIT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동시에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한 ‘플랜 C’ 관세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세 정책의 법적 형태는 바뀌더라도 대외 압박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

■ (5.18) 이란전쟁으로 기업들은 비용증가, 공급망차질, 운영방식의 변화에 직면¹⁵⁾

- BBC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 미국 내 소비자와 연방정부 재정에는 부담을, 방산·에너지 등 특정 업종에는 전쟁 특수에 따른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양극화가 확대됨을 지적¹⁶⁾
- BBC는 전 세계 가계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동안,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해상 운송 차질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며, 미국을 포함한 각국 운송·제조·소비재 기업의 비용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5월 이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작용

15)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iran-war-saddles-global-companies-with-25-billion-billcounting-2026-05-18/>

16) <https://bbc.news1.kr/news/articles/cyv2q16qgjmo>

- 반면, 석유·가스 메이저와 방산기업, 일부 원자재·운송 기업들은 전쟁 특수에 따른 높은 이익이 발생하며, 전쟁이 기업·산업 간 격차와 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시
-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 전쟁 발발 후 약 3개월 동안 미국·유럽·아시아 상장사 최소 279개 기업이 전쟁에 따른 재정 충격 흡수를 위한 각종 조치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
 - 해당 기업들은 가격 인상, 생산 축소, 배당·자사주 매입 중단, 직원 무급휴직 권고, 정부 지원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규모는 최소 250억 달러(약 37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¹⁷⁾
 - 특히 항공업계의 전쟁 관련 추가 비용이 약 150억 달러로 추산되며, 맥도날드 등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도 공급망 차질과 원가 상승으로 인해 장기적인 비용 인플레이션 압박에 직면
 -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세 둔화로 인해 가격 결정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 2분기 이후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하려는 연쇄적인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이미 위축된 소비 심리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
- 이상을 종합하면, 지난 2개월 간 이란 전쟁은 미국과 글로벌 기업에 최소 수십억~수백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일부 에너지·방산 기업에는 이익을 안겨 주며 산업별·계층별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고, 이러한 비용·가격 구조 변화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심리와 통화정책, 소비·투자 결정 전반에 있어 복합적인 압박으로 작용

17) <https://www.jordannews.jo/Section-111/All/25-Billion-in-Losses-for-Global-Companies-Due-to-Iran-War-51493>



독일

(1) 거시경제·전망

■ (4.22.) 중동 지정학적 쇼크로 GDP 성장을 하향 조정 및 물가 전망 상향 조정¹⁸⁾

-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I),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5%로 하향 조정
 - 이란 전쟁 확전으로 인한 공급망 훼손과 원자재 비용 상승이 수출 주도형 제조업에 타격을 준 결과로 분석
 - 2027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1.3%에서 0.9%로 낮추며 중장기 성장 모멘텀 약화를 공식화
 - * 카타리나 라이히(Katherina Reiche)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독일 경제가 완만한 회복 경로에 있으나 외부 지정학적 충격으로 역풍이 심화됐다”고 진단
- 한편,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 여파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
 - 독일 정부는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026년 2.7%, 2027년 2.8%로 각각 상향
 - GDP 전망치 하향으로 경제 침체가 깊어짐에 따라 헌법상 규정된 ‘부채 준칙(Debt Brake)’의 경기 연동 조항이 발동
 - 이로 인해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27억 유로의 추가 차입 한도를 확보함

18) <https://www.reuters.com/business/german-economy-ministry-halves-2026-growth-forecast-raises-inflation-outlook-2026-04-22/>

* 라이히 장관은 이러한 단기적 처방에 더해 과도하게 높은 세율 인하, 에너지 비용 감축, 관료주의 타파 등 광범위한 구조 개혁(Structural Reforms)이 시급하다고 비판

■ (4.30.) 역성장 우려속 1분기 GDP는 성장, 그러나 고용 악화 및 하향 조정 리스크¹⁹⁾

- 독일 연방통계청, 2026년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고시 및 이전 분기 수정
 - 전 분기 대비 0.3% 성장하며 시장의 역성장 우려를 딛고 반등
 - 그러나 경기 지표의 불안정성도 나타나 2025년 4분기 GDP 최종 성장률 하향 수정(0.3%→0.2%)
- 일부 전문가들은 지표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하향 조정 가능성 경고
 - ING 은행의 경제분석가 카스텐 브르세스키(Carsten Brzeski)는 “이번 1분기 속보치에는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된 3월의 실질 하드 데이터(Hard Data)*가 완벽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확정치 발표 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
 - * 사실에 기반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정부나 기관이 집계·발표하는 확정된 데이터를 의미
 - 고유가 지속과 구조적 개혁 부재 상황 고려 시 이번 성장의 지속성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평가
- 실업자 300만명 돌파 및 고용 구조 악화
 - 4월 기준 실업자 수가 300만 8,000명을 기록하며 절대적 실업자 수 고착화 현상을 보임
 - * 전월 대비 단순 수치는 1만 3,000명 감소했으나, 계절조정 기준으로 4개월 연속 실업자수 300만명 이상 기록
 - 연방고용청의 다니엘 샤텐베르크(Daniel Schattenberg)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경고
 - * 전년 동기 대비 구인 건수가 5,000개 감소한 64만 1,000개 기록

19)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economy-grows-by-03-first-quarter-preliminary-data-shows-2026-04-30/>

- 전년 2월 비교 시 제조업 부문에서만 약 18만 개의 양질의 사회보장 기여 일자리 증발
 - *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에서 일자리가 일부 창출되었으나, 제조업의 일자리 손실을 전혀 상쇄하지 못하는 상태

■ (5.21.) 유럽연합 집행위, 중동 분쟁 여파로 독일 GDP 성장률 둔화 및 물가 상승 전망²⁰⁾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독일 거시경제 지표를 조정
 - 2025년 0.2%의 낮은 성장에 이어 2026년 0.6%, 2027년 0.9%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 2026년 3월 발생한 중동 분쟁 쇼크로 인한 연료 가격 급등이 경제 회복 흐름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부문별 경제 동향 및 경기 진단
 - 민간 소비 및 투자의 경우, 2026년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겠지만, 2027년에는 실질 임금 상승과 불확실성 완화로 다소 회복될 전망
 - * 물가상승률: 2025년 2.3% → 2026년 2.9% → 2027년 2.7%
 - 미국의 관세 부과, 중국과의 경쟁, 지정학적 우려로 수출 지향형 산업의 구조적 어려움이 심화되어 수출이 3년 연속 감소 후 정체 국면
 - * 경상수지 흑자 폭은 GDP 대비 4%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노동시장은 경기 침체로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나, 교육·보건 등 공공 서비스 부문의 고용 확대로 전체 실업률은 4% 안팎에서 유지될 전망
 - * 실업률: 2025년 3.8% → 2026년 4.0% → 2027년 3.9%

20)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surveillance-eu-member-states/country-pages-including-country-reports/germany/economic-forecast-germany_en

- 국방비 증액 및 세제 개편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 2025년 2월 연방 선거 이후 합의된 부채 준칙(Debt Brake) 개혁으로 공공 지출이 본격 가속화
 - * 특히 군사 장비 도입 등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대규모 공공 인프라 투자가 가용 재원을 압박
 - 가계·기업 대상 세제 혜택 조치로 인해 세수 성장은 둔화되는 반면 지출은 급증하여,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2026년 3.7%, 2027년 4.1%까지 계속 확대될 것으로 경고
 - * GDP 대비 재정수지비율: 2025년 -2.7% → 2026년 -3.7% → 2027년 -4.1%
 -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025년 63.5% → 2026년 65.8% → 2027년 68.0%

■ (5.27) 경제자문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²¹⁾

- 독일 정부의 독립 경제 자문기구인 경제자문위원회(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는 최신 정례 보고서를 통해 거시경제 전망을 수정 발표
 - 경제자문위원회는 독일의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했던 0.9%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정함
 - * 경제자문위원회는 독일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1963년에 설립된 경제학자 그룹으로, 연방 경제에너지부 장관의 추천을 바탕으로 연방 정부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5년 임기로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이는 이란 전쟁 등 중동 분쟁 쇼크 장기화에 따른 고에너지 가격 지속과 글로벌 수요 둔화가 독일 제조업 전반에 가한 충격을 반영한 결과
- 고물가 고착화 및 민간 부문 침체 진단
 - 자문위원회는 가스 및 유가 등 수입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경고

21) <https://www.reuters.com/business/german-economic-council-cuts-growth-forecast-energy-prices-bite-2026-05-27/>

- 실질 임금 회복 속도가 지연됨에 따라 가계의 민간 소비 심리 위축 지속되고 있으며, 고금리로 인한 높은 자금 조달 비용으로 인해 기업들의 설비 및 인프라 투자 부진 심화
- 재정 운용 제약 및 대내외 리스크 확산에 따른 정국 불안
 -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세수 부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헌법상 부채 준칙 규정 준수를 둘러싼 정계 내 갈등이 예산 편성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
 -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독일 경제의 구조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기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제언

■ (7.30.) 2분기 GDP 0.2% 성장한 가운데 내수 부진과 지정학적 리스크 공존²²⁾

-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독일의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8% 기록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EU 조화소비자물가지수(EU-harmonised Consumer Price Index)를 기준으로 한 독일의 7월 전년 동월 대비 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4%에서 2.8%로 상승
 - * 이러한 인플레이션율 상승은 정부의 연료 세금 감면 조치 종료와 이란 관련 지정학적 갈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물가상승이 전월 3.4%에서 7월 8.3%로 급등한 것에 주로 기인
 - 코메르츠은행(Commerzbank) 경제학자 랄프 솔빈(Ralph Solveen)의 분석에 따르면,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전망은 중동 지역의 추가적인 상황 전개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평가
- 독일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0.2% 성장
 -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2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0.2% 성장하여 로이터 예측치인 0.1% 상회
 - * 가계 소비 정체와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 분기 대비 증가한 수출이 2분기 경제 성장을 견인

22)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economy-grows-by-02-q2-preliminary-data-shows-2026-07-30/>

- 독일 경제는 2025년 두 분기 동안 정체를 겪은 후 최근 세 분기 연속 완만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1분기 성장률 역시 기존 0.3%에서 0.4%로 상향 조정
- 긍정적인 GDP 지표에 힘입어 주요 기관들은 독일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
 - 코메르츠은행 수석 경제학자 외르크 크래머(Joerg Kraemer)는 독일 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독일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6%에서 1.0%로 상향
 - 7월 초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가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연금, 세제, 노동 개혁 패키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7월 독일의 기업 경기 실사 지수(German Business Morale)도 예상보다 크게 개선
- 전문가들은 미국-이란 지정학적 갈등과 라인강 수위 저하가 향후 경제 회복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경고
 - 미국과 이란의 임시 휴전 협정 결렬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갈등으로 인해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어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줄 가능성 제기
 - 킬 세계경제연구소(IfW) 경제학자 슈테판 쿠크츠(Stefan Kooths)는 서유럽의 이례적인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낮아진 라인강의 수위만으로도 3분기 독일 GDP가 0.1%에서 0.2%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

■ (B.7.) 주요국 수요 회복 영향으로 6월 수출 예상 상회하며 반등²³⁾

- 2026년 6월 독일의 산업 생산이 자동차 및 운송 장비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소폭 상승함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독일의 6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하여 로이터(Reuters)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0.1% 증가)를 상회

23) <https://www.reuters.com/world/china/german-exports-rise-more-than-expected-june-2026-08-07/>

- * 이러한 상승은 자동차 생산(3.6%)과 항공기, 선박, 기차, 군용 차량을 포함한 기타 운송 장비 생산(8.4%)의 증가에 기인
- 6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2분기 산업 생산의 성장이 확인됨
- 독일의 6월 수출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6월 수출은 전월 대비 0.9% 증가해 로이터 설문조사 예상치(0.2% 증가)를 상회하며 5개월 연속 성장세를 기록
 - * 독일은 6월에 사상 최고치인 1,393억 유로 상당의 상품을 수출
 - 조업일수 및 계절 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의 수출은 1.3% 증가한 반면, EU 외 국가로의 수출은 0.3% 증가
- 전반적인 수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의 수출은 급감하여 무역 긴장의 여파 지속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기타 정책이 야기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6월 대(對) 미국 수출은 전월 대비 14.2% 급감
 - 독일상공회의소(DIHK)는 이러한 무역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EU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추가 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
-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 반등이 구조적 개선이 아닌 단기적인 순환적 반등일 가능성을 제기
 - 코메르츠은행(Commerzbank) 수석 경제학자 마르코 바그너(Marco Wagner)는 현재 산업 생산이 낮은 수준에서 횡보(Moving Sideways)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7월 초 메르츠 총리가 발표한 연금, 세제, 노동 개혁 패키지가 독일의 기업 입지 환경을 개선하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해 회복이 느릴 것으로 전망
 - ING의 거시 부문 글로벌 총괄인 카스텐 브르제스키(Carsten Brzeski)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중국 무역 데이터에서 7월 독일의 대 중국 양자 무역 적자가 확대된 점으로 보아 단기적 반등이 독일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가려서는 안된다고 지적

(2) 재정·예산

■ (5.7) 세수추계위원회, 2026~2030년 세수 전망치 대폭 하향 조정²⁴⁾

- 경기 침체 가속화로 인해 2026~2030년 총세수 전망치가 기존 예측 대비 875억 유로 하향 조정
 -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쇼크와 경제성장률 하락, 실업자 300만 명 기록 등 거시경제 악화가 세수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연방정부 조세수입은 2026년에는 기존 전망보다 99억 유로 줄어든 3,820억 유로, 2027년에는 101억 유로 감소한 3,950억 유로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국방비 증액과 대규모 인프라 지출을 앞두고 가용 재원이 좁아지며 재정 운용의 딜레마 심화
 - 연방정부는 1,965억 유로의 신규 차입과 GDP 대비 3.1% 규모의 국방비 증액을 골자로 하는 2027년 예산안 핵심 목표를 지난 4월 29일에 승인
 - 독일 경제연구소(DIW)와 상공회의소(DIHK)는 세금 감면 요구가 줄아진 재정적 한계에 부딪혔으며, 성장 회복 없이는 정부의 조치 조율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
- 재무장관의 증세 기조 발표와 함께 여당 연정 내부의 정책·이념 갈등 격화
 -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도발이 경제 모멘텀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며, 중산층 감세를 위해 고소득층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 이번 세수 결산은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의 보수 진영과 사회민주당 간 복지·세제 공방으로 이어져 메르츠 총리의 경제 능력 불신 여론과 극우 AfD의 지지율 역전 등 정국 리스크 고조

24) <https://www.reuters.com/business/germanys-tax-experts-cut-revenue-forecast-adding-pressure-strained-budget-2026-05-07/>

■ (6.2.) 연방고용청, 노동시장 악화로 2026년 8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적자 직면²⁵⁾

- 독일 연방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 BA)은 하반기 연방의회 예산위원회 제출 보고서에서 재정 위기를 경고
 - BA의 2026년 재정 적자는 80억 유로(약 93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초기 예산 계획상의 적자 규모인 약 40억 유로 미만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임
 - 최근 독일 거시경제 전망이 연이어 하향 조정되고, 노동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재정수지 격차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분석
- 재정 부족액 보전과 연방정부 차입 가능성
 - 실업보험료율을 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BA는 자체 재원으로 재정 결손을 메우지 못해 연방정부의 공공 차입을 통해 자금을 수급해야 하는 상황
 - 연방의회 예산위원회는 차주 회의를 소집하여 BA의 재정 전망 및 정부 지원 대책을 공식 논의할 예정
- 2030년까지의 중장기 경제·고용 전망 악화
 - 노동시장 왜곡이 장기화되면서 2030년까지 BA의 누적 부채가 약 230억 유로 규모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
 - 정부의 봄 경제 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 둔화 여파로 2030년 한 해에만 27억 유로 규모의 적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당초 정부가 가을 전망에서 2030년까지 실업자 수가 274.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현재 기준으로는 282.8만 명까지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25) <https://www.reuters.com/business/german-labour-agency-faces-over-8-blk-euro-deficit-2026-report-says-2026-06-02/>

■ (6.28.) 메르츠 연립정부, 만성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과감한 연금 개혁안 합의²⁶⁾

-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의 연립정부는 내분과 경기 정체를 딛고 복지 재정 압박을 완화할 강력한 종합 연금 개혁안을 도출함
 - 이번 조치는 국방 및 투자 부문의 '채무준칙(Debt Brake)' 완화에 이은 메르츠 정부의 가장 과감한 정책적 결단으로 평가 받음
- 근로자 세전 소득의 0.5%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2%로 확대되는 자본시장 투자형 중앙 공적 연금펀드 조성
 - 기금 적립 비용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50:50으로 동일하게 분담
 - 연간 약 3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어 현금 위주였던 독일 저축 문화에 주식 투자 문화를 이식하고 대규모 투자 자본 풀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기존 법정 최소 은퇴 연령인 67세를 기대수명 증가 추이에 맞춰 자동 상향 조정
 - 법정 은퇴 연령이 2041년에는 67.5세, 2091년에는 70세가 될 것으로 예상
 - 45년 동안 연금 기여금을 납부한 이들에게 주어지던 조기 퇴직 권한을 제한하여 숙련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함
 - * 2036년까지 1,650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반면, 신규 유입 경제활동 인구는 1,250만 명에 불과
- 2024년 기준 전체 연방 예산의 25%를 연금 적자 보전에 투입 중이며, 방치할 경우 20년 내 50%까지 폭증할 우려가 있어 이번 급여세 인상 및 보조금 통제 장치가 필수적
 -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으로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금이 증가하여 메르츠 총리의 부담 상한 공약과 배치되고, 경기 침체 속 기업 부담이 가중 가능성을 지적함
 - 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등 33개 과제가 담긴 복지국가 전반의 구조 개혁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병행 추진할 필요성 제기

26) <https://www.ft.com/content/5f8f0047-3264-4742-be44-2af5812e449a?syn-25a6b1a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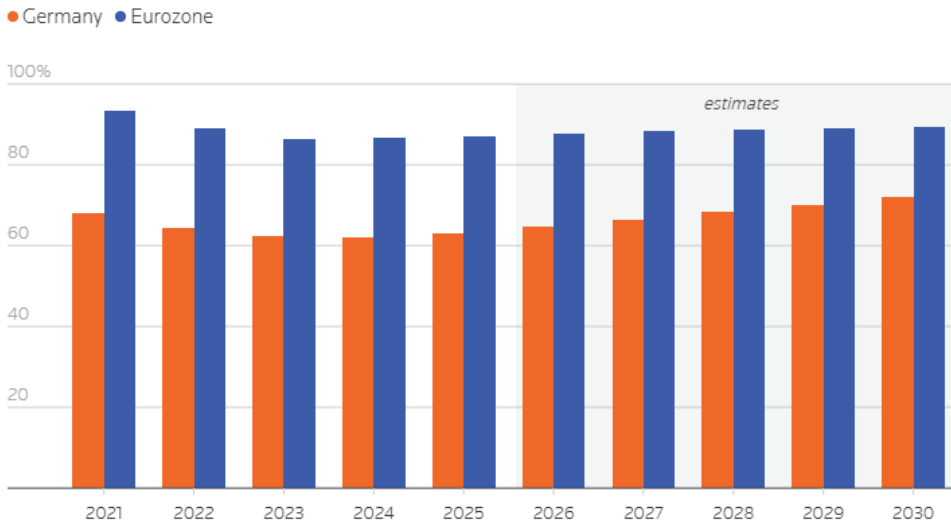
□ (7.8.) 정부, 만성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개혁안 및 2027년 확장 예산안 전격 합의²⁷⁾

- 메르츠 총리와 연립정부는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해 본격적인 첫 종합 경제 개혁 계획에 합의함
 -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경제분석가들은 이번 개혁안과 예산안이 당장 올해부터 독일의 만성적인 저성장 기조를 끌어올리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예산 조달을 위해 2,000억 유로 이상의 대규모 신규 국채를 발행하기로 합의하며 오랜 건전재정 기조를 철회*
- * 연방 적자 폭을 GDP의 0.35%로 규제하던 헌법상 채무준칙 장치를 철폐하여 대규모 확장 재정의 발판을 마련
- 대규모 국채발행 확대에도 독일의 내년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70% 미만을 유지하여 유로존 평균인 88%보다 양호함
 - 내년도 핵심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33% 급증한 1.090억 유로로 확정
 - 노후 인프라 재건을 위해 기존 ‘인프라·기후중립 특별기금(Sondervermögen für Infrastruktur und Klimaneutralität, SVIK)’에서 550억 유로를 추가로 조달하여 투입함
 - 법정 은퇴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의무 적립식 국가 연금펀드를 신설하여 재정의 지속성 확보
 - 매년 1,500억 유로의 경제 손실을 초과하는 관료주의 해소를 위해 모든 종이 행정서식을 이메일 등 디지털로 전면 대체
- 저소득·중산층 가구의 소비 진작을 위해 연간 100억 유로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
 - 부족한 재원은 연소득 28만 유로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 소득세율을 기존 4%에서 47%로 상향하는 타깃 증세로 충당

27) <https://www.breakingviews.com/columns/considered-view/germany-has-an-economic-plan-last-2026-07-08/>

그림 독일과 유로존 국가들의 평균 공공 부채 비교

Germany's public debt load remains way below the eurozone average



Note: Gross public debt as a percentage of GDP

Source: IMF | P. Briancon | July 7, 2026

 Reuters Breakingviews



영국

(1) 통화정책·물가

■ (4.22.) 3월 소비자물가 3.3%로 상승, 이란 전쟁 여파 본격화²⁸⁾

- 영국 연방통계청(ONS) 발표 결과, 영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
 - 지난 2월(3.0%)에 이어 대폭 반등한 수치로, 중동지역의 군사적 갈등 및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인한 원유 가격 급등이 유류비와 내륙 물류 비용의 폭등을 촉발함
 -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위축시켜 인한 소비 심리 회복을 지연시키고, 거시경제 전반에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를 다시 고조시킴
- 물가상승률 통제가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영란은행(BoE)의 금리 인하 정책 조기 전환 불투명
 -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당초 예상했던 상반기 내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완전히 차단된 것으로 분석하며, 고금리 기조가 최소 올해 말까지 장기화될 것이라 전망
 - 영국 국채(Gilt) 금리의 가파른 변동성 확대를 초래하여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
- 공급망 파편화, 기업의 가스·전기 에너지 비용 증가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 우려

28) <https://www.reuters.com/world/uk/uk-inflation-rises-33-iran-war-impact-begins-hit-2026-04-22/>

- 물류 마비에 따른 원자재 수입 단가 상승이 소매 물가로 전이되는 2차 파급효과(Second-round Effects)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됨
- 스타머(Starmer) 정부의 경제 안정화 계획 수립에 심각한 재정적·정책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여야간 연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됨

(2) 거시경제·전망

■ (4.30.) 영란은행, 이란 전쟁 대응 4월 통화정책 시나리오 및 경제 전망 발표²⁹⁾

- 영란은행(Bank of England, BoE)은 통화정책 리포트를 통해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시나리오와 물가상승률 전망을 발표
 -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2026년 3분기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3%로 상향 조정함
 - 공급망 마비와 유가 급등세가 장기화될 경우, 인플레이션의 조기 안정이 불가능해져 영국 경제의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가혹한 비용 부담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
- 고물가 고착화 리스크에 직면함에 따라 영란은행의 긴축 기조 장기화 불가피
 - 통화정책위원회(MPC)는 물가상승률 목표치(2.0%) 사수를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최소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유지하겠다는 긴축 강화 시나리오를 제시
 - 이에 따라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완전히 소멸되었으며, 기업들의 차입 비용 증가와 금융 시장의 자본 조달 위축을 심화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함

29) <https://www.reuters.com/business/bank-england-forecast-scenarios-april-2026-2026-04-30/>

-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이 경제 성장 둔화를 촉진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고조
 - 영란은행은 물가상승률 전망 상향 조정과 함께 영국의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며 본격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
 - 고유가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과 제조업, 서비스업의 동반 생산성 악화는 스태머 내각의 예산 수립 및 재정 운용에 심각한 제약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

■ (5.14.) 1분기 실질 GDP 0.6% 성장, 서비스 부문 주도 단기 회복세 진입³⁰⁾

- 통계청 발표 결과, 2026년 1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0.6%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
 - 중동지역 군사 갈등 및 에너지 인프라 타격에 따른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서비스 부문이 0.8% 성장하며 단기 경기 회복 흐름을 견인
 - 3월 한달 기준으로 0.3% 성장을 기록했으며, 에너지 가격 추가 급등 우려에 직면한 일부 기업들이 조기 생산 활동을 대거 앞당긴 데 따른 기저 효과가 반영됨
- G7 국가 대비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통계적 착시 및 하반기 경기 하락 리스크 공존
 - 이번 기록은 유로존(0.1%)과 미국(0.5%)를 앞질렀으나, ING 등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물가 급등기와 연례 가격 인상 시점에 맞춘 ONS의 계절조정 통계 보정방식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함
 - ICAEW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유가 충격 및 호르무즈 해협 위기 여파가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전이되는 2분기부터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와 급격한 모멘텀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
- 견고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물가 위협에 따른 고금리 긴축 압박과 여당 내 리더십 위기 확산

30) <https://giftarticle.ft.com/giftarticle/actions/redeem/21f04468-e385-453c-9c92-098ce9738472>

- 1분기 성장으로 물가 압력이 가중되면서 영란은행이 단기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6월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전격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 재무장관은 현 정부 경제 정책의 성과라 옹호했으나, 노동당 내각의 사임 압박과 야당의 리더십 위기 비판으로 국채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하고 있음

■ (5.21.) 서비스업 활동 지수,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하락세 기록³¹⁾

- S&P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 조사 결과, 영국 서비스업 활동이 급격히 위축
 - 5월 종합 산출 지수(Composite Output Index)는 48.5를 기록하며 전월(52.6) 대비 하락, 시장 예상치(51.6)를 하회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2016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영국 경제의 약 80%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침체는 하반기 GDP 성장률에 심각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독일 베렌베르크(Berenberg) 은행 등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PMI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1분기 성장률(0.6%)의 기저효과가 소멸하고 2분기 GDP 성장률이 -0.2%로 급락할 가능성 경고
-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총리의 리더십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란 전쟁 여파가 복합적 악재로 작용
 - 중동 지역의 군사적 갈등으로 인해 원가 상승, 공급망 부족, 고용 감소 등 기업들이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수준의 경영 환경에 직면
 -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과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려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고용 동결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31) <https://www.reuters.com/business/bank-england-forecast-scenarios-april-2026-2026-04-30/>

- 민간 부문 고용 지표의 지속적인 악화와 제조업-서비스업 간 경기 양극화 심화
 - 서비스업계의 급격한 감원 조치로 인해 민간 부문 급여 수급자 수가 20개월 연속 감소세
 - * 지난 4월 영국의 정기급여 수급자가 10만 명 급감했다는 영국 연방통계청(ONS)의 공식 데이터와 일치
 - 반면 제조업 부문은 국제 해운 물류 지연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혼조세
 - * 향후 추가적인 가격 인상과 공급 마비를 우려한 고객들의 '주문 앞당기기(Front-Loading)' 기저효과로 분석
 - 다만 영국산업연맹(CBI)은 제조업의 단기 반등 또한 착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 * 제조업체들의 주문 잔량이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향후 3개월간 수요가 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
- 경기 위축 징후 확산에 따라 영란은행(BoE)의 6월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은 다소 완화될 전망
 - 5월 PMI가 보여준 경제활동 둔화는 물가 상승압력 억제 요인으로 작용, 6월 통화정책 위원회에서 현재의 기준금리(3.75%)를 동결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
 - 주요 기관들은 4월 물가상승률(2.8%) 및 임금상승률(3.4%) 둔화에 이어 선행지표 악화까지 확인됨에 따라, 영란은행이 긴축을 강화할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평가

■ (6.8.) 영국산업연맹,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성장을 전망 하향 및 실업률 상승 경고³²⁾

-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CBI)은 최신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고용시장 악화를 예고

32) <https://www.reuters.com/world/uk/uk-employers-warns-slower-growth-higher-unemployment-2026-06-08/>

- CBI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생활 수준 저하가 영국의 저성장 기조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분석
 - * 루이즈 헬렘(Louise Hellem) CB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충격이 영국의 저성장 스토리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의 대외 충격이 없었다면 보다 긍정적인 경제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명
- 부문별로는 실질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 실업자 수는 상향 조정, 기준금리는 동결로 전망
 - CBI는 영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2026년 1.1%, 2026년 0.9%로 전망하며, 지난 12월 예측치 대비 각각 0.2%p, 0.6%p 하향 조정
 - 노동시장은 실업자 수가 200만 명까지 증가하여 실업률이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기존 전망치인 5%에서 0.5%p 상향 조정한 수치로, 2015년 중반 이후 10여 년 만에 최고치에 해당
 - 또한 영란은행(BoE)이 물가상승률 압력을 통제하기 위해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3.75%)를 2027년까지 동결할 것으로 전망
- CBI 대표는 기업을 대하는 영국 정부의 태도 개선을 강력 요구
 - 레인 뉴턴-스미스(Rain Newton-Smith) CBI 사무총장은 스타머 총리 정부를 향해 “기업을 단순히 자금원(a cash tap)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발언
 - 현재 전체 조세 수입에서 기업들이 기여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며, 재정 확보를 위한 과도한 기업 부담 가중이 민간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

■ (6.30.) 2026년 1분기 경기 반등에 성공했으나, 가계 재정 압박 지속³³⁾

- 영국 연방통계청(ONS),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6% 확정 발표하며 경기 회복세 확인

33) <https://www.reuters.com/world/uk/uk-economy-grew-by-06-start-2026-ons-confirms-2026-06-30/>

- ONS는 2026년 1분기(1~3월) GDP 성장률 확정치가 지난 5월에 발표된 잠정치와 동일한 전기 대비 0.6%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 이는 로이터(Reuters)가 집계한 경제 전문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정확히 부합하는 수치로, 2025년 4분기(0.2%) 대비 한층 강화된 성장 탄력을 입증함
- 전년 동기 대비로는 0.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 추정치(1.1%)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되었으나, 1인당 산출량(GDP per capita)은 전년 대비 0.7% 증가함
- 서비스 부문이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계절조정 왜곡 우려도 공존
 - 컴퓨터 프로그래밍, 도소매업, 광공업 등의 호조에 힘입어 서비스업 출하량이 0.8%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주도
 - * 제조업 등 생산 부문은 0.2%, 건설업은 0.4% 성장
 - 영국 경제가 3년 연속으로 1분기에만 유독 강한 성장세를 반복하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ONS의 계절조정 프로세스 오류 가능성을 제기함
 - * 이에 ONS는 자체 검토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왜곡은 없었으나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해명
- 이란 분쟁의 충격에 앞서 가계 가처분 소득이 선제적으로 감소
 - 노동당 정부의 핵심 경제 목표인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은 1분기에 오히려 0.8% 감소세로 돌아서며 민간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은 악화됨
 - 가계의 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1분기 가계 저축률은 전기 대비 0.7%p 하락한 8.9%를 기록해 저축 여력이 크게 위축됨
 - 이러한 가계 경제 둔화 조짐은 거대한 대외 악재인 미국-이란 간의 중동 분쟁 여파가 영국 실물 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음

- 차기 정부의 험난한 재정 환경과 통화 긴축 지속
 - 키어 스타머(Keir Starmer)의 뒤를 이어 영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앤디 번햄(Andy Burham)은 4월 GDP의 일시적 감소(-0.1%)와 비즈니스 설비 투자 위축 등이 겹치며 험난한 경제 여건에 놓임
 - 경제 컨설팅 기관들은 가계 소비 위축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더라도 단기적으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는 유지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
 - 영란은행(BoE)이 6월 기준금리를 3.75%로 동결한 가운데, 시장 투자자들은 중동발 에너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금리가 2027년 2월 내 0.25%p 인상될 가능성까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함

(3) 재정·예산

■ (6.2.) 예산책임청, 2026년 6월 예측 평가 보고서 발표 및 재정 리스크 경고³⁴⁾

- 2024-2025 회계연도 재정 예측치와 실제 실적치(Outturn)의 격차 요인을 분석
 - 과거 전망과 달리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장기 고금리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 심화
 - 예산책임청(The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은 이번 분석을 통해 지정학적 위기 등 대외 충격이 공공 재정에 미치는 연쇄 리스크를 모형에 반영해 나갈 계획
- 에너지 충격발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영국의 긴축 환경 및 국채 이자 부담을 가중

3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orecast-evaluation-report-june-2026/forecast-evaluation-report-june-2026#foreword>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생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임금 상승을 자극하며 예상보다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기조(실적치 4.9%, 전망치 3.5%)를 유발
- 고물가 여파로 실질 GDP 성장은 둔화되었으나, 세수 기반이 되는 명목 GDP는 물가 상승 착시로 인해 과거 전망치를 상회하는 왜곡이 발생
- 2024-2025년 재정 적자(순차입)는 1,520억 파운드로 과거 예측을 대폭 초과
 - 실제 재정 적자는 1,520억 파운드(GDP 대비 5.2%)를 기록하며, 과거 OBR 예상치(850억~870억 파운드)를 650억 파운드 이상 초과함
 - 물가 상승에 따른 국채 이자 및 복지 지출 급증, 그리고 2024년 가을 예산안의 정부 부처별 지출(DEL) 증액이 재정 악화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
 - 세수 측면에서는 소득세와 국민보험료 수입이 증가했으나, 폭발적으로 늘어난 공공 지출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음
- 명목 GDP 확대로 전체 국가부채 비율은 하락했으나, 실질 채무 리스크는 여전히 최고조
 - 공공부문 순부채 실적치는 GDP 대비 93.2%로 전망치보다 낮아졌으나, 이는 부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분모인 명목 GDP가 커진 '착시 효과'에 불과
 - 영란은행 착시를 제외한 전임 정부의 재정 준칙 지표인 '순 공공부문 부채(Public Sector Net Debt ex BoE)'는 팬데믹 정점을 넘어서며 매년 상승세를 기록, 영국의 구조적 부채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 (7.7.) 국가부채 관리를 위해 고강도 재정 긴축 권고³⁵⁾

- 영국 예산책임청(OBR), 국가부채 폭발적 증가 경고 및 대규모 증세·지출 감축 권고
 - 독립 재정 감시기구인 예산책임청(The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35) <https://www.reuters.com/business/bank-england-forecast-scenarios-april-2026-2026-04-30/>

- OBR)은 연례 ‘재정 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를 통해 영국의 국가부채가 사실상 모든 시나리오에서 ‘지속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상승하는 경로’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
- OBR은 인구 고령화와 보건의료(NHS) 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공공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핵심 만성 문제로 지목함
 - 부채가 위험 수준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2030년대 초까지 영국 전체 교육 예산(또는 국내 법인세 수입 총액)과 맞먹는 규모의 추가 증세나 과감한 지출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분석
 - 현재 노동당 정부가 수립한 기존 예산 계획을 차질없이 100% 이행하더라도, 장기적이지 부채 상승세를 완전히 저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이 드러남
 - 이번 결과는 차기 총리 후보인 앤디 번햄 행정부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전망
 - * 번햄 후보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기존 정부의 재정 준칙(Fiscal Rules)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로 인해 자신의 주요 공약인 공공 지출 확대(Spending Spree)를 실현할 재정적 여유가 거의 남지 않게 됨
 - OBR은 재정 건전화 조치를 미룰수록 구조조정의 비용과 미래 세대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경고
 - 만약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50년대까지 개혁을 연기할 경우, 전체 보건 예산에 육박하는 GDP의 8% 수준의 재정 수지 개선을 단행해야 하는 파국을 맞이할 수 있음
 - 진보 성향의 공공정책연구소(Th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IPPR)는 현재의 재정 준칙이 기후 변화나 고령화 대응에 필요한 장기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유연한 재정 프레임워크로의 재정 준칙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함
 - OBR은 번햄 후보가 기대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생산성 회복’이 달성될 경우, 2070년대 중반 국가 부채 비율을 기본 시나리오(GDP 대비 약

300%)보다 120%p 이상 낮출 수 있으며 필요한 건축 규모도 GDP의 1.8%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수 있다고 덧붙임

■ (7.25.) 재정여력 축소로 증세·지출절감 압박 확대³⁶⁾

-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차입비용 상승과 신규 지출정책, 성장률 전망 약화 등으로 영국 정부의 재정준칙상 재정여력이 크게 축소
 - 재정여력은 3월 공식 전망 당시 236억 파운드에서 앤디 버넘(Andy Burnham)이 노동당 대표로 공식 확정될 당시 약 100억 파운드까지 감소했으며, 향후 70억 파운드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
 - 최근 유가·국채금리 상승과 금리 인상 기대가 지속될 경우 재정여력이 추가로 11억 파운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영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03%까지 상승했으며, 정부의 연간 채무상환 비용은 1,000억 파운드를 상회
- 앤디 버넘 노동당 대표가 제시한 가계·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추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0월 예산을 앞두고 증세 또는 추가 지출 절감 압박 확대
 - 레졸루션 재단(Resolution Foundation)은 에너지요금 부가가치세 5% 인하, 버스요금 2파운드 상한, 펌에 대한 사업세 인하가 별도의 영구적 지출삭감이나 세입확충 없이 유지될 경우 2029~30년 공공지출을 약 20억 파운드 증가시킬 수 있다고 추산
 - 재무부는 해당 조치들이 기존 예산 재배분을 통해 재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으며, 존 힐리 재무장관은 재정준칙을 준수하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

36) <https://www.ft.com/content/002120c3-a62d-4da8-8ba6-bc1290c89be6>

■ (B.5.) 재정준칙 활용한 추가 차입 가능성 검토³⁷⁾

- 영국 재무부 관계자들이 정부의 재정준칙상 유연성을 활용해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추가 차입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
 - 존 힐리 재무장관은 보다 신속하고 확대된 투자를 위한 여지가 있다고 밝혔으며, 추가 재원은 인프라·주택 및 기업 지원 등에 활용될 가능성
 - 2024년 재정준칙 개정으로 정부 부채 수준을 판단할 때 공공부문 자산을 함께 고려하게 되면서 투자 목적의 추가 공공차입 여지가 확대
- 추가 차입 재원이 공공기관을 통해 투자에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영국 국채 투자자들은 새 정부의 추가 차입 가능성을 주시
 - 추가 차입은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 국가부기금(National Wealth Fund), 국가주택은행(National Housing Bank) 등 공공기관을 통해 집행될 수 있으며, 일부 재원은 지방정부에 배분될 가능성
 - 레졸루션 재단(Resolution Foundation)은 국가부기금 규모를 확대할 경우 2031년까지 연간 90억 파운드의 추가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
 - 영국 국채금리는 G7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재무부는 구체적인 재정정책 결정은 공식 재정발표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

37) <https://www.reuters.com/business/finance/uk-treasury-working-scope-extra-borrowing-times-says-2026-08-05/>



프랑스

(1) 거시경제 · 전망

■ (4.21.) 중동 위기 여파로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및 60억 유로 규모의 지출 동결 추진

- 프랑스 재무부는 중동 분쟁과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의 영향을 반영하여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 2026년 성장률 전망은 기존 1.0%에서 0.9%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은 기존 전망치 1.3%보다 높은 평균 1.9% 수준으로 전망
 - 프랑스 정부는 유가가 5월 말까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유지한 뒤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가정
- 세바스티앙 르코르뇌 총리는 중동 위기가 프랑스 공공재정에 미치는 비용이 최소 60억 유로에 달할 수 있다며, 재정적자 목표 유지를 위한 지출 동결 방침을 밝힘
 - 프랑스 정부는 2026년 공공재정 적자 목표인 GDP 대비 5%를 유지하기 위해 약 60억 유로 규모의 지출 동결을 추진하며, 이는 국가 부문 약 40억 유로와 사회보장 부문 약 20억 유로로 구성
 - 주요 재정 부담 요인으로서는 성장률 전망 하향, 부채 이자 부담 증가, 물가 상승, 해외 군사작전 비용 확대가 제시되었으며, 부채 이자 부담의 추가 비용은 중간 시나리오 기준 36억 유로 이상으로 추산되고 해외작전 비용은 2026년 10억 유로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

■ (7.7.) 성장률 전망 하향 속 추가 지출 절감 및 국가부채 확대 우려

- 프랑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0.9%에서 0.7%로 하향 조정하고, 재정적자 목표 달성을 위해 30억 유로 규모의 추가 지출 절감을 추진³⁸⁾
 - 연초 1.0%였던 성장률 전망을 지난 4월 0.9%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특별법 적용 등에 따른 예상보다 부진한 연초 경제 여건과 국제정세의 영향을 반영하여 다시 0.7%로 조정
 - 성장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로 2025년 GDP 대비 5.1%였던 재정적자를 2026년 5.0%로 낮추려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정부는 9월까지 국가 부문 20억 유로와 사회보장 부문 10억 유로 등 총 30억 유로를 추가로 절감할 계획이며, 지방정부 지출도 당초 계획보다 20억 유로 초과할 가능성 제기
- 정부의 평균 차입금리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이른바 ‘눈덩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³⁹⁾
 -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2026년 1분기 3조 5천억 유로를 넘어 GDP 대비 117.5%에 도달
 -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25년 660억 유로에서 2029년 약 1,000억 유로로 증가하여 교육·국방 예산을 넘어 정부의 주요 지출항목으로 부상할 가능성
 - OECD는 별도의 재정건전화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프랑스 국가부채가 2050년 GDP 대비 203%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

38)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6/07/07/finances-publiques-la-perspective-d-une-baisse-du-deficit-s-eloigne-de-nouvelles-economies-decidees_6721523_823448.html

39) <https://www.reuters.com/business/frances-debt-burden-risk-snowballing-ahead-2027-election-2026-07-07/>

(2) 통화정책·물가

■ (6.8.) 금리 상승으로 재정 여력 축소 우려⁴⁰⁾

- 르몽드는 인플레이션 재상승, 국가 재정적자 확대, 중앙은행의 긴축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산업국가 전반의 차입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재정 운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
 - 프랑스 재무청(Agence France Trésor)은 6월 4일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2036년 만기(10년물) 국채 92억 유로를 발행했으며, 이때 투자자들이 요구한 금리는 3.8%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5월 19일 5.2%에 근접했으며, 영국은 5.8%, 일본은 4.0%까지 상승하는 등 주요 산업국 전반에서 장기금리 상승세가 나타남
- 금리 상승은 프랑스의 이자비용 증가와 성장 둔화를 동시에 유발해 재정적자 감축 경로를 제약할 가능성 존재
 - 중동 전쟁에 따른 성장 둔화와 세수 감소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국가채무 이자비용을 추가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프랑스의 2026년 성장률 전망은 연초 1.1%에서 0.6%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재정적자를 약 0.3%p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프랑스의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21년 GDP 대비 1.1%(360억 유로)에서 2026년 2.4%(740억 유로)로 증가하고, 2029년에는 GDP 대비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40) https://www.lemonde.fr/economie/article/2026/06/08/l-envolee-des-taux-d-interet-etouffe-les-marges-de-man-uvre-budgetaires-des-pays-industrialises_6699419_3234.html

그림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Des taux d'intérêt au plus haut depuis 2008

Evolution du taux obligataire français à dix ans e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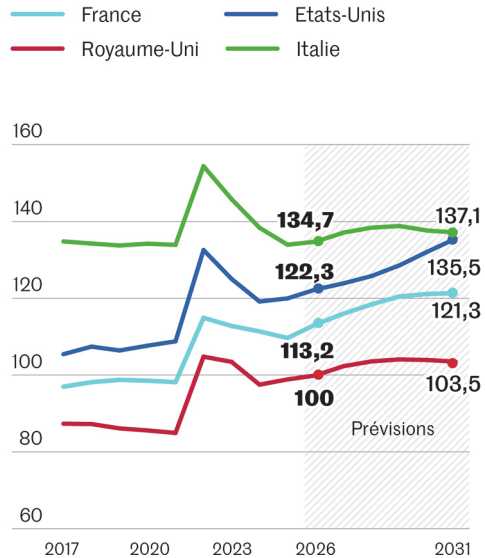


Source : Banque de France • Infographie Le Monde

그림 주요국 공공부채 비율 전망

Une dette publique en forte hausse

Evolution de la dette publique, en % du PIB



Source : FMI • Infographie Le Monde

(3) 재정·예산

▣ (4.22.) 재정감시기구,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변동에 따른 적자 감축 목표 차질 우려 제기

- 프랑스 재정감시기구는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금리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2029년까지 공공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낮추려는 정부 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다고 평가
 - 중동 분쟁으로 유가와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프랑스와 유로존의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확대
 - 재정감시기구는 순기초지출 경로가 유지되더라도 경제 상황, 금리 추이, 성장에 따른 세입 반응에 따라 실제 적자 감축 폭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

■ (5.6.) 정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 검토

- 세바스티앙 르코르뇌 총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프랑스 경제 지원의 규모와 차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프랑스 정부는 다음 주 초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유가 상승과 경제적 파급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지원보다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
 - 다만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부담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대상 보편 지원 보다는 피해 업종과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한 표적 지원 방식을 유지할 방침
- 기존 지원책의 재정비용이 이미 수억 유로 규모에 이르는 가운데, 추가 지원 확대의 구체적 비용은 아직 제시되지 않음
 - 현재까지 발표된 지원책 비용은 약 3억 8천만 유로로 추산되며, 에너지 수표 확대와 긴급 유류대출을 포함할 경우 약 4억 7천만 유로로 증가

■ (5.21.) IMF, 프랑스 재정위험 확대 및 중기 재정건전화 지연 우려 제기⁴¹⁾

- 국제통화기금(IMF)은 프랑스의 재정적자 감축이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높은 국가부채로 인해 향후 시장 압력과 외부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평가
 - 프랑스의 2025년 공공재정 적자는 GDP 대비 5.1%로 낮아졌으나, 현재 정책만으로는 2029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낮추려는 정부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
 - IMF는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부채 수준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며, 향후 더 큰 폭의 지출 삭감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경고
- IMF는 고령화, 국방 지출 확대, 에너지 전환 비용 등이 이미 높은 프랑스 공공지출 부담을 추가로 압박할 것으로 분석
 - 프랑스의 공공지출은 2025년 GDP 대비 57.5% 수준으로 집계

41) <https://www.reuters.com/business/finance/france-faces-rising-fiscal-risks-imf-warns-2026-05-21/>

- 2026년 성장률은 지정학적 긴장과 2027년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0.7%에 그칠 것으로 전망
- IMF는 연금제도, 실업급여, 보건·교육 지출 효율화 등을 포함한 다년도 재정전략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시

■ (5.29.) 1분기 경기 위축 및 중동 전쟁 비용 확대로 재정적자 감축 난항

- 프랑스 통계청(INSEE)의 최종 집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1%로 나타나 기존 예비치였던 0.0%를 하회⁴²⁾
 - 수출은 전분기 0.9% 증가에서 1분기 3.5%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항공 부문 수출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 프랑스 성장의 전통적 동력인 가계소비도 에너지 소비 감소 영향으로 전분기 0.3% 증가에서 1분기 0.2% 감소로 전환
 - 2026년 1분기 실업률은 8.1%로 상승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프랑스의 1분기 공공재정 적자는 GDP 대비 5.1%로 유지되었으며, 중동 전쟁 장기화로 2026년 재정적자 목표인 GDP 대비 5.0% 달성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⁴³⁾
 - 2026년 1분기 세입은 40억 유로 감소한 반면, 공공지출은 20억 유로 증가
 - 중동 전쟁 관련 비용은 당초 40억 유로에서 60억 유로로 상향되었으며, 향후 100억 유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
 -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3.2%에서 3.6%로 상승했으며, 5월 중순에는 4%에 근접해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
 - 프랑스 정부는 전쟁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동일 규모의 지출 절감으로 상쇄한다는 방침 아래, 약 62억 유로 규모의 절감 조치를 제시

42) <https://www.reuters.com/business/french-economy-shrank-by-01-first-quarter-2026-05-29/>

43)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6/05/29/budget-la-guerre-stoppe-la-baisse-du-deficit-et-complique-la-tache-de-sebastien-lecornu_6694702_823448.html

■ (6.25., 6.30.) 국가부채 확대 우려 속 지출 감축·연금개혁 필요성 제기

-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은 국가부채와 이자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시장 신뢰와 정부의 재정정책 여력이 제약될 수 있다고 경고⁴⁴⁾
 -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2026년 중 1,600억 유로 이상 증가하여 3조 6천억 유로, 즉 GDP 대비 약 118.5%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신규 국채의 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라 2026년 약 774억 유로로 증가할 전망이며, 회계감사원은 정부의 재정적자 목표인 GDP 대비 5.0% 달성도 불확실하다고 평가
- OECD는 국가부채를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지출 감축과 중단된 연금개혁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권고⁴⁵⁾
 - 프랑스의 2026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약 5%, 국가부채는 약 11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 안정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GDP 대비 누적 3%p 규모의 재정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법정 퇴직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2023년 연금개혁을 재개하고, 장기적으로는 퇴직연령을 기대수명과 연계할 것을 제언

■ (7.6.) 방위비 확대에 따른 재정 운용 부담 가중⁴⁶⁾

- NATO 회원국은 2035년까지 방위·안보 관련 지출을 GDP 대비 5%로 확대하기로 합의
 - 핵심 군사비를 GDP 대비 3.5%, 안보 관련 지출을 1.5%까지 확대할 계획
 - 유럽 NATO 회원국과 캐나다는 2025년 방위비를 전년보다 실질 기준 900억 달러 확대했으나, 국가별 재정 여건에 따라 증액 속도에는 차이 발생

44) <https://www.reuters.com/business/finance/frances-rising-debt-burden-threatens-market-confidence-audit-office-says-2026-06-25/>

45) <https://www.reuters.com/world/france-faces-debt-drift-without-spending-cuts-pension-reform-oecd-says-2026-06-30/>

46)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nato-defence-push-already-strains-europes-budgets-2026-07-06/>

- 독일과 북유럽·동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인 증액에 나선 반면, 프랑스·영국·이탈리아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로 지목
- 프랑스는 현재 GDP 대비 약 2%인 방위비를 2030년까지 2.5%로 확대할 계획
 - NATO 회원국은 2035년까지 핵심 군사비를 GDP 대비 3.5%로 확대하기로 합의
 - 프랑스는 방위비 확대와 유로존 재정규칙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의 재정적자 감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예산 과제에 직면

■ (7.16.) 중장기 재정악화 우려 속 2027년 지출 억제 추진

- 프랑스 정부가 의뢰한 독립보고서*에서는 정책당국이 지출을 신속히 억제하지 않을 경우 프랑스의 공공재정이 향후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⁴⁷⁾
 - * 재무장관의 의뢰로 경제학자 4인이 작성한 보고서로, 2027년 예산 논의를 앞두고 프랑스 공공재정의 중장기 경로를 제시
 - 재정적자는 2026년 GDP 대비 5.0%에서 2030년 약 7%로 확대되고, 공공부채는 같은 기간 GDP 대비 118%에서 13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저금리 시기에 발행된 국채가 더 높은 금리로 차환되면서 2026년 780억 유로에서 2030년 1,240억 유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누적 1,260억 유로 규모의 재정 긴축이 필요하며, 광범위한 지출 삭감보다 선별적 구조개혁과 일부 복지급여·연금의 자동 물가연동 방식 재검토를 권고
- 프랑스 정부는 국방비와 차입비용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2027년 대부분의 공공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지출한도를 제시⁴⁸⁾

47) <https://www.reuters.com/business/france-faces-debt-surge-unless-spending-curbed-report-says-2026-07-15/>

48) <https://www.reuters.com/business/france-flags-2027-budget-squeeze-defence-debt-costs-surge-2026-07-16/>

- 2027년 국가 및 정부기관 지출을 7,084억 유로로 설정하고, 대부분 부처의 지출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할 계획
-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26년 648억 유로에서 2027년 742억 유로로 증가하고, 국방비도 군사계획법에 따라 64억 유로 증액될 전망
- 국방비를 제외한 부처 예산은 전체적으로 15억 유로 증가하는 데 그치며, 고용정책 지출은 28억 유로 감축되고 개발원조 지출도 축소될 전망

■ (B.4.) 상반기 국가예산 적자 1,068억 유로로 확대⁴⁹⁾

- 프랑스의 2026년 상반기 국가예산 적자*는 1,068억 유로로 전년동기 대비 64억 유로(6.4%) 확대
 - * 사회보장(Sécurité sociale)과 지방정부를 제외한 국가(State) 기준
- 2025년 국가예산 적자는 전년 대비 317억 유로(20%) 감소했으나, 2026년 상반기에는 다시 적자 규모가 확대
- 프랑스 정부는 최근 2026년 GDP 대비 공공재정 적자를 전년보다 낮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
- 상반기 국가 세입이 증가했으나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
 - 일반예산 세입은 특별회계와 부속예산을 제외한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 수입은 4.2%, 소득세 수입은 2.7% 증가
 -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5.6% 증가했으며,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국가채무 이자지출은 345억 유로로 약 19% 증가
 - 군사계획 및 작전 추가비용으로 국방지출이 증가했으며, EU 분담금도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

49)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6/08/04/deja-107-milliards-d-euros-de-deficit-pour-l-etat-en-six-mois_6738216_823448.html

■ (B.II.) 2027년 재정지출 절감 위해 고액 연금 물가연동 제한 검토⁵⁰⁾

- 프랑스 정부는 2027년 재정지출 절감을 위해 고액 연금의 물가연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
 - 경제부는 고액 연금의 물가연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총리실은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이 검토 단계의 가설이라고 설명
 - 각 부처가 마련한 지출 절감 방안은 8월 말 총리에게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총리의 조정을 거쳐 정부는 9월 30일 2027년 예산안과 사회보장재정법안을 제출할 예정
- 연금의 물가연동과 고령화 등으로 2027년 연금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자동 물가연동 방식의 조정을 절감 방안으로 검토
 - 전체 연금의 물가연동에 따른 추가 지출은 약 60억 유로 규모
 -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2027년 연금지출은 약 120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절반은 연금 물가연동, 나머지 절반은 고령화와 신규 은퇴에 따른 증가로 추산
 - 앞서 7월 15일 제출된 독립보고서도 물가연동 방식의 조정을 권고하며, 2027년 한시적 물가연동 중단 방안도 사전에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

50)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6/08/11/budget-2027-le-gouvernement-rouvre-le-dossier-sensible-du-gel-des-pensions-de-retraite_6744021_823448.html



일본

(1) 거시경제 전망

□ (5.19.) 내각부, GDP 1분기 속보치 성명 발표⁵¹⁾

- 2026년 1~3월 GDP 속보치 결과, 소비는 예상대로 증가하였으며 수출 증가세를 유지함
 -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5% 증가, 연율 환산 시 1차 속보치 2.1%에서 2차 1.8%로 하향 조정
 - 민간 소비는 전기 대비 0.3%로 5분기 연속 증가, 기업 설비 투자는 2차 발표에서 -0.7%로 감소 폭이 확대
 - 아울러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면서 순수출이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 기여
- 정부는 투자 및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재정’ 원칙을 준용함
 - 잠재적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위기관리 투자’와 미래 성장을 위한 ‘성장 투자’ 등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지속해서 추진
 - 국민 생활의 안정감을 확보하고, 고용과 소득을 증대시키며, 일본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 ‘강한 일본 경제’를 실현
- 단기 경제 전망으로는 고용 및 소득 여건의 개선과 정부 정책의 효과에 힘입어 향후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

51) Cabinet Office, 「Statement by Minoru Kiuchi, Minister of State for Economic and Fiscal Policy On the Release of the Quarterly Estimates of GDP for January–March 2026 (First Preliminary Estimates)」, https://www5.cao.go.jp/keizai1/260519_statement.pdf

- 주요 위험 요인으로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주의 깊게 주시함
 - 유가 안정 대책으로 연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즉각 시행하며, 원유의 대체 조달과 비축유 방출을 통해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
 - 물류 및 자재 관리는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활한 유통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 향후 재정 운용 계획으로 에너지 비용 지원과 추가 재정 조치 등을 검토함
 - 에너지 비용 지원으로서 총리는 여당에 7~9월 기간의 전기·가스 요금을 지난해 여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청
 - 추가 재정 조치 검토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재무장관에게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적 준비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
 - 정부는 중동 정세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물가 동향이 가계 및 기업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밀착 모니터링하며, 유연하고 적절한 경제·재정 운용을 지속해 나갈 방침

(2) 통화정책·물가

▣ (4.28.) 중앙은행, 통화정책 성명 발표⁵²⁾

-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 결과, 정책금리를 0.75% 동결하기로 결정
 - 정책위원회에서 찬성 6명(UEDA Kazuo 총재 포함), 반대 3명의 표결 결과에 따름

52) Bank of Japan,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https://www.boj.or.jp/en/mopo/mpmdeci/mpr_2026/k260428a.pdf; "Outlook for Economic Activity and Prices (April 2026)". <https://www.boj.or.jp/en/mopo/outlook/gor2604b.pdf>

* 반대표를 던진 3명의 위원은 물가 안정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고, 해외 경제 상황 파급 효과로 인해 일본 내 물가 상승 위험이 상당히 부풀려진 상태에서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중립 금리에 최대한 가깝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 즉 약 1.0% 수준으로 권고했으나 다수결로 부결

- 경제성장률은 2026년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부 정책이 이를 일정 부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2027년부터는 고유가 부담 완화와 소득·소비의 선순환 효과에 힘입어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
 - 중동 정세 영향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기업의 이익과 가계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책과 완화적인 금융 환경, 그리고 기업들의 높은 수익성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2.5~3.0% 범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점진적으로 상승해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사이에 물가 안정 목표 수준에 도달한 뒤, 이후에는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와 상품 가격이 주로 오르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비용 증가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 노동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임금 상승률은 임금과 물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 속에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 중동 정세의 향후 전개가 금융·외환 시장뿐 아니라 일본의 경제 활동과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존재
 - 지난 1월 발표한 경제성장 및 물가 전망(Outlook Report)과 이번 4월 전망을 비교해 보면, 2026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졌고, 소비자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은 전년 대비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는 모두 원유 가격 상승을 반영함
 - 특히 2026년 하반기에는 경제 활동에 하방 압력 위험이 크고, 물가는 상방

압력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됨

-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에 근접하고 기업들이 임금과 가격 인상에 점차 무게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이 과도하게 높아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표 1 일본 경제성장과 물가 전망

(단위: %)

	실질 GDP		소비자물가상승률 (신선식품 제외)		근원 물가상승률 (신선식품, 에너지 제외)	
	'26. 4월	'26. 1월	'26. 4월	'26. 1월	'26. 4월	'26. 1월
2026	0.5	1.0	2.8	1.9	2.6	2.2
2027	0.7	0.8	2.3	2.0	2.6	2.1
2028	0.8	-	2.0	-	2.2	-

주. 전망 수치는 중앙은행 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예측치(점 추정치) 중앙값을 나타냄

■ (6.16.) 중앙은행, 정책금리를 0.75%에서 1.0%로 인상⁵³⁾

- 중앙은행은 6월 통화정책 회의 결과, 정책금리를 31년 만에 최고 수준인 1.0%로 결정함
 -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예금금리와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각각 1.0%, 1.25%로 조정
 - 이번 결정은 정책위원회의 7대 1 찬성으로 의결
 - *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이번 회의에 불참하였으며, 1명의 반대 의견으로는 중동 상황의 영향과 관련하여 생산과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물가 상승 위험보다 크다는 의견을 표명함
- 일본 경제는 중동 지역의 상황이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부분적으로 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함
 - 원유 가격 상승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높은

53) Bank of Japan, 「Change in the Guideline for Money Market Operations」. https://www.boj.or.jp/en/mopo/mpmdeci/mpr_2026/k260616a.pdf

- 기업 수익과 고용·소득 여건의 개선 등이 경제를 전반적으로 뒷받침
- 정부의 각종 지원 대책이 계속해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 의존이 높은 원자재의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은 이전보다 감소
 - 물가 측면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신선식품 제외)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최근 2%를 밑도는 수준을 나타내고 금융 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인 상태를 유지함
 - 한편,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기업 간 거래가격에 반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 전가 현상이 소비재 가격으로 확산할 가능성 존재
 - 또한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적인 물가상승률이 향후 중앙은행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정책금리 조정 이후에도 금융 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앞으로도 경제 활동을 견고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
 - 경제 활동, 물가 및 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통화 완화 폭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중동 지역 정세가 일본 경제와 물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앙은행의 경제·물가 전망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과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
 -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화정책을 운용할 방침

□ (7.31.) 중앙은행, 정책금리를 1.0% 수준으로 유지⁵⁴⁾

- 중앙은행은 7월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 1.0% 수준으로 유지
 - 다음 회의까지 단기금융시장 운용에 대한 정책금리를 8대 1 다수결로 결정함

54) Bank of Japan,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https://www.boj.or.jp/en/mopo/mpmdeci/mpr_2026/k260731a.pdf; 「Outlook for Economic Activity and Prices」. <https://www.boj.or.jp/en/mopo/outlook/202607b.pdf>

* 우에다 가즈오 총재 포함한 8명이 찬성하였으며, 1명의 반대 의원은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은행이 해외 상황 및 금융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가격상승 위험에 대응하여 신속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판단

- 일본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하나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될 전망
 - 2026회계연도에도 성장세를 유지하지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함
 - 반면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완화적인 금융 여건, 글로벌 AI 수요 확대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함
 - 2027회계연도 이후에는 유가 상승의 영향 약화,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이 강화되면서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지수(CPI, 신선식품 제외)는 일시적으로 2%를 상회 한 뒤 점차 안정될 전망
 - 2026회계연도 하반기부터 물가상승률은 2%를 웃도는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 임금 인상의 가격 전가, 국제유가 상승,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가격상승, 엔화 약세 등이 물가 상승을 견인할 전망이며, 이후 유가 상승효과가 약화하면서 2%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임
 -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면서 임금과 물가가 함께 상승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 이에 따라 기초적 물가상승률은 2026회계연도 하반기부터 2027회계연도 사이에 물가안정 목표인 2% 수준에 도달한 후 이를 유지할 전망이다
- 경제성장률 전망은 유지되었으나, 물가상승률 전망은 일부 하향 조정
 -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은 이전 경제전망 보고서(Outlook Report)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음
 - 다만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지원 등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2026회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은 이전보다 낮아짐
- 중동 정세와 AI 수요 및 환율 변동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제시

- 중동 정세가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일본 경제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AI 수요 변화와 향후 환율 변동 역시 일본의 경제 활동과 물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위험 요인으로 제시함
- 경제성장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물가 상승 위험은 더욱 커질 가능성 있음
 -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위험은 전반적으로 균형적인 것으로 평가하지만, 물가 전망은 상승 위험이 더 큰 것으로 판단
 - 기업의 적극적인 임금·가격 인상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지속될 경우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2%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 있음
 - 따라서 물가의 과도한 상승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주의 깊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 2 일본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

(단위: %)

	실질 GDP		소비자물가상승률 (신선식품 제외)		근원 물가상승률 (신선식품, 에너지 제외)	
	'26. 7월	'26. 4월	'26. 7월	'26. 4월	'26. 7월	'26. 4월
2026	0.6	0.5	2.5	2.8	2.5	2.6
2027	0.8	0.7	2.4	2.3	2.6	2.6
2028	0.8	0.8	2.0	2.0	2.2	2.2

주. 전망 수치는 통화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예측치(점 추정치) 중앙값을 나타냄

(3) 기타

■ (5.22) 총리실, 제7차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성장력 강화와 사회보장 논의⁵⁵⁾

- 성장력 강화에 대해서 위기관리 투자·성장 투자에 관한 프레임에 대해서 구체화해 나가는 것, 기금 등 복수년도 예산에 의한 투자 촉진책을 강화하는 것, 전략 분야 전체를 포트폴리오로서 파악해 상황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예산 활용을 실시하는 것 등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짐
 -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를 쉽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년도 예산 조치액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금액이 확보되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효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제시
 -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의 관점을 근거로 재검토
 - 보조금·세제 등의 지원에 더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규제·제도 개혁,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등 종합적인 대처로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정돈해 나갈 예정
- 사회보장에 관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사회보장 부담률 목표에 대한 검토 진행, 물가·임금 상승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확보하면서 AI 등의 혁신을 활용하여 예방 의료를 추진하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짐
 - 전 세대 사회보장 부담률 목표 검토와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고령자의 정의 재검토 진행
 - 노동 공급 제약이 강해지는 가운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나 AI·로보틱스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지속 가능한 재정과 질 높은 전 세대형 사회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사회보장 개혁강화 제시

55) 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 "Meeting of the Council on Economic and Fiscal Policy".
<https://www.kantei.go.jp/jp/105/actions/202605/22keizai.html>



중국

(1) 재정·예산

■ (4.24.) 경기 부양을 위해 1분기 재정지출 집행 속도 확대⁵⁶⁾

- 중국 정부는 2026년 1분기 재정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7조 4,700억 위안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 이는 2025년 연간 재정지출 증가율 1.0%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집행을 앞당긴 결과로 분석
 - 1분기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6조 1,600억 위안을 기록
- 1분기 재정지출은 연간 예산지출의 24.9%를 차지해 최근 수년 중 가장 빠른 집행 속도를 보임
 - 중국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지출 확대, 정부채 발행, 지방정부 이전지출 확대 등을 예고
- 분야별로는 민생 관련 지출이 확대되며 내수와 사회안전망 보강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남⁵⁷⁾
 - 사회보장 및 고용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1조 4,800억 위안, 보건 지출은 12.1% 증가한 6,554억 위안을 기록
 - 교육 지출도 1분기 중 1조 위안을 초과해 주요 민생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이 확대

56)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hina-first-quarter-fiscal-spending-quickens-beijing-seeks-spur-growth-2026-04-24/>

57) https://english.www.gov.cn/archive/statistics/202604/24/content_WS69eb711ec6d00ca5f9a0aa15.html

-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정부의 핵심 자원인 토지매각수입은 감소세를 지속
 - 1분기 정부 토지매각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4.4% 감소했으며, 이는 장기화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 주요 외신은 중국 지방정부가 그간 토지사용권 매각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2021년 중반 이후 이어진 부동산 침체로 지방재정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 (6.22.) 재정부, 2026년 1~5월 재정수지 현황 발표⁵⁸⁾

- 2026년 중국 1~5월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0조 46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 일반 공공 예산은 세금 등으로 조달해 교육, 복지, 보건 등 정부의 기본 지출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중국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 세수입은 8조 2,617억 위안으로 4.4% 증가했으며, 비세수입은 1조 7,848억 위안으로 2.2% 증가
 - 중앙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4조 3,850억 위안으로 5.7% 증가했고, 지방 일반공공예산 본급 수입은 5조 6,615억 위안으로 2.7% 증가
- 같은 기간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1조 3,877억 위안으로 0.8% 증가했으며, 사회보장·고용 지출과 보건 지출은 각각 6.3%, 11.3% 증가
 - 중앙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1조 6,815억 위안으로 6.5% 증가
 - 지방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9조 7,062억 위안으로 0.1% 감소
 - 주요 지출 항목 중 사회보장·고용 지출은 2조 1,324억 위안으로 6.3% 증가했고, 보건 지출은 9,898억 위안으로 11.3% 증가
- 2026년 1~5월 전국 정부성기금예산 수입은 1조 2,51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 감소

58) https://gks.mof.gov.cn/tongjishuju/202606/t20260622_3992033.html

- 정부성기금예산은 토지매각수입 등 특정 재원을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나 도시개발 등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중국 지방정부 재정과 밀접하게 연결
- 중앙 정부성기금예산 수입은 2,042억 위안으로 10.5% 증가, 지방 정부성기금 예산 수입은 1조 476억 위안으로 23.2% 감소

■ (7.8.) 인민은행, 완화적 정책기조 유지 및 재정정책과의 조율 강조⁵⁹⁾⁶⁰⁾

-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 2분기 회의 이후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금융지원 확대 방침을 제시
 -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급은 강하고 수요는 약한 불균형, 구조적 분화,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 중국 인민은행은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통화정책·재정정책 간 조율 강화를 강조
- 중국 인민은행은 2025년 5월 이후 정책금리나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지 않았으나, 6월 말 계절적 수요에 대응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
 - 2026년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4.5~5.0% 수준으로 제시하였으나 주요 외신들은 중국의 2026년 2분기 GDP 성장률이 1분기 5.0%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

■ (7.22.) 재정부, 2026년 상반기 재정수지 현황 발표⁶¹⁾

- 2026년 상반기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2조 1,047억 위안(약 2,62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
 - 세입은 9조 7,865억 위안(약 2,12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2조 3,182억 위안으로 2.3% 증가

59) <https://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2026070818273311767/index.html>

60)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hinas-central-bank-pledges-maintain-accommodative-policy-amid-weak-demand-2026-07-08/>

61)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hinas-fiscal-revenue-expands-47-first-half-2026-07-22/>

- 중앙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5조 2,24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고, 지방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6조 8,807억 위안으로 2.7% 증가
- 주요 세수 항목 중 국내 부가가치세는 3조 8,58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법인 소득세는 2조 5,880억 위안으로 3.9%, 개인소득세는 8,982억 위안으로 13.1% 증가
- 같은 기간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4조 3,32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 중앙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2조 1,218억 위안으로 6.5% 증가했으며, 지방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12조 2,111억 위안으로 0.6% 증가
 - 주요 지출 항목 중 사회보장·고용 지출은 2조 6,360억 위안으로 7.6% 증가했고, 보건 지출은 1조 2,191억 위안으로 10.8% 증가
- 중국 재정부리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유효투자와 소비를 지원하겠다고 설명
 -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유효투자와 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⁶²⁾
 -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됐으며, 부진한 소비가 제조업과 수출 호조를 상쇄했다고 설명

□ (7.30.) 하반기 적극적 재정정책 및 집행 가속화 방침 제시⁶³⁾

- 중국 정부는 하반기 경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신규 부양책보다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가속화하는 방향을 제시
 - 중국의 2026년 2분기 성장률은 4.3%로 둔화되며,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4.5~5.0%의 하단을 하회

62) https://www.mof.gov.cn/zhengwuxinxi/caizhengxinwen/202607/t20260722_3994019.htm

63)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hinas-top-leaders-pledge-incremental-measures-support-economy-2026-07-30/>

- 중국 중앙정치국은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을 인정하고, 재정지출 집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
- 하반기 재정지출은 기존 예산에 반영된 국가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
 - 주요 지출 분야로는 수로망, 차세대 전력망, 컴퓨팅 파워망, 차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 관로망, 물류망 등을 포함하는 ‘6대 네트워크’ 사업이며, 중국 정부는 올해 해당 사업에 약 1조 달러 규모를 지출할 계획
-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와 고용 지원도 하반기 주요 과제로 제시
 - 내수 진작, 핵심 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유연근로자 및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의 권익 보장 필요성을 언급

(3) 산업·통상

■ (6.1.) OECD, 중국 중심 산업보조금 확대에 따른 시장 왜곡 우려 제기⁶⁴⁾

- OECD는 15개 주요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함.
 - OECD의 MAGIC 데이터베이스는 각국 정부가 발표한 지원액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 수령한 정부 보조금, 세제혜택,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융지원 등을 추적
 - 2024년 15개 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기업 매출 대비 1.3%, 총 1,080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
 - 중국 기업은 2005~2024년 OECD 국가 기업 대비 평균 3~8배 높은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64) <https://www.reuters.com/world/china/global-subsidies-rebound-especially-china-oecd-says-2026-06-01/>

- 중국의 산업보조금은 전략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연결되나, 생산성 및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 제기
 - OECD는 2005~2024년 시장점유율이 확대된 기업들의 점유율 상승분 중 보조금이 설명하는 비중이 전 세계 평균 22%였으며, 중국 기업의 경우 약 60%에 달한다고 분석
 - 보조금 규모가 크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불공정 경쟁우위와 과잉공급을 초래해 글로벌 시장 왜곡 및 통상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이에 따라 중국의 산업정책성 재정지원은 대내적으로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수단이나, 대외적으로는 무역 불균형과 보호무역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부각

Ⅱ. 국제기구

OECD 68

IMF 76

국제기구 재정동향은 월간 「나라재정」의 각월호의 내용을 재구조화하여 편집한 것임.



OECD

□ (4.22.) OECD 임금과세(Taxing Wages 2026) 보고서 발표⁶⁵⁾

- OECD는 「Taxing Wages 2026」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별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격차*와 순평균세율을 OECD 평균과 비교
 - * 조세격차는 개인소득세, 근로자·사용자 사회보장기여금에서 가족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총노동비용으로 나눈 지표를 의미
- 자녀 없이 평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하 ‘단신 근로자’)의 조세격차는 2025년 한국 기준 24.8%로 전년 대비 0.13%p 상승
 - 2025년 OECD 평균 단신 근로자의 조세격차는 35.1%로, 한국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
 - * 콜롬비아(0.0%), 칠레(7.5%), 뉴질랜드(20.8%), 멕시코(21.7%), 스위스(23.0%)
- 장기 추이를 보면, 한국의 평균임금 단신 근로자 조세격차는 2000년 16.4%에서 지난해 24.8%로 25년 동안 8.5%p 상승하며 한국의 조세격차가 빠르게 상승
 - 같은 기간 OECD 평균 단신 근로자의 조세격차는 36.1%에서 35.1%로 1.0%p 하락해 한국과 OECD 평균 간 격차는 축소되는 추세
- 자녀 관련 급여 및 조세상 혜택으로 인해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구의 조세격차는 2025년 한국 기준 14.0%로 단신 근로자보다 10.8%p 낮은 상황
 - 2025년 OECD 평균 조세격차는 26.2%로, 한국은 해당 가구 유형에서도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낮은 조세격차를 기록

65) OECD (2026), Taxing wages 2026: The progressivity of Labour Taxation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a5169ef-en>

- 2025년 한국의 평균임금 단신 근로자의 순 평균세율은 16.5%로 OECD 평균(25.1%)보다 낮은 수준
 - 단신 근로자의 세후 실수령액은 임금 총액의 83.5%로, OECD 평균(74.9%)을 상회
 -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기혼가구의 경우 순평균세율은 4.5%로 OECD 평균(14.7%)보다 크게 낮았으며, 실수령액은 임금 총액의 95.5% 수준

■ (5.27.) OECD, 공공재정 회복(Restoring Public Finances) 보고서 발표⁶⁶⁾

- OECD는 「Restoring Public Finances: Enabling Effective Government」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들이 고령화, 보건의료 수요 증가, 국방 지출 확대,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
 - OECD 회원국의 공공부채는 2007년 GDP 대비 73%에서 2024년 약 110%까지 상승
 -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순이자지출은 2020년 GDP 대비 1.9%에서 2025년 3.3%로 증가
- OECD는 회원국들이 2025~2026년 예산에서 지출 절감과 효율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조정 규모는 중장기 재정 압력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평가
 - 사회보장 및 보건 지출은 OECD 회원국 공공지출의 51%를 차지하며, 약 90%의 회원국이 해당 분야에서 절감 또는 효율화 조치를 추진
 - 주요 조치로는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강화, 건강보험·장기요양 지출 효율화, 급여 수준 및 수급자격 재검토, 소득·자산 기준 강화 등이 포함
 - 정부 운영 부문에서도 약 80%의 회원국이 공공부문 인력·보수 조정, 행정절차 간소화, 디지털 기술 활용, 공공조달 효율화 등을 추진

66) OECD (2026), Restoring Public Finances: Enabling Effective Government,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fbcf9161-en>.

- OECD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을 병행하고, 중기재정관리·지출검토 등 예산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세입 측면에서는 전면적인 세율 인상보다 특정 세율 인상, 과세기반 확대, 부가가치세 감면·면제 축소, 개별소비세 조정 등이 주로 활용
 - 의무지출과 조세지출은 일반 예산보다 통제와 점검이 어려운 만큼, 중기 재정전망과 지출검토 과정에 포함해 관리할 필요

■ (6.3.)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발표⁶⁷⁾

- OECD는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6 Issue 1」을 통해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차질이 세계경제의 주요 하방 요인이라고 평가
 - 에너지 공급 차질이 단기에 그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5년 3.4%에서 2026년 2.8%로 둔화된 뒤, 2027년 3.1%로 회복될 전망
 - 다만 공급 차질이 2027년까지 장기화될 경우 세계 성장률은 2026년 2.1%, 2027년 1.8%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
- OECD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나, 지원 대상과 기간을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
 -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금, 감세, 가격규제 등은 단기적으로 가계와 기업 부담을 낮출 수 있으나, 광범위하게 운영될 경우 재정 부담을 키울 가능성
 - 이에 따라 지원은 취약가계와 피해기업 중심으로 선별하고, 에너지 가격 안정 시 자동 종료될 수 있도록 일몰장치를 마련할 필요
 - OECD는 각국이 단기 충격 대응과 함께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에너지 공급 다변화, 공공부문 효율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 한국에 대해서는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중장기 재정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

67) OECD (2026),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6 Issue 1: Under Pressur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d1956f0-en>.

- 한국 정부는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GDP의 1%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유류세 인하 등 가계·기업·지방정부 대상 지원을 추진
-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6년 2.6%로 높아진 뒤 2027년 1.9%로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
- 다만 OECD는 에너지 가격 지원, 가격규제, 수출통제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취약계층·피해기업 중심의 선별지원과 지속가능한 중기 재정운용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6.30.) OECD, 2026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세 통계(Revenue Statistics in Asia and the Pacific 2026) 보고서 발표⁶⁸⁾

- OECD는 202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GDP 대비 평균 조세수입 비율이 19.7%로 전년 대비 0.3%p 상승했다고 발표
 - 이는 OECD 평균(34.1%)보다는 낮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19.3%)을 상회
 - 다만 2024년 자료가 확인되는 36개국 중 20개국은 조세수입 비율이 하락하고, 16개국은 상승하는 등 국가별 흐름은 상이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입 구조는 재화·서비스세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 38개 조사대상국 중 26개국에서 재화·서비스세가 가장 큰 세입원으로 나타남
 - 다만 최근에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등 소득 관련 세목의 중요성도 확대되는 추세
 - OECD는 비공식 부문과 과세가 어려운 부문에 대한 세원 관리가 국내재원 동원의 주요 과제라고 제시
- 한국의 경우 2024년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이 25.3%로 아시아·태평양 평균을 상회했으나, 전년 대비로는 하락⁶⁹⁾

68) OECD (2026), Revenue Statistics in Asia and the Pacific 2026: Taxing Informal and Hard-to-Tax Sec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065aa566-en>.

- 한국의 조세수입 비율은 2023년 26.9%에서 2024년 25.3%로 1.5%p 하락했으며, 이는 주로 법인소득세 감소에 기인
- 세입 구조 측면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전체 조세수입의 3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개인소득세가 20.1%로 뒤를 이음

■ (7.2.)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 보고서 발표⁷⁰⁾

- OECD는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재정·통화정책 지원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

* 매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골자로 한 국가별 검토 보고서 발표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5년 1.0%에서 2026년 2.6%로 높아진 뒤, 2027년 1.9%로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
- 소비 회복에는 재정지원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연금·보건·돌봄 지출 증가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지출 측면에서는 재정준칙 등 중기 재정운용 틀을 강화하고, 추가 연금개혁을 통해 장기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
- 세입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교정세, 배출권 경매,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해 성장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
- 법인세 구조 단순화, 거래세 중심의 부동산 과세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성장친화적 세제개편 과제로 언급

69) OECD (2026), Revenue Statistics in Asia and the Pacific 2026: Korea,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065aa566-en>.

70) OECD (2026),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b87f585-en>

- OECD는 지역 간 격차 완화와 지방정부 재정자율성 확대도 한국의 주요 과제로 제시
 -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맞춤형 정책과 거점지역 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
 -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대학 강화, 주거정책 개선 등을 위해 중앙부처 간, 지방정부 간 협력을 확대할 필요
 -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확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7.21.) OECD, 법인세 통계 2026(Corporate Tax Statistics 2026) 보고서 발표⁷¹⁾

- OECD는 「Corporate Tax Statistics 2026」 보고서를 통해 2023년 법인세 수입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
 - * 동 보고서는 OECD/G20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의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핵심 데이터 기반으로 활용
 - 2023년 기준 분석 대상 135개 관할권의 전체 세수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7.3%였으며, GDP 대비 법인세 수입 비중은 평균 3.5% 수준
 - 이는 2022년 총 조세수입 대비 17.8%, GDP 대비 3.6%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나, 코로나19 이전 및 과거 고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
- OECD는 최근 법정 법인세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거 장기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
 -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은 꾸준히 하락해 왔으나(2000년 평균 28.0% → 2019년 21.5%), 2020년부터 2026년까지는 평균 21.2% 수준에서 거의 변동 없이 유지

71) <https://doi.org/10.1787/73af6222-en>

- 이러한 법정 법인세율의 안정화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BEPS 프로젝트 등 국제적인 조세 공조가 강화되면서, 국가 간 무분별한 세율 인하 경쟁이 일정 부분 억제
- 대규모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수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연구개발 조세지원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제시
- 국가별 보고서(CbCR) 자료를 제출한 60개 지역 기준, 대규모 다국적기업은 2023년 전체 법인세 수입의 평균 44.5%를 부담
- 2025년 기준 55개 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R&D 투자가 없었을 때의 평균 실효세율 21.5%이나, R&D 조세지원을 적용하면 14.0%로 낮아지며, 이는 약 34.8%의 세금 경감 효과를 의미
- 이러한 혜택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OECD는 일부 R&D 조세지원이 이동성이 높은 무형자산을 유치하려는 경쟁과도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

■ (B.3.) OECD, 고령층 소득보장을 위한 효율적 재정정책(Efficient Fiscal Policy to Ensure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워킹페이퍼 발간⁷²⁾

- OECD는 「Efficient Fiscal Policy to Ensure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와 은퇴자 지원 수요 증가가 공공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
- 동 보고서는 고령층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 재정정책 방안을 검토
- 특히 은퇴기의 재정적 여건을 판단할 때 소득 흐름뿐만 아니라 보유자산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상당수 고령층이 주택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만으로는 노후의 재정적 안정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제시

72) <https://doi.org/10.1787/7d6550ec-en>

- OECD는 고령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기 위해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
 - 보고서는 일부 OECD 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기 재정지원의 대상을 설정할 때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
 - 이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제 지원이 필요한 고령층에게 재정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접근
 - OECD는 고령층의 재정적 후생을 평가할 때 현금소득뿐 아니라 주택 등 자산 보유 상황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OECD는 연금형 금융상품과 주택연금 등이 공적연금을 보완하고 공공재정 부담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시
 - 연금형 금융상품과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을 추가적인 은퇴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 이러한 수단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고 개인의 재정위험 관리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정보 부족, 규제상 제약, 시장 여건 등의 문제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OECD는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정보 제공, 적절한 보호장치 마련, 시장 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



IMF

▣ (4.14.) 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공개⁷³⁾

※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연 2회 발간되며, 중간 업데이트가 이루어짐

- 중동 전쟁으로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함
 -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6년 3.1%, 2027년 3.2%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세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6년 4.4%로 상승한 후 2027년 3.7%로 하락세 예상함
 - *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 하방 위험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화되는 분쟁과 지정학적 분열, 인공지능 생산성에 대한 재평가, 무역 긴장 재발은 성장세를 크게 둔화시키고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
 - 공공 부채가 늘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 경제의 취약성은 커지는 반면, 인공지능 생산성 향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실현되거나 무역 긴장이 완화된다면 경제 활동은 활발해질 수 있음
 -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적응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틀을 유지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7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Global Economy in the Shadow of War”.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6/april/english/text.pdf>; IMF Blog, “Wars Impose Lasting Economic Costs, While More Defense Spending Means Hard Choices”.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6/04/08/wars-impose-lasting-economic-costs-while-more-defense-spending-means-hard-choices>

표 1 국가 그룹별 세계 경제 전망 비교

(단위: %)

구분	'26년 4월 전망		'26년 1월 전망 차이	
	2026	2027	2026	2027
세계 경제 성장률(World Output)	3.1	3.2	-0.2	0.0
선진국	1.8	1.7	0.0	0.0
신흥·개도국	3.9	4.2	-0.3	0.1
세계 소비자물가(Consumer Prices)	4.4	3.7	0.6	0.3
선진국	2.8	2.2	0.6	0.1
신흥·개도국	5.5	4.6	0.7	0.3

-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국방비 증가의 거시경제 효과를 살펴봄
 - 전형적인 전쟁 급증기에는 국방비 지출이 2년 반 동안 GDP 대비 약 2.7% 포인트 증가하며, 이 중 약 3분의 2는 재정 적자를 통해 조달함
 - 국방력 증강은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 재정 적자는 GDP 대비 약 2.6%p 증가 및 공공 부채는 3년 이내에 약 7%p 증가하며, 특히 전시 상황에서의 공공 부채는 약 14%p 급증하고 사회복지 지출은 감소함
 - 국방비 지출의 승수 효과는 평균적으로 약 1에 가까우나, 실제 효과는 지출이 어떤 방식으로 지속되는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지,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리고 무기 수입에 얼마나 의존하는지에 따라 그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무력 충돌은 막대한 인명 피해를 넘어 심각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분쟁의 전 세계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거시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전쟁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금융 위기나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보다 훨씬 크고 지속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다른 국가로의 파급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 이러한 손실은 통화, 재정, 대외 부문 전반에서 장기적인 상처를 남기는데, 경제 회복은 대체로 느리고 불균형하게 진행되며 분쟁이 끝나 평화가 유지되더라도 주로 노동 부문의 회복이 성장을 이끄는 반면 자본축적과 생산성은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있음
-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고 부채를 재조정하며 국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제도 재건을 위한 내부 개혁이 필수적이며,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본을 회복하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만들어냄
- 결론적으로, 전쟁은 장기적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국방비 증가는 예산 운용에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는데, 이는 효과적인 정책 설계와 지속적인 평화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함
- 전쟁은 단기 충격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 손실(Economic Losses)을 초래함
- 국방비 증가는 안보 대응에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을 수반하고 특히 사회보장, 보건, 교육 등 공공지출과의 균형 문제(Spending Trade-offs)가 발생함
- 전쟁이 끝난 뒤에도 경제 회복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Policies for Recovery)이 필요함

▣ (6.2.) 국제통화기금, 지경학에 대한 재고찰⁷⁴⁾

※ IMF 『Finance & Development』 2026년 6월호는 ‘지경학(Geoeconomics)’을 특집 주제로 다루었으며, 편집장의 서신을 요약함

- 경제 정책이 곧 국가 안보가 된 세계, 강대국들의 참여로 새로운 지경학적

7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Geoeconomic Calculus』.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andd/issues/2026/06/editor-letter-the-geoeconomic-calculus>;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andd>

계산법이 시작됨

-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냉전 종식 이후 상생을 추구하던 국제 관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국가 안보 목적 달성을 위해 관세, 제재, 수출 통제 등을 적극 도입
- 경제와 안보의 결합으로 경제 정책과 국가 안보 정책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지경학적 계산법'이 자리
- 브라질, 인도, 튀르키예 등의 지역에서 지경학은 오랜 비즈니스 방식이었으나, 최근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이 흐름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면서 글로벌 파급력이 극대화
- 지경학적 권력으로서 초크포인트(Chokepoint)의 통제는 과도한 권력 행사의 부작용,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한계를 가짐
 - 금융 인프라, 첨단 기술, 핵심 원자재 등 글로벌 공급망의 요충지를 장악하는 것이 거대한 권력의 원천
 - 이러한 지경학적 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할 경우, 상대국들이 대안을 찾아 나서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존의 영향력마저 스스로 약화하는 자멸적 결과를 초래
 - 경제적 강압 조치는 전 세계적인 효율성 저하, 혁신 위축, 대외 신뢰도 상실, 나아가 국내 결속력 저해라는 비용을 수반
- 공통된 핵심은 회복력(Resilience)도 중요하지만 절제력(Restraint) 또한 필요함
 - 과도한 의존은 취약성을 낳지만, 반대로 과도한 파편화는 국제 협력이 주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
 - 가능한 한 다양화와 협력을 도모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를 연결하는 것은 공동의 약속
 - 지경학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세계에서 국가들이 안보, 성장, 영향력을 추구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
 - 정책 입안자들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세계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사고방식을 현실 경험에 맞춰 발전시키고 이러한 변화하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 존재

□ (7.8.) 국제통화기금, 전쟁과 기술의 교차점에 놓인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⁷⁵⁾

※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연 2회 발간되며, 중간 업데이트가 이루어짐

- 기술 분야의 성장세가 전쟁의 여파를 상쇄하면서 성장은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별로 불균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6년 3.0%, 2027년 3.4%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2026년 4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와 대체로 동일한 수준
 - 경제전망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에너지 수출국과 글로벌 기술 가치 사슬에 긴밀하게 통합된 경제권(호르무즈 해협에 에너지 수요를 의존하는 국가 포함)은 전망이 상향 조정된 반면, 인공지능 기반 활동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원자재 수입국은 하향 조정
- 세계 물가상승률은 꾸준한 하락세를 멈추고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함
 -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025년 4.1%에서 2026년 4.7%로 상승한 후 2027년에는 3.9%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
 - * 2026년 상승은 주로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에 기인
 - 물가상승률 또한 국가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환율 전가 효과, 서비스 물가 상승 지속, 노동시장 상황, 국가별 특수 요인의 중요성 증대 등의 차이를 반영
 - 근원 물가상승률은 주요 경제국에서 점진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 영국은 2027년 중반, 일본과 미국은 2027년 말, 유로 지역은 2028년에야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위험 요인은 지난 4월 발표보다 균형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하방 위험이 큼

7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Global Economy in Crosscurrents of War and Technology".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6/update/july/english/text.pdf>

-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성장률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은 낮아짐
- 또한 인공지능 관련 자본 지출이 예외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거나 금융 여건이 더욱 완화되어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이 예상보다 부진할 수도 있음
- 전쟁은 인플레이션 억제, 경제 활동 지원, 취약 계층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의 기로를 제시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현재 충격에 대하여 즉각적인 영향을 관리하는 동시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임
- 이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동향, 재정 여력, 금융 취약성 등의 차이를 반영한 각국의 맞춤형 대응책과 더불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임

표 2 국가 그룹별 세계 경제 전망 비교

(단위: %)

구분	'26년 7월 전망		'26년 4월 전망 차이	
	2026	2027	2026	2027
세계 경제 성장률(World Output)	3.0	3.4	-0.1	0.2
선진국	1.7	1.8	-0.1	0.1
신흥·개발도상국	3.8	4.5	-0.1	0.3
세계 소비자물가(Consumer Prices)	4.7	3.9	0.3	0.2
선진국	3.0	2.4	0.2	0.2
신흥·개발도상국	5.8	4.8	0.3	0.2

■ (7.30.) 국제통화기금, 불균형 심화 속에서 재균형을 강조한 대외 부문 보고서 발표⁷⁶⁾

※ External Sector Report(ESR)는 IMF가 세계 주요 국가의 경상수지, 환율, 자본흐름 및 글로벌 대외 불균형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연례 보고서

- 2026 대외 부문 보고서는 2025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30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전 세계적인 경상수지 불균형의 확대 원인과 그에 따른 경제·금융시장 리스크를 진단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되던 전 세계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의 파편화와 무역 장벽 강화 속에서 불균형이 고착화되는 양상
 - 지속적인 대외 불균형은 국가 간 불균등한 성장 패턴을 시사하고 무질서한 조정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국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동시적인 정책 조치 필요
 - 한 국가의 재균형 노력만으로도 전 세계 경상수지 적자를 의미 있게 줄일 수 있지만, 금융시장에 위험을 초래하고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특히 중국과 미국이 불균형 확대를 주도
 - 중국은 내수 부진과 높은 저축률, 그리고 투자 약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2025년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경상수지 적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무역 정책 변화 속에서도 구조적인 저축 부족과 재정적자가 대외적자의 주원인으로 지목
 - 한국은 외환건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원화 약세와 자본 유출 확대를 주요 과제로 지적하며,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대외충격에 대응할 능력이 있지만, 환율 변동성과 자본흐름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

76)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esr/2026/english/text.pdf>

-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국은 내수 확대, 구조개혁, 환율 유연성 강화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함
 - 중국과 같은 흑자국은 내수 진작과 임금 상승을 통한 소비 확대가 요구
 - 미국과 같은 적자국은 재정적자 축소와 경쟁력 강화로 대외 수지 개선 필요
 - IMF는 다자 협력체계를 통한 무역·금융 정책의 글로벌 조율을 촉구하며, “균형 회복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의 재편”임을 강조

Ⅲ. 현안분석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CEFP) 사례조사	86
- 김민경 부연구위원	
확장재정 기조 국가 동향 사례	89
- 서영빈 부연구위원	
초과세수 재정운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	95
- 김명규 연구위원	
대만 반도체 호황과 재정정책 변화	107
- 김명규 연구위원	
대만 인구대책 신전략-가족지원편	115
- 김명규 연구위원	
OECD 경제전망 및 한국 재정정책 제언	126
- 김명규 연구위원	
일본 특별 예산 체계의 특징	131
- 김명규 연구위원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6 내용 및 시사점	136
- 김민경 부연구위원	
2026-2027년 유로존 재정 기조 평가	148
- 김명규 연구위원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AI 활용 동향-집행적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154
- 서영빈 부연구위원	
재정·통화정책의 비동조화 사례 분석	163
- 김명규 연구위원	
대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양극화 지표 영향 분석	175
- 김민경 부연구위원	
금리 상승에 따른 주요국의 재정부담과 대응	190
- 서영빈 부연구위원	

현안분석은 당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으로 현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CEFP) 사례 조사

- 한국 국가재정전략회의와의 비교

김민경 부연구위원

작성시점 : 2026.5.15.

(1)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CEFP) 비교

■ 한국은 예산편성 전 재정기조와 지출한도를 조율하는 고위급 전략회의이며 일본은 법정 경제재정 자문회의를 통해 경제·재정·예산방침을 조사·심의하는 제도화된 절차

- (회의 성격) 한국은 별도 법률로 설치된 상설 법정위원회가 아니라 대통령 주재로 중기 재정운용 방향과 차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조율하는 고위급 전략회의 성격
 - 한국은 예산편성 전 행정부 내부에서 재정기조와 지출 우선순위 등 재정전략 조율 중심
 - 일본은 법정 자문회의를 통해 경제운영 기본방침과 재정운영 기본 및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조사·심의하는 경제재정정책 심의 중심
- (제도 근거) 한국은 회의체 자체의 별도 법률상 설치근거 부재하나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예산안 편성지침 및 지출한도 등 후속 예산절차와 연계
 - 한국은 국가재정법상 예산편성 절차와 결합하여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전략회의 방식
 - 일본은 「내각부설치법」상 회의체의 설치와 구성 및 조사·심의 권한이 명시된 법정 자문회의 방식

■ 한국은 행정부와 재정당국 중심의 내부 조율 방식이며 일본은 총리와 관계각료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화된 경제재정 조정 방식

- (참석 구조) 한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그리고 재정당국과 여야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예산편성 방향과 재정운용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방식
 - 한국은 행정부와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부처별 요구와 국가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내부 전략조정 구조
 - 일본은 총리와 관계각료 및 관계기관장과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경제재정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법정 협의체
- (민간 참여) 한국은 필요에 따라 민간전문가나 정책수혜자가 참여할 수 있으나 민간위원 비율과 임기 및 정족수 등이 법률상 고정된 위원회형 구조는 아님
 - 한국은 민간참여가 사안별로 활용되는 탄력적 회의 운영 방식이나 일본은 민간전문가 참여와 임기 등이 법률상 규정되어 외부 전문성과 시장 관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

■ 한국은 회의 결과가 지출한도와 편성지침으로 이어지고 일본은 회의 결과가 각의결정 방침으로 전환되어 정부 전체의 경제재정정책 기준으로 작동

- (예산 연계) 한국은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 편성지침으로 이어져 영향을 미치는 회의
 - 한국은 지출한도와 편성지침을 통해 부처 예산요구를 사전에 제약하는 예산통제 중심
 - 일본은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과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는 내각방침 중심
- (정책 영향력) 한국은 회의 자체가 법정 의결기관은 아니나 회의 결과가 예산 편성지침과 지출한도로 전환되면서 행정부 내부 예산통제 수단으로 기능
 - 한국은 후속 예산절차와 결합하여 실무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예산편성 관리 구조

- 일본은 骨太方針* 각의결정된 경제재정 방침으로 전환될 때 정부 전체의 예산·재정정책 기준

*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각의결정되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으로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주요 경제재정개혁의 상위 정책방향

표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경제재정자문회의 비교 표

항목	한국 국가재정전략회의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CEFP)
성격	대통령 주재 고위급 재정전략회의	총리 주재 법정 경제재정 자문회의
법적 설치·운영 근거	- 회의체 자체의 별도 법률상 설치 근거는 부재 - 국가재정운용계획·예산안 편성지침·지출한도 등 후속 절차는 「국가재정법」 근거	- 「내각부설치법」상 내각부 중요정책회의로 설치 - 경제운영 기본방침·재정운영 기본·예산편성 기본방침 조사·심의 권한 명시 - 회의 자체는 자문·조사심의 기능 - 骨太方針 각의결정 문서 전환 시 정부 경제재정운영 기준
참여원	대통령(주재) 국무총리 국무위원 재정당국 여야 관계자 필요 시 민간·현장 관계자	내각총리대신(주재) 내각관방장관 경제재정정책 담당대신 관계 각료 관계기관장 민간전문가
빈도	- 통상 연 1회 내외,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 개최	- 연중 수시 개최('25년 15회 개최) - 거시경제·재정운영·예산편성·개혁과제별 반복 논의
전망기간	- 5회계연도 이상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 활용 - 예산연도와 중장기 경제재정 시산 병행
예산편성 영향경로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중기 재정운용 방향·차년도 예산편성 기초 조율 → 재정총량·분야별 자원배분·부처별 지출 한도 방향 설정	경제재정자문회의의 논의 →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骨太方針) → 예산편성 기본방침 → 예산요구 기준 → 재무성 예산편성 → 정부 예산안
제도적 의의	- 회의 자체에서의 법정 의결보다 예산편성 전 재정총량·지출한도·자원배분 우선순위 조율 - 부처 예산요구 전 총량관리와 지출한도 설정 기능	- 경제정책·재정운영·예산편성 방침을 총리 주도로 통합 조정하는 법정 회의체 - 경제전망·재정전망·예산방침의 내각 차원 통합 기능 - 법정 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각의결정 문서로 전환되는 내각 차원의 정책기준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자료 출처 : Council on Economic and Fiscal Policy : Economic and Fiscal Policy - Cabinet Office Home Page

확장재정 기조 국가 동향 사례

서영빈 부연구위원
작성시점 : 2026.5.15.

1. 일본

(1) 규모

■ 2026년 총예산은 ¥122조이고, 재정지출은 ¥122.3조로 전년대비 ¥7.1조(6.2%)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

- 사회보장지출 증가, 방위력 강화 및 국채비용 확대 등의 영향
- 일반세출은 ¥70.2조, 지방교부세 등은 ¥20.9조 규모

■ 재정수입은 ¥92.7조로 전년대비 ¥6.2조(7.1%) 확대, 국채발행 수입은 ¥29.6조로 전년대비 ¥0.9조 증가

- 세출이 세입을 초과함에 따라, 자금 부족분은 필요시 재무성 증권 발행으로 보전

표 1 '26년도 일본 예산안

(단위: ¥조, %)

구분	2025 예산	2026 예산(B)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 재정지출	115.2	122.3	+7.1	+6.2
○ 일반세출	68.1	70.2	+2.0	+3.0
○ 지방교부세 등	18.9	20.9	+2.0	+10.6
○ 국채비용	28.2	31.3	+3.1	+10.8
□ 재정수입	86.6	92.7	+6.2	+7.1
○ 세수입	77.8	83.7	+5.9	+7.6
○ 기타수입	8.7	9.0	+0.3	+3.0
□ 국채발행	28.6	29.6	+0.9	+3.3
□ 국채의존도(%)	24.9	24.2	△0.7%p	-

출처: 일본 재무성

(2) 주요 내용

■ 고령화 대응 및 물가 반영 중심의 사회보장지출 확대

- 사회보장지출은 ¥39.1조로 전년 대비 ¥0.8조 증가
 - 의료·돌봄 분야 임금 인상 및 저출산 대응 정책 병행 추진 등
- * 의료수가(+3.09%), 간병수가(+2.03%) 및 장애복지수가(+1.84%) 인상 반영

■ 방위력 강화 및 경제안보 대응 투자 확대

- 방위력 강화 예산은 ¥8.8조로 전년 대비 ¥0.3조 증가
- 반도체·AI 지원 예산은 ¥1.2조로 전년 대비 ¥0.9조 증가 및 녹색전환(GX) 관련 투자도 ¥0.7조 규모로 확대

■ 세수 확대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 병행 관리 추진

- 세수는 ¥83.7조로 사상 최대 규모 기록, 신규 국채 발행은 2년 연속 ¥30조 이하 유지
- 기초재정수지(PB)는 28년 만에 본예산 기준 흑자 전환

■ 금리 상승에 따른 국채 이자비용 증가 본격화

- 국채비용은 ¥31.3조로 전년 대비 ¥3.1조 증가, 이자비용은 ¥13.0조로 전년 대비 ¥2.5조 증가
- 예산상 금리 가정을 2.0%→3.0%로 상향 조정

2. 독일

(1) 규모

▣ 재정지출은 €5,245억으로 전년대비 €313억(6.3%) 증가로, 재정준칙의 예외 대상인 국방비 지출 증가 등의 영향

- 재정수입의 감소는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가 1.0%로 조정됨에 따라 전년대비 €14억 감소한 €3,872억 규모

* 독일 정부는 '26년 GDP 전망치를 '25.10월 1.3%에서 '26.1월 -0.3%p 하향조정

▣ 재정수지는 €981억 적자로 전년대비 €327억 적자폭 확대, 순차입은 €980억으로 전년대비 €311억 증가

-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3.9%, 정부부채비율은 64.8%

표 2 '26년도 독일 예산안

(단위: €억, %)

구분	2025 예산	2025 결산(잠정)(A)	2026 예산(B)	전년대비	
				증감 (B)-(A)	증감율(%) (B)-(A)/(A)
□ 재정지출	5,025	4,933	5,245	+313	+6.3
□ 재정수입	4,206	4,279	4,264	-15	-0.3
○ 세수입	3,868	3,886	3,872	-14	-0.3
○ 기타수입	338	393	392	-1	-0.4
□ 재정수지	-819	- 654	- 981	-327	-
○ 순차입	818	669	980	+311	-

출처: 독일 연방재무부

(2) 주요 내용

■ 대내외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 및 안보 예산의 대규모 확대 편성

- 국가 재정 준칙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국방 및 안보 분야에 '25년 결산 대비 €232억 증가한 €827억으로 편성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편성된 특별기금(€255억) 등을 포함하면 국방·안보 총지출은 €1,080억 규모에 해당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지출 확대

- 연방 예산 내 투자 지출은 €584억 규모, 단순 금융 거래를 제외한 투자 지출은 €479억 수준으로 편성
 - * 예산과 특별 기금을 합하면 총 €1,287억 규모의 투자 예상
- 재생에너지법(EEG)에 따라 연방 예산에서 €162억을 투입하여 전기 소비자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전환 지원 지속
- '디지털 협약 2.0'을 통한 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최대 €25억) 등 민생 투자 지속

■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제도 개편을 통한 제도 효율화

- 노동사회부 예산은 연방 예산의 약 37.6%인 €1,970억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사회보장기금 항목은 전년 대비 €105억 증가한 €1,588억 규모
-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부모 수당 예산은 €75억에 해당
- 시민 소득 제도를 구직자 대상 기본 소득 지원 체계로 개편하면서 전년 대비 €10억 감액한 €281억을 편성하여 복지체계 효율성 제고

3. 스웨덴

(1) 규 모

■ 재정지출은 SEK(스웨덴 크로나) 1조 5,420억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재정수입은 SEK 1조 3,750억으로 전망

- 재정수지는 약 SEK 1,670억 적자 전망
- 정부지출 상한(expenditure ceiling) 유지 및 2027년부터 균형재정목표(balance target) 도입 추진

* 2026년 GDP 성장률 2.1% 전망

■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2.4% 적자, 정부부채는 GDP 대비 35.8% 수준 전망

- 경기둔화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기조 유지
- 유럽 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채무 수준 지속

* 스웨덴은 EU역내 교역비중이 60% 이상으로 EU경기에 매우 민감한 구조

표 3 '26년도 스웨덴 예산안

(단위: SEK 십억, %)

구분	2025 예산	2026 예산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 재정지출	1,375	1,542	+167	+12.1
□ 재정수입	1,304	1,375	+71	+5.4
□ 재정수지	-102	-167	-65	-
○ GDP대비 재정수지(%)	-1.4	-2.4	-1.0%p	-
□ GDP대비 부채비율(%)	35.1	35.8	+0.7%p	+5.4

출처: 스웨덴 정부

(2) 주요 내용

■ 가계 구매력 회복 및 경기부양 중심의 확장재정 추진

- 감세 및 소득지원 등을 포함한 약 SEK 800억 규모 개혁 추진
- 식품 부가가치세(VAT) 한시 인하(12%→6%) 및 근로소득세 감면 추진으로 4인 가족 기준 월 약 SEK 1,800의 가처분소득의 증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국방 및 안보 대응 투자 확대

- 국방·우크라이나 지원에 약 SEK 500억 추가 투입 추진
- NATO 가입 이후 국방비를 GDP의 2.6% 이상으로 확대, 국방력 강화 및 사회기반시설·민방위 투자 확대

■ 노동유인 강화 및 복지제도 개편 추진 및 교육·보건·치안 분야 투자 확대

- 근로연계형 복지(work-first principle) 강화, 실업·사회보장 수급요건 강화 및 근로복귀 인센티브 확대
- 학교 교육·숙제지원·교재구입 보조 확대, 의료인력 유지 및 고령층 예방접종 지원 강화
- 경찰 기술역량 강화 및 조직범죄 대응 투자 확대

■ 확장재정 기조에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 경기대응을 위한 적자재정 유지에도 정부부채는 GDP 대비 30%대 유지
- 2027년부터 기존 흑자목표(surplus target)를 균형재정목표(balance target)로 전환 추진

초과세수 재정운용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김 명 규 연구위원
작성시점 : 2026.5.18.

(1) 검토 배경

■ 2026년에는 AI·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강세가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으로 파급될 가능성 전망

- 2026년 예산안은 총수입 674.2조 원, 총지출 728.0조 원,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4.0%, 국가채무 GDP 대비 51.6%
- 세수입 여건은 최근 경제 전망치 상향 기조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
 - KDI에서는 최근 2026년 전망을 +0.6%p 상향 조정(2월 1.9% → 5월 2.5%)
- 세수 회복이 기대되더라도 재정 여건은 여전히 지출수요와 채무관리 부담 상존

■ AI·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을 결정하기 전 해외 초과세수 급증 시 재정운용 사례를 검토해 시사점 도출이 필요

- 예상(계획)보다 큰 세수입 증가(초과세수)는 국가채무 감축 기회이기도 하고, 미래 성장 기반에 투자할 기회
- 다만, 세입 증가의 성격을 잘못 판단하면 일시적 호황세입이 영구지출·감세·현금지급의 재원이 되어 이후 세수 하강기에 구조적 적자가 될 수 있어 위험 최소화 필요
 - AI·반도체발 세수 증대가 장기 세입 재원인지, 상품가격과 업황에 따른 일시적 세입 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

(2) 초과세수 유형(구조적 증가형 vs. 일시적 증가형)

□ 초과세수 유형에 따른 재정운용의 재원으로 활용의 차이

- 일시적 세수 증가 세원보다는 지속적인 세원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과세수의 유형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

□ 구조적 세수 증가형 세원

- 새로운 자원 발견, 장기 생산성 개선, 산업 경쟁력의 구조적 상승, 과세 기반의 폭넓은 확장이 가능한 세원
- 세입 증가가 여러 해 또는 여러 경기순환에 걸쳐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세원
 - 다만 구조적 세원이라도 가격과 이익률은 변동하므로, 연간 초과세입 전부를 영구세입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일시적 세수 증가형

- 주식·부동산 가격 급등, 자본이득·스톡옵션 행사, 거래대금 증가,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물가 효과, 특정 기업의 일회성 초과이익
 - 세입이 빠르게 증가하지만 하락 반전도 빠른 특징의 세원
- 유형의 세입을 경상지출로 연결하면 세입 반전 시 급격한 긴축이 불가피

표 1 세수 증가 특징

구분	구조적 세수 증가형	일시적 세수 증가형
세원 기반	생산량·고용·임금·기업 수익성이 여러 산업으로 확산	특정 품목 가격, 특정 기업 이익, 특정 자산가격에 집중
세목 구성	법인세 외에도 근로소득세, 소비세, 사회보험료 등 넓은 세목 개선	자본이득세, 증권거래세, 부동산 거래세, 스톡옵션 과세 등 변동세목 중심
지속성	가격 정상화 후에도 물량·생산성·시장점유율이 유지	주가·부동산·상품가격 하락 시 세입이 동반 급감
재정 처리	기준세수와 초과세수를 분리하고 기금·부채상환에 우선 배분	초과세수를 상시 복지, 인건비, 영구감세, 반복 현금지급에 사용
정책 위험	과도한 저축으로 필요한 투자 지연 가능성	경기순응적 지출, 재정착시, 정치적 배당 압력, 하강기 긴축

(3) 주요국의 사례

가. 구조적 세원 형성과 제도화에 성공한 사례

■ 노르웨이: 북해 유전과 정부연기금(GPFG⁷⁷⁾)

- (세입·규모) 1969년 Ekofisk 유전 발견 이후 석유·가스가 새로운 세원으로 형성
 - 2022년 에너지 가격 급등기 정부 석유수입은 1조 4,500억 NOK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
 - 1996년 첫 기금 이전 이후 2025년까지 석유활동 순현금흐름은 2026년 가격 기준 약 13조 NOK로 집계⁷⁸⁾⁷⁹⁾
- (지속성·재정상황) 유전은 장기 세원이지만 연간 수입은 가격과 생산량에 민감한 특징으로, 석유수입을 일반세입으로 보지 않고 고갈성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판단⁸⁰⁾
 - 중앙정부 예산은 석유 제외 재정수지 중심으로 관리
- (재원사용 기조) 석유수입은 GPFG으로 이전하고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예산 편입은 장기 기대 실질수익률 3% 수준에 맞추는 재정준칙을 적용⁸¹⁾
 - 핵심은 “원금 보존·수익 사용”이며, 네덜란드·영국과 달리 초과세입을 국내 상시지출로 흡수하지 않음

77)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GPFG(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은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잉여 수익을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 펀드

78) Statistics Norway(2024). “Significant and declining surplus.” <https://www.ssb.no/en/offentlig-sektor/offentlig-forvaltning/statistikk/offentlig-forvaltnings-inntekter-og-utgifter/articles-for-general-government-revenue-and-expenditure/significant-and-declining-surplus>

79) Norwegianpetroleum.no(2026). “The government’s revenues.” <https://www.norskpetroleum.no/en/economy/governments-revenues/>

80) Norwegian Ministry of Finance(2022). “The Norwegian Fiscal Policy Framework.” <https://www.regjeringen.no/en/topics/the-economy/economic-policy/economic-policy/id418083/>

81)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2026). “The history.” <https://www.nbim.no/en/about-us/about-the-fund/the-history/>

■ 칠레: 구리 가격 호황과 구조적 균형규칙

- (세입·규모) 2000년대 중반 중국 수요와 구리 가격 상승으로 국영 Codelco 배당, 광산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증가
 - IMF(2008)는 2007년 명목 재정흑자가 GDP 대비 7%를 상회하고, 2008년에는 약 8%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평가⁸²⁾
- (지속성·재정상황) 2001년부터 장기 구리가격과 잠재 GDP를 반영한 구조적 재정수지 준칙을 운용했고, 2001-2007년 구조적 흑자 목표를 GDP 대비 1%로 설정⁸³⁾
 - 구리는 장기 자원이지만 2003-2008년 세수 증가는 가격 사이클 성격이 강한 특징
- (재원사용 기초) 초과세입은 경제사회안정화기금(ESSF), 연금준비기금(PRF), 부채 축소에 활용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GDP 대비 2.9% 경기부양책을 ESSF와 신규 채무로 조달(IMF, 2008)

나. 자원·상품 호황을 일반재정에 흡수한 사례

■ 영국: 북해 유전 세입과 국부펀드 부재

- (세입·규모) 1970년대 후반 북해 석유·가스 생산 확대와 고유가로 석유수익세, 법인세, 로열티가 증가
 - 북해 세입은 1979/80년부터 1984/85년까지 420% 늘어 1984/85년 120억 파운드, GDP 대비 3.4%까지 상승했으나 1991/92년에는 10억 파운드, GDP 대비 0.1%로 축소⁸⁴⁾

82) IMF(2008).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08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Chile." <https://www.imf.org/external/np/sec/pn/2008/pn0888.htm>

83) OECD(2008a). "Managing Chile's Macroeconomy during and after the Copper Price Boom."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managing-chile-s-macroeconomy-during-and-after-the-copper-price-boom_242135544660.html

84)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2014). "The rise and fall of oil and gas revenues." <https://obr.uk/>

- (재원사용 기조) 노르웨이식 국부펀드를 만들지 않고 세입을 통합예산에 흡수
 - 감세, 지출조정, 차입 축소와 결합된 일반 재정운용의 일부가 되었고, 세입 산입 후에는 안정적 재정 축으로 남지 못했다는 평가

■ 네덜란드: Groningen 가스전

- (세입·규모) 1959년 Groningen 가스전 발견 이후 1960-1970년대 가스 생산과 수출이 확대되었고, 오일쇼크로 가격이 상승하며 정부수입이 급증⁸⁵⁾
 - Groningen 가스판매 관련 수입은 정부수입 대비 1969년 1.5%에서 1982년 19%까지 상승⁸⁶⁾
- (재원사용 기조) 수입은 국부펀드에 체계적으로 격리되지 않고 일반예산, 임금, 보조금, 사회보장 지출에 흡수
 - 1970-1982년 정부지출 비중은 GDP 대비 약 44%에서 60% 수준으로 상승했고, 1979-1982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약 2%에서 6%로 확대⁸⁷⁾

■ 사우디아라비아: 1970년대 오일쇼크와 재정 팽창

- (세입·규모) 1970년대 오일쇼크와 생산·가격 상승은 석유수입을 급격히 확대
 - 1970년대 초 첫 오일붐 이후 높은 성장과 대규모 공공지출 확대
- (재원사용 기조) 추가 세입은 인프라, 보조금, 공공부문 확대, 개발계획 재원으로 연결

box/the-rise-and-fall-of-oil-and-gas-revenues/

85) Netherlands Court of Audit(2014). Use of Natural Gas Revenues: Facts, Figures and Scenarios. <https://english.rekenkamer.nl/publications/reports/2014/10/07/use-of-natural-gas-revenues-facts-figures-and-scenarios>

86) Columbia 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2017). "The Termination of Groningen Gas Production—Background and Next Steps." <https://www.energypolicy.columbia.edu/publications/termination-groningen-gas-production-background-and-next-steps/>

87)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2010). *CPB and Dutch Fiscal Policy in View of the Financial Crisis and Ageing*. <https://www.cpb.nl/sites/default/files/publicaties/download/doc218.pdf>

- 석유세입은 장기적이지만 유가 변동성이 크므로, 고유가 시기에 팽창하고 저유가 시기에 조정 압력을 받는 경기순응적 구조 형성

■ 호주: 2000년대 광산·교역조건 호황

- (세입·규모) 중국 수요와 철광석·석탄 가격 상승으로 광산기업 이익, 법인세, 주정부 로열티가 증가
 - 광산업의 로열티·세금 차감 후 영업이익은 1999/2000년 약 150억 호주달러 (GDP 대비 2.2%)에서 2008/09년 약 650억 호주달러(GDP 대비 5.2%)로 증가⁸⁸⁾
- (재원사용 기초) 호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순채무를 제거하고 흑자를 기록했으나, 초과세입의 상당 부분이 개인소득세 감세, 가족·복지 지출, 인프라 투자 등으로 환류
 - 일부는 Future Fund를 통해 장래 공무원연금 미적립부채에 대비하는 자산으로 적립⁸⁹⁾

■ 가이아나: 신흥 산유국의 개발투자 병행형

- (세입·규모) 2015년 Stabroek 광구의 Liza 유전 발견, 2019년 말 생산 개시 이후 기존에는 거의 없던 석유수입이 중앙정부 재정에 유입
 - 2024년 Natural Resource Fund(NRF) 유입은 25억 6,800만 달러, 2024년 말 기금 시장가치는 32억 4,600만 달러⁹⁰⁾
- (재원사용 기초) 석유수입은 NRF에 적립한 뒤 법정 인출한도와 예산승인을 거쳐 통합기금으로 이전

88) Reserve Bank of Australia(2011b). "The Mining Industry: From Bust to Boom—The Effect of the Mining Boom on the Broader Economy." <https://www.rba.gov.au/publications/rdp/2011/2011-08/effect-mining-boom.html>

89) Department of Finance Australia(2026). "Future Fund." <https://www.finance.gov.au/government/australian-government-investment-funds/future-fund>

90) Natural Resource Fund(2025). *Annual Report 2024*. https://finance.gov.gy/wp-content/uploads/2025/11/2024_NRF_Annual_Report_Final_Draft-JD0715_GE1507-Final-Print.pdf

다. 자산가격·신기술·집중 세수의 위험 사례

■ 아일랜드: 부동산 버블과 최근 다국적기업 법인세

- (세입·규모) 2000년대 중반에는 부동산 버블과 신용팽창으로 인지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건설 관련 소득세가 급증
 - 최근에는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이익 집중으로 법인세가 크게 늘어 2023년 거의 240억 유로 수준⁹¹⁾
- (재원사용 기초) 2000년대 호황세입은 공공지출 확대, 감세, 공공임금·복지 지출 증가에 쓰여 지출 경직성을 키웠다는 평가
 - 같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 2024년 Future Ireland Fund와 Infrastructure, Climate and Nature Fund를 설치해 초과 법인세 일부를 적립⁹²⁾

■ 일본: 1980년대 자산가격 버블과 세수 착시

- (세입·규모) 금융완화와 내수확대가 맞물리며 주식·토지 가격이 급등했고, 기업이익과 자산거래 증가가 세수 호조로 연결되며 세입 증가
 - FY1987 결산 세입이 증액경정 후에도 3조 7,100억 엔 초과했고, FY1988 보정예산에도 3조 1,600억 엔의 세수 증가 반영⁹³⁾
- (재원사용 기초) FY1990에서는 특례공채 발행을 중단하고 공채의존도를 8.4%까지 낮췄지만, 버블 붕괴 후 세입 감소와 경기부양책이 반복되며 FY1994 이후 특례공채 발행 재개⁹⁴⁾

91) Department of Finance Ireland(2024). "Minister McGrath and Minister Donohoe publish the Future Ireland Fund and Infrastructure, Climate and Nature Fund Bill 2024." <https://www.gov.ie/en/department-of-finance/press-releases/minister-mcgrath-and-minister-donohoe-publish-the-future-ireland-fund-and-infrastructure-climate-and-nature-fund-bill-2024/>

92) 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gency(2026). "Infrastructure, Climate and Nature Fund—FAQs." <https://www.ntma.ie/business-areas/future-ireland-funds/infrastructure-climate-and-nature-fund/infrastructure-climate-and-nature-fund-faqs>

93) Ministry of Finance Japan(2020).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of Japan in Stable Growth Period: 1972 to 1990*. https://www.mof.go.jp/english/pri/publication/policy_1972-1990/index.htm

94) IMF(2000). Bayoumi, Tamim. *Post-Bubble Blues: How Japan Responded to Asset Price Collapse*. <https://www.imf.org/external/pubs/nft/2000/bubble/>

■ 미국·캘리포니아: 닷컴버블과 스톡옵션 세수

- (세입·규모) 1990년대 후반 인터넷·기술주 붐으로 자본이득, 스톡옵션 행사, 보너스가 늘며 개인소득세가 급증
 - 캘리포니아의 주식옵션·자본이득 관련 개인소득세 수입은 2000/01년 170억 달러에서 2001/02년과 2002/03년에 각각 약 60억 달러로 급감⁹⁵⁾
- (재원사용 기초) 호황기에는 지출 확대, 일부 감세, 교육·교통 등 인상 약속이 있었으나, 세입 급락 후 2002/03년에는 236억 달러 규모의 예산문제 조정

■ 대만: 반도체 호황과 현금 환원 압력

- (세입·규모) 대만은 반도체 산업과 수출 호조, 세수 초과를 배경으로 2023년 1인당 NT\$6,000 보편 현금지급을 추진
 - 행정원은 이를 경제성장 성과 공유와 회복 지원 목적의 일회성 지급으로 설명⁹⁶⁾
- (재원사용 기초) 일부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직접 환원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수용성은 높았지만, 호황기마다 반복적 배당 기대를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 평가

(4) 한국 AI 빅사이클과 세수 증대 경로

■ AI·반도체 호황의 실물 기반

-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2025년 전세계 반도체 매출이 7,9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6% 증가했고, 2026년에는 약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⁹⁷⁾

95) California Legislative Analyst's Office(2002). *California Spending Plan 2002-03*. https://lao.ca.gov/2002/spend_plan_02/0902_spend_plan_chap_1.html

96) Executive Yuan Taiwan(2023). "Government readies plans for NT\$6,000 universal cash payment." <https://english.ey.gov.tw/PageRedirect.aspx?l=c7790395-540d-4290-88b2-dd50ef5ada35>

97)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2026). "Global Annual Semiconductor Sales Increase 25.6% to

- AI 인프라 투자, 데이터센터, 고성능 메모리, 네트워크·저장장치 수요가 반도체 시장을 뒷받침
- 우리나라는 2026년 예산에서 AI 분야에 10.1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 목표인 GPU 3만 5천 장 확보를 앞당기기 위해 1만 5천 장을 추가 구매하는 동시에 AI 인프라 투자 지출수요도 커지고 있음을 의미

■ AI 빅사이클 상황이 초과세수로 연결되는 경로

- (법인세) HBM, 서버용 DRAM, 기업용 SSD 등 고부가 제품의 가격과 수요물량이 상승하면 주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중간예납과 확정신고 시차를 거쳐 법인세가 증가
- (근로소득세) 성과급 및 임금 상승, 스톡옵션 또는 주식보상, 협력업체 고용이 늘면 소득세 증가
- (자본관련 조세) 주가 상승과 거래대금 증가는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에 영향
 - 닷컴버블과 가장 유사하며, 반도체 관련 주가 조정 시 빠르게 반전
- (간접세·관세) 장비투자, 전력·건설·소재 수요는 부가가치세와 관세에 영향

■ AI 빅사이클에 따른 초과세수 특성 파악 필요

- 구조적 세수 성격과 일시적 초과세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향후 초과세수의 별도 재원으로 활용 시 사용기간, 사용처 등의 설정에 신중할 필요

\$791.7 Billion in 2025.” <https://www.semiconductors.org/global-annual-semiconductor-sales-increase-25-6-to-791-7-billion-in-2025/>

표 2 AI 빅사이클에 따른 초과세수의 성격(예시)

구분	구조적 세수 성격	일시적 초과세수 성격
AI 수요	학습·추론 확산, 데이터센터 장기 투자, 메모리 탑재량 증가	빅테크 설비투자 과잉, AI 서비스 수익화 지연, 투자 조정
반도체 이익	기술 우위, 장기 공급계약, 고부가 제품 비중 상승	DRAM·NAND 가격 급등, 재고 사이클, 환율 효과
주식시장	기업가치 재평가가 실제 이익과 배당으로 확인	밸류에이션 상승, 거래대금 급증, 스톡옵션 행사 집중
세목 구성	법인세·근로소득세·소비세가 폭넓게 개선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에 과도하게 집중
정책 판단	일정 기간 확인 후 반복 재원화 가능	결산 즉시 기금·채무상환·일회성 투자로 분리

(5) 시사점

■ 국가별 사례를 통한 교훈

- 노르웨이·칠레·싱가포르의 초과세수를 제도적으로 격리하고 장기수익 또는 구조적 재정수지 기준으로 사용
- 반면 영국·네덜란드·일본·미국 캘리포니아·아일랜드·스페인 등 일시적 세입을 일반재정에 흡수하거나 구조적 세입으로 오인해 이후 조정 비용 부담
- 특히 이번 반도체 초과세수 사례는 미국의 닷컴버블 사례와 최근 대만의 반도체 호황 시점의 사례가 유사

■ 초과세수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

- AI·반도체 호황은 우리나라 재정에 중요한 기회이지만, 세수 증가의 상당 부분은 가격·자산시장·소수 기업 이익에 민감할 수 있음
 - 신기술은 장기적으로 혁신적일 수 있지만, 세수는 주가·옵션·자본이득에 의해 일시적으로 등락폭의 변동성이 클 수 있음⁹⁸⁾

98) California Legislative Analyst's Office(2026b). "Updated 'Big Three' Revenue Outlook." <https://>

- 명목 세수가 늘었다고 해서 구조적 재정여력이 늘어난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함
 - 반도체 가격, 기업이익, 주식시장 거래대금, 환율 효과를 제거한 엄격한 분석 필요
- 장기 자원세입도 가격 변동성이 크면 안정적 세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여러 사례의 공통점
 - 한국의 반도체 관련 세수가 “세계 수요는 장기적”이라는 이유로 단년도 초과 세입을 지속적인 세입 인지하지 않도록 관리

□ 초과세수에 따른 실제 재정지출 가용 규모는 축소

- 우리나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산되므로 실제 재정지출 가용 규모가 표면상 규모보다 작음
- 따라서 엄격한 분석을 통한 초과세수 활용 방안 논의 필요
 - 호주는 칠레보다 호황세입보다 더 많이 국내에 환원해 경기반전 후 구조적 적자가 발생
 - ‘일부 저축, 일부 영구지출’ 방식은 호황이 꺾일 때 재정조정 압박이 있을 수 있음

□ 초과세수를 활용한 재정지출 우선순위 설정

- 초과세수의 규모보다 초과세수의 성격 판정과 용도 규칙을 우선 설정할 필요
 - 즉시 쓰는 지출보다는 독립적인 기준에 따른 전략적 우선순위 부여
 - 예를 들어, 채무상환·안정화기금·미래투자·한시 지원 등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방법

■ 신규 세원(자원) 발견 자체보다 재정운용 시 제도 설계가 중요

- 북해 자원으로 인한 세수 증가 상황에서 노르웨이는 “기금·준칙형”, 영국은 “일반재원 흡수형”인지에 따라 재정운용 결과가 다름
- 시장가격 변동성이 큰 세원을 안정적인 세원으로 볼 수 없다면, 경기주기나 변동에 맞는 방식의 재정운용 설계 필요
 - 예를들어, 관련 시장(분야)이 호황일 때 기금에 적립하였다가 불황일 때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대만 반도체 호황과 재정정책 변화

김 명 규 연구위원
작성시점 : 2026.6.1.

(1) 대만 반도체 산업 현황

■ AI 호황에 따른 대만 경제성장률 상승세

- 대만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은 8.63%, 2026년 1분기 14.55% 성장하며, AI·HPC 관련 수출과 설비투자가 대만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대만 통계청)

표 1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단위 : %)

국가	2023년	2024년	2025년	2026 Q1	2026 Q1 기준
대만	1.31%	5.30%	8.63%	14.55%	전년 동기 대비
미국	2.50%	2.80%	2.50%	1.6%	전기 대비 연율
한국	1.40%	2.00%	1.00%	1.7%	전기 대비
일본	1.90%	0.10%	0.70%	0.5%	전기 대비

■ 대만 반도체 호황의 중심인 첨단 공정과 AI 칩 수요가 매출 증가로 연결

- 매출뿐 아니라 이익률도 매우 높아 세수와 자본투자 여력이 커짐

표 2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매출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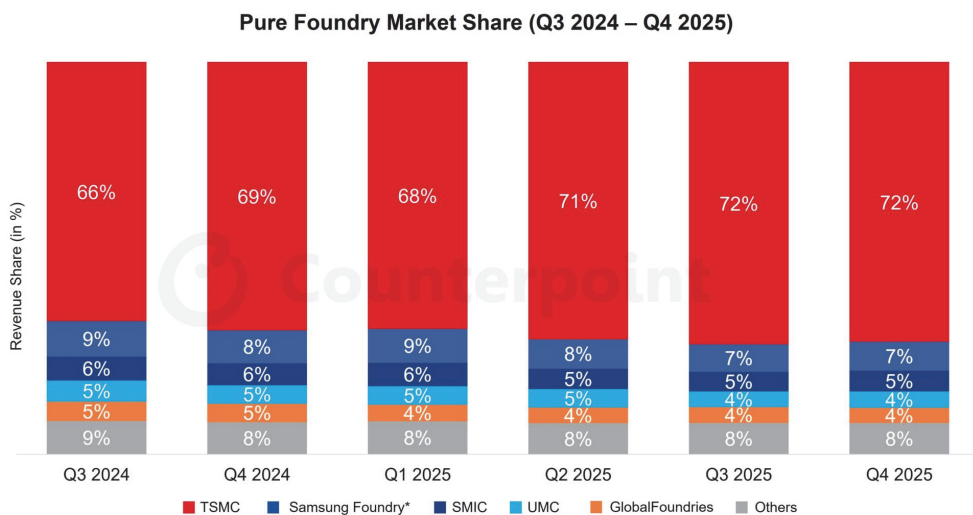
(단위 : %)

Brands	Q3 2024	Q4 2024	Q1 2025	Q2 2025	Q3 2025	Q4 2025
TSMC	66%	69%	68%	71%	72%	72%
Samsung Foundry	9%	8%	9%	8%	7%	7%
SMIC	6%	6%	6%	5%	5%	5%
UMC	5%	5%	5%	5%	4%	4%
GlobalFoundries	5%	5%	4%	4%	4%	4%
Others	9%	8%	8%	8%	8%	8%

자료 : <https://korea.counterpointresearch.com/pure-foundry-market-share/>

그림 1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매출액 기준)

(단위 : %)



대만 반도체(TSMC)는 매출 점유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⁹⁹⁾

(이하 내용은 기사 전문 인용)

- 순수 파운드리 산업은 2025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26% 증가

99) <https://korea.counterpointresearch.com/pure-foundry-market-share/>

- 이러한 성장은 4/5nm 공정을 기반으로 한 AI GPU, ASIC, 가속기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에 힘입은 결과
- TSMC는 스마트폰 및 PC용 N3 공정의 본격 양산, NVIDIA의 Blackwell GPU에 대한 N4 수요, 그리고 CoWoS의 지속적인 기여에 힘입어 72%의 점유율로 시장 지배력 유지
- 삼성은 7%의 시장 점유율로 2위 기록. 현재 SF2 공정의 수율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HBM4 로직 다이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SF4 공정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임
- SMIC는 2025년 4분기에도 분기 기준 최고 매출을 경신하며 5.3%의 시장 점유율 기록. 이는 'China-for-China' 트렌드에 따른 내수 중심의 소비자 전자제품 수요 확대와 12인치 웨이퍼 생산능력 증설이 성장을 견인한 결과
- 2026년에는 선단 공정뿐 아니라 일부 8인치 공정에서도 가동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여기에 전반적인 웨이퍼 가격 상승이 더해지면서, 2026년 파운드리 매출 성장에 추가적인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관련 수출액은 2025년 큰 폭의 증가세

- AI 서버·GPU 수요가 폭증하며 2024년부터 반등
 - 2025년 연간 수출은 6,407억 달러로 사상 첫 6,000억 달러 돌파했고, 반도체·전자부품 수출 증가율은 41.7%
- 글로벌 반도체 재고 조정 여파로 수출이 전년 대비 9.7% 감소하는 유일한 역성장

표 3 대만 총수출액 및 반도체 관련 수출액 추이

(단위 : 억 대만달러, %)

연도	총 수출액 (A)	전년대비 증가율	반도체·전자부품 수출액(B)	비중 (B/A)
2021	4,464	29.4	1,700	38
2022	4,792	7.3	1,900	40
2023	4,326	9.7	1,644	38
2024	4,745	9.7	1,945	41
2025	6,407	34.9	2,755	43

자료 : 대만 재정부, 경제부.

(2)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실적 및 활용

□ 대만 재정부에서는 2021년에서 2024년까지 총 1조 8,707억 대만달러(약 82~87조원)의 초과세수 발표(대만 발표, 기사 재인용 기준)

표 4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실적

(단위 : 억 대만달러)

연도	초과세수 규모	원화 환산	출처
2022년	4,500	약 18조 6,500억 원	대만 재정부 공식 발표 기사 재인용 ^{주1)}
2024년	5,283	약 23~24조 원	대만 재정부 공식 발표 기사 재인용 ^{주2)}
2021~2024 누적	18,707	약 82~87조 원	대만 재정부 공식 발표 기사 재인용 ^{주3)}

주1 :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1/05/K2T67V6OINCT3M7AJKFIDZVA3A/

주2 :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3095000009>

주3 : <https://www.mt.co.kr/world/2025/10/24/2025102420465082979>

■ 2023년 초과세수는 6,000대만달러 국민 현금 지급

- 대만 행정원은 2022년 세수가 약 4,500억 대만달러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 중 중앙정부 몫 3,800억 대만달러를 활용
 - 정부가 초과세수 1,400억 대만달러를 활용해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1인당 6,000대만달러 현금 지급
 - 400억 대만달러는 예비비로 활용
 - 나머지는 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사회보험·전력공기업 보전,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에 배분

■ 2024년 초과세수는 AI 호황과 주식시장 효과로 약 5,283억 대만달러

- 반도체 호황은 법인세뿐 아니라 주식시장과 가계소득 경로를 통해서도 세수에 영향
- 2024년 총 순세수가 3조 7,619억 대만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고, 예산 대비 초과분은 5,283억 대만달러
 - 재정부는 개인소득세, 이자·급여 원천징수, 주택·토지 관련 세목, 영리사업 소득세 회복뿐 아니라 AI 흐름에 따른 대만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로 인한 결과로 지목
 - 증권거래세는 907억 대만달러 증가(전년 대비 46.0%)

■ 2025년 세수부족으로 특별예산 편성 및 차입 병행으로 전환

- 2025년에는 총 세수가 3조 7,879억 대만달러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예산 대비로는 미달해 2021년 이후 첫 세수 부족이 발생
 - 재정부는 영리사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는 견조했으나, 자동차 시장 부진과 부동산 경기 약화가 영업세, 화물세, 토지증가세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
- 대만 행정원은 국제정세 변화, 미국 관세 리스크, 산업·민생·안보 회복력 강화를 명분으로 5,500억 대만달러 규모의 특별예산을 제안

- 특별예산에는 산업 적응 지원과 회복력 강화뿐 아니라 1인당 10,000대만달러 현금 지급도 포함
- 재정부 산하 기관에서는 2025-2027년 회복력 특별예산의 연간 지출 5,447억 대만달러를 과거 회계연도 잉여금 4,444억 대만달러와 차입 1,003억 대만달러로 조달

■ 대만의 초과세수 활용은 2023년에는 ‘사후적 현금 환원’의 성격이 강했지만, 2025년 이후에는 ‘현금 지급+산업·에너지·국방·안보 회복력 재원’의 혼합형으로 전환

(3) 반도체 호황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여

■ 대만 반도체 호황의 직접 원인은 글로벌 AI 투자와 선단공정 수요지만, 대만이 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단지, 연구기관, 인력, 세제, 산업정책이 장기간 누적되었기 때문

■ 연구기관, 과학단지, 클러스터 형성에 정부 기여

- 대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1970-1980년대부터 이어진 제도적 기반 조성
 - 산업기술연구원(ITRI)은 1973년에 설립되어 IC 기술 개발과 기술이전, 창업 보육을 담당했고, UMC와 TSMC 같은 핵심 기업 형성에 영향
 - 1980년에 조성된 신주과학단지는 대학, 연구기관, 설계·장비·소재 기업이 모이는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기반 조성
- 정부의 반도체 관련 기반 조성은 초기 위험이 큰 기술이전과 인력 양성, 공업용지·전력·용수·교통 인프라, 산학연 네트워크를 제공해 민간기업의 학습 비용을 낮추었음을 의미

■ 세제, R&D 투자, AI 인프라 확대 등 정부 정책 영향

- 최근 정책은 기존 제조 기반을 AI 시대의 시스템 경쟁력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
 - (세제 지원) 산업혁신조례 제10-2조*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지위를 가진 기업이 대만 내에서 첨단 혁신 R&D와 선진 제조공정 장비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

* 대만판 ‘CHIPS법’으로도 불리는 핵심 반도체·첨단산업 세제 지원 조항(2023년 신설)으로 연구개발 비용의 25% 세액공제, 첨단생산공정 설비 구입 비용의 5% 세액공제(단, 세액 공제 총액은 당해 연도 영업소득세(법인세)의 50% 이내)

- (칩 기반 산업혁신) 행정원은 2024-2033년 Taiwan Chip-based Industrial Innovation Program에 총 3,000억 대만달러를 배정해 반도체 우위를 AI, 스마트모빌리티, 제조, 의료 등으로 확장
- (AI 인프라) 국가발전위원회(2026.1.)는 ‘10대 AI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고, 여기에는 주권 AI·컴퓨팅 인프라, 산업 AI 응용, 글로벌 혁신 생태계 연결 등이 포함

* 2025년 7월 대만 행정원 발표하고, 11월 범부처 추진체계를 확정한 국가급 AI 발전 계획으로, 2025~2040년을 기간동안 15조 대만달러(약 703조 원) 이상의 경제가치 창출과 50만 개 고임금 일자리 창출, 국제 수준 연구소 3개 설립을 목표

표 5 대만 AI 신(新) 10대 건설(AI新十大建設)

스마트 응용	핵심 기술	디지털 기반
①소프트웨어 중심 플랫폼 산업 육성	⑤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개발 (첨단 패키징 핵심 지위 확보)	⑧주권 AI 및 컴퓨팅 인프라 강화 (세계 5위 목표)
②기업의 AI 전환(AX) 촉진	⑥아시아 3위 수준 양자컴퓨팅센터 구축	⑨AI 인재 50만 명 양성 및 창업 생태계 조성
③생활밀착형 AI 서비스 전방위 추진	⑦스마트 로봇 산업 육성	⑩지역균형발전 및 고임금 일자리 창출
④스마트 정부 및 데이터 거버넌스 정비		

(4)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재정정책 변화

■ 재정수지 흑자 기조에서 지방재정 이양 확대에 따른 구조적 압박으로 전환

- 2026년 중앙정부 예산안은 세입 2조 8,623억 대만달러, 세출 3조 350억 대만달러로 편성되어 1,727억 대만달러의 적자가 예상
 - 채무상환까지 고려하면 총 조달 필요액은 2,992억 대만달러이며, 이는 차입으로 충당
- 재정수지분배법 개정(2025년 3월)으로 중앙정부 세입을 줄이고 지방정부 배분을 확대해 중앙정부의 세수 활용 규모는 줄어들음
 -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도 중앙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정 공간은 오히려 축소

■ 증가 세수의 활용은 보편 현금 지급과 전략지출의 병존

- 최근 대만 재정정책은 국민 환원, 전략산업 지출, 지방재정 이양 등의 복합적인 지출전략
 - 2023년 6,000대만달러, 2025년 10,000대만달러 지급처럼 초과세수와 경기 호황의 체감도를 높이려는 현금성 정책이 반복
 - 반도체와 AI 인프라, 전력 안정, 국방·경제안보 회복력 지출이 특별예산을 통해 확대
 - 지방정부 배분 확대는 지역 재정 자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산업정책·국방·사회복지 지출 여력을 압박
-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재정 여력을 단순히 소비 환급에만 쓰는 단계에서 벗어나, 미중 기술갈등과 공급망 재편, 전력·인력·국방 부담에 대응하는 전략재정으로 재배치
 - 현금 지급과 차입이 함께 확대될 경우 경기 과열, 물가 부담, 장기 투자 자원 잠식이라는 부작용 가능성 상존

대만 인구대책 신전략 - 가족지원편

김 명 규 연구위원

작성시점 : 2026.6.2.

(1) 발표 개요 및 배경

■ 발표 개요

- (발표 일시) 2026년 5월 27일(총통부), 5월 28일(행정원 제4005차 회의)
- (발표 주체) 라이칭더 총통 주재 국안고층회의 → 국가발전위원회
- (핵심 전환) 기존 보조식 육아 → 공공지원식 육아
- (정책 대상) 임신 전 건강·난임부터 자녀 0~18세까지의 전 생애 주기
- (5대 분야) 출산지원, 보육 강화, 교육비 경감, 가족친화 근로환경, 주거 안정

■ 정책 수립 배경

- 2025년 12월 기준 총인구 약 2,329만 9천 명, 전년 대비 10만 명 이상 감소
-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초과 → 초고령사회 진입
- 0~14세 인구 비중 11%대, 고령화지수 174(아동 100명당 고령자 수)
- 합계출산율 1995년 1.76명 → 2010년 이후 1명 안팎 → 2025년 0.695명
- 2020년부터 자연인구 감소 시작 (출생 < 사망)
- 잠재성장률 1990년대 중반 6%대 → 2010년대 이후 3%대 초반
- 청년 세대의 복합 부담(주거비·교육비·고용 불안·장시간 노동·보육 공백)
- 기존 정책은 부처별 분산 지원으로 실질적 부담 경감 효과 미흡

(2) 대만 최근 30년 인구구조 변화

■ 대만 인구 추이(1995-2025)

- 총인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완만히 증가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1995년 1.76명으로 대체수준(2.1명) 이하
 - 2010년 0.895을 기록한 이후에는 대체로 1명 안팎에 머물렀고, 2025년 기준 0.695명
- 2020년부터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자연감소가 나타나면서, 인구 문제의 성격이 “성장 둔화”에서 “총량 감소와 고령화”로 전환

표 1 대만의 최근 30년 인구·출산·성장 지표

(단위 : 만명, %)

연도	총인구	인구증감률	합계출산율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추정)
2025	2,329.9	-0.50	0.695	8.63	3.47
2024	2,340.3	-0.08	0.870	5.27	3.55
2023	2,342.0	0.81	0.865	1.08	3.58
2022	2,323.3	-0.61	0.870	2.68	3.60
2021	2,337.5	-0.79	0.980	6.72	3.59
2020	2,356.1	-0.11	0.990	3.42	3.55
2019	2,358.6	0.03	1.050	3.06	3.47
2018	2,358.0	0.11	1.060	2.91	3.39
2017	2,355.5	0.18	1.125	3.66	3.31
2016	2,351.2	0.21	1.170	2.17	3.26
2015	2,346.3	0.25	1.175	1.47	3.24
2014	2,340.4	0.25	1.165	4.70	3.26
2013	2,334.5	0.32	1.065	2.50	3.31
2012	2,327.0	0.33	1.270	2.10	3.39
2011	2,319.4	0.32	1.065	3.80	3.51
2010	2,312.0	0.44	0.895	10.60	3.63
2009	2,301.9	0.36	1.030	-1.60	3.73

연도	총인구	인구증감률	합계출산율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추정)
2008	2,293.7	0.34	1.050	0.70	3.87
2007	2,285.9	0.39	1.100	6.50	4.05
2006	2,277.0	0.39	1.120	5.60	4.21
2005	2,268.2	0.34	1.120	5.10	4.35
2004	2,260.5	0.32	1.180	7.00	4.46
2003	2,253.3	0.35	1.240	4.20	4.54
2002	2,245.4	0.51	1.340	5.20	4.61
2001	2,234.0	0.74	1.400	-1.40	4.71
2000	2,217.7	0.65	1.680	6.30	4.87
1999	2,203.4	0.69	1.560	6.70	5.07
1998	2,188.3	0.92	1.470	4.20	5.32
1997	2,168.3	0.99	1.770	6.10	5.60
1996	2,147.1	0.85	1.760	6.20	5.93
1995	2,128.9	-	1.760	6.50	6.31

주 : 잠재성장률은 공식 공표치가 아니라, 실질 GDP 성장률로 재구성한 GDP 지수에 연간자료용 HP 필터()를 적용해 계산한 추세 성장률 추정치이며, 따라서 경기순환을 제거한 장기 성장능력의 방향을 보여주는 보조지표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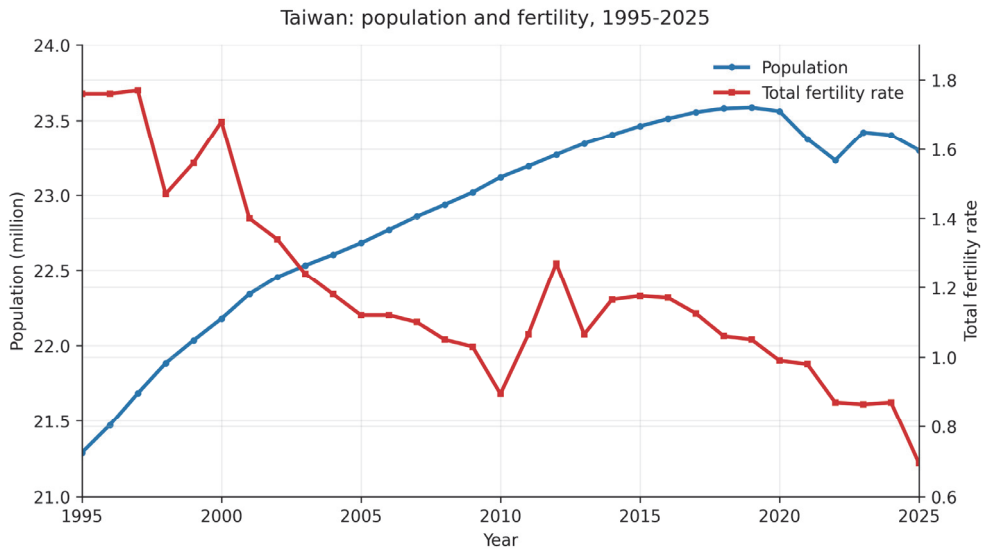
자료 : 대만 통계연감, UNICEF/UN WPP, 저자작성

■ 출산율 저하가 누적된 뒤 자연증가가 빠르게 축소

- 2020년 이후의 자연감소는 단기 경기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낮은 출산율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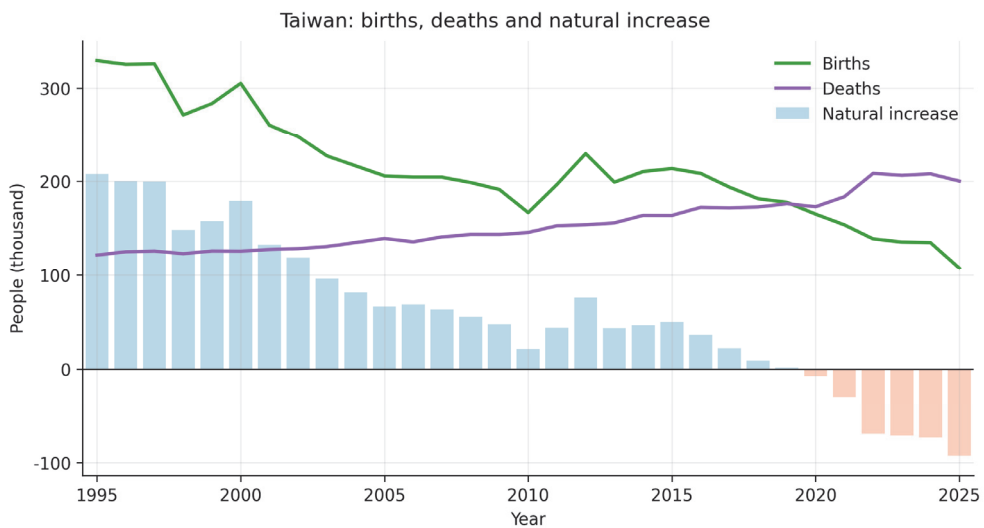
그림 1 대만의 총인구와 합계출산율, 1995-2025년

(단위 : 백만명, 명)



자료 : 대만 통계연감, UNICEF/UN WPP, 저자작성

그림 2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증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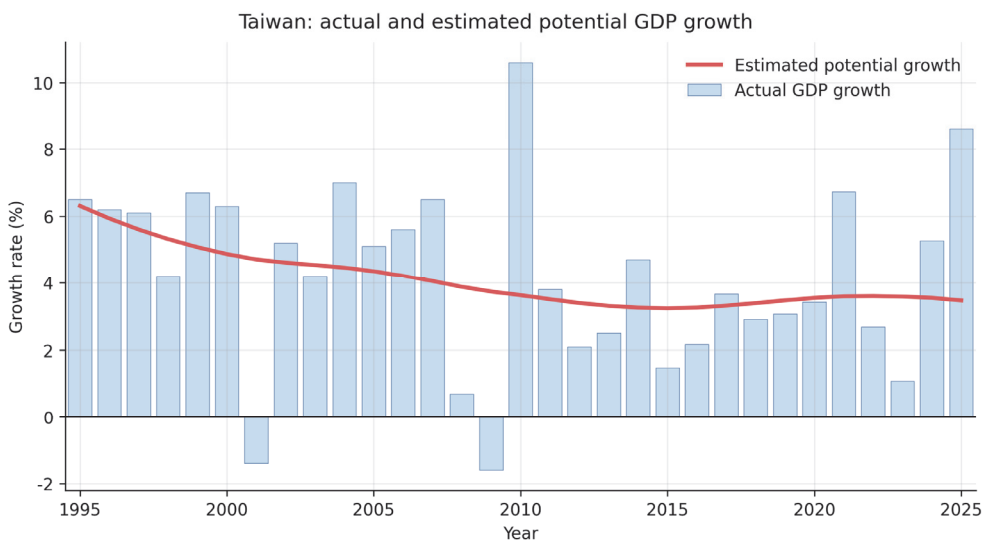


자료 : 대만 통계연감, UNICEF/UN^{WPP}, 저자작성

□ 경제성장률은 반도체 경기, 세계수요, 금융위기와 팬데믹 같은 외부충격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특징

- 잠재성장률(추정)은 1990년대 중반 6%대에서 2010년대 이후 3%대 초반으로 낮아지는 흐름
- 단순히 특정 연도의 경기침체 문제가 아니라 노동공급, 자본축적, 생산성 향상의 장기 제약이 함께 작용함을 시사

그림 3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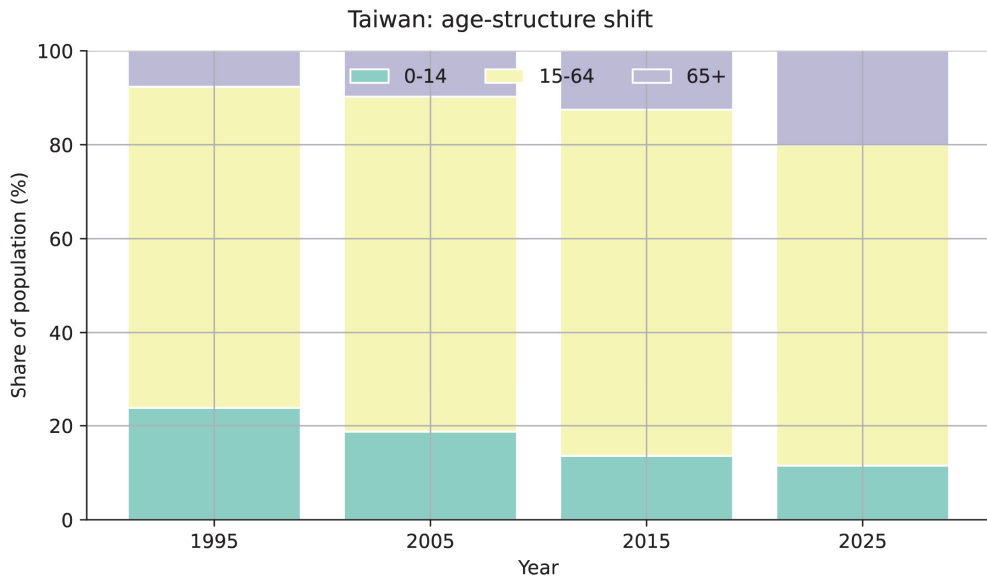
자료 : 대만 통계연감, UNICEF/UN WPP, 저자작성

표 2 10년 간격 인구구조 요약

연도	총인구(만 명)	0-14세(%)	15-64세(%)	65세 이상(%)	고령화지수
1995	2,135.5	23.8	68.6	7.6	32.1
2005	2,277.1	18.7	71.6	9.7	52.1
2015	2,349.2	13.6	73.9	12.5	92.2
2025	2,329.9	11.5	68.4	20.1	174.2

자료 : 대만 통계연감, UNICEF/UN WPP

그림 4 10년 간격 3대 연령대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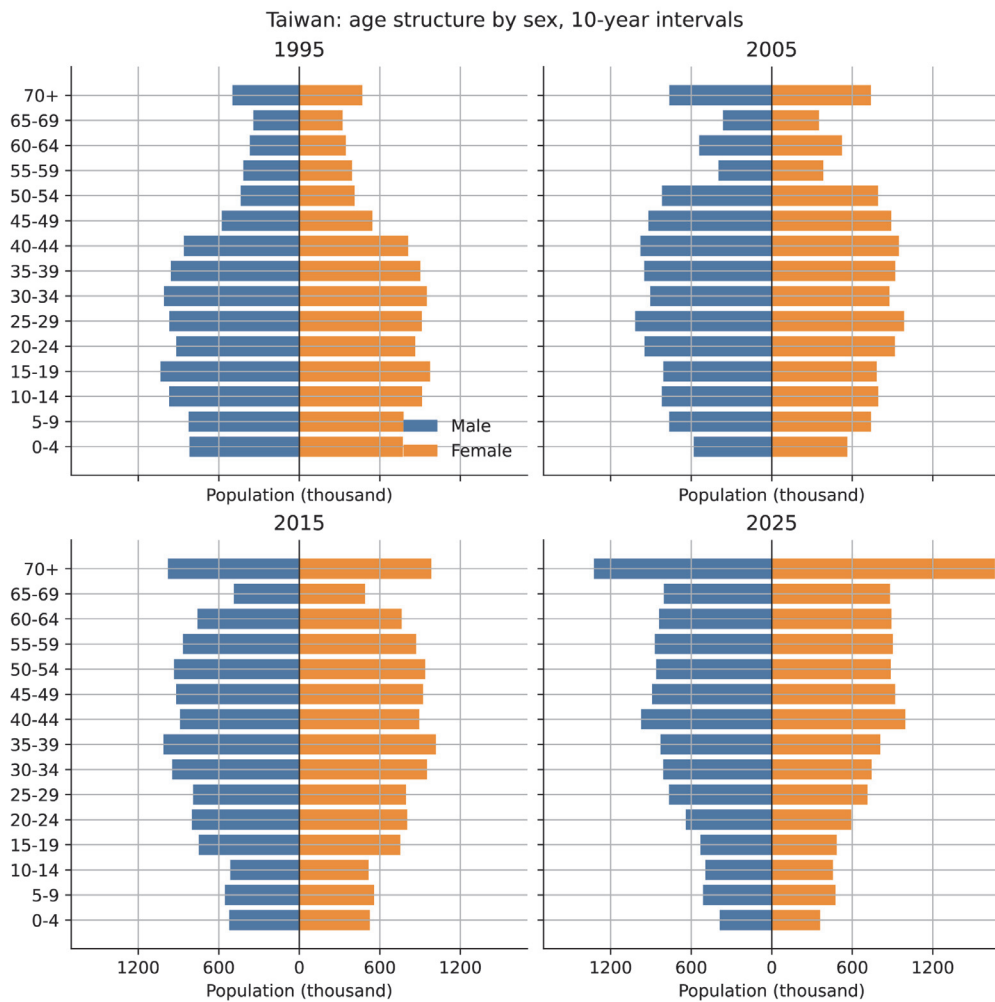


자료 : 대만 통계연감, UNICEF/UN WPP, 저자작성

■ 대만의 인구구조 피라미드

- 인구구조는 아래가 좁아지고 위가 넓어지는 형태로 빠르게 전환
 - 1995년에는 0-14세 인구가 전체의 약 24%였지만 2025년에는 12% 미만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8% 미만에서 20% 수준으로 증가
- 고령화지수도 1995년 약 32에서 2025년 약 174로 높아져, 아동 100명당 고령자가 170명을 넘는 구조
 - 성장수당, 보육, 교육비, 일·가정 양립, 주거지원이 별개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장기 성장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구전략이라는 점을 시사

그림 5 10년 간격 인구 피라미드



자료 : 대만 통계연감, UNICEF/UN WPP, 저자작성

(3) 5대 분야별 주요 조치

출산지원

- 0~18세 성장수당 신설: 월 5,000 대만달러 지원
 - 0~6세: 전액 가정 직접 지급

- 6~18세: 절반(2,500달러) 가정 지급 + 절반 정부 전용계좌 적립
- 18세 이후 학업·직업훈련·취업·창업에 사용 가능, 과세 및 자산조사 제외
- 취약 아동·청소년 교육발전계좌: 가정 저축액에 정부가 1:1 매칭
- 난임 보조 확대: 시험관 시술비를 연령·신청 차수별 차등 지원
- 출산급여 보전: 각 사회보험의 출산급여가 자녀 1인당 10만 대만달러 미달 시 정부 차액 보전

□ 보육 강화

- '0~6세 국가가 함께 키운다 2.0' 유지, 새 성장수당과 중복 수급 허용
- 0~2세 가정양육수당·공공보육·준공공보육 보조 지속(자녀 수별 차등)
- 공공부문·국영기업 보육시설 확대
- 기업 보육서비스 지출 최대 200% 소득공제 혜택 부여

□ 교육비 경감

- 학자금대출: 이자 1%포인트 인하 + 상환 유예기간 1년 → 2년
- 12년 국민교육 무상화 지속
- 사립대학 학잡비 보조: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3만 5천 대만달러
- 신혼·양육 학생 기숙사 임대료 보조 1.5배, 자녀 출생 시마다 50% 추가

□ 가족친화 근로환경

- 혼인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14일로 확대, 출산휴가 8주 → 12주
- 육아휴직 적용 연령 3세 미만 → 6세 미만 확대, 일 단위 사용 가능일수 30일 → 60일
- 6+3 육아휴직수당: 부모 각각 6개월 수령 후 추가 3개월 지급

- 자녀 12세까지 단축·탄력근무 지원, 임금 감소분 정부 보전
- 기업 대체인력 보조: 단기 직무대리 1일 800달러, 200인 이하 기업 채용·훈련 1인당 2만 달러
- 성별평등근로법·고용보험법 개정 추진(입법 절차 진행 중)

■ 주거 안정

- 사회주택 40%를 신혼·양육가구 배정, 0~6세 자녀 가구 최장 12년 거주
- 신혼 2년 이내 임대료 보조 1.5배, 자녀 출생마다 0.5배 추가
- 임대관리주택 거주 가구 연 최대 6,000 대만달러 주거 수선 보조
- 미성년 자녀 소득세 면세액 50% 인상
- 영유아 학전 특별공제, 주택세·토지세 감면 등 세제 우대

(4) 예산 규모

■ 예산 규모

- 기존+신규 조치 합산 연간 약 3,800억 대만달러(약 18.4조원) (2027년 전면 시행 기준)
-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발표없음
 -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여건을 고려했다는 언급은 없음

■ 지원 대상

- 연간 약 2,770만명 수혜 예상

표 3 소관별 업무

소관 부처	담당 업무
국가발전위원회	총괄 조정
교육부	교육비·기숙사·학자금대출
위생복지부	난임·보육·아동지원
노동부	휴가·근로시간·고용보험
내정부	사회주택·임대료 보조
재정부	세제 지원

(5) 정책적 의미와 한계

□ 정책적 의미

- 저출산 대응을 출산 시점 일회성 지원에서 0~18세 전 과정 공공투자로 전환
- 여성의 경력 단절 구조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선
- 기업을 가족친화 제도의 비용 부담자가 아닌 인력 유지 전략의 파트너로 유도

□ 한계 및 유의점

- 출산율 제고 효과는 주거비·장시간 노동 등 구조적 제약 해소 여부에 좌우
- 휴가·고용보험 관련 조치는 입법 과정에서 내용·시행 시점 변동 가능
- 사회주택·공공보육 확대는 예산 외 토지·인력·지방정부 집행력에 의존
- 장기 효과 평가를 위해 집행률·신청 접근성·가구 유형별 수혜 격차 지속 점검 필요

참고자료

총통부, “總統出席「台灣人口對策新戰略—家庭支持篇」記者會”: 총통부 원문링크

행정원, “台灣人口對策新戰略—家庭支持篇”: 행정원 원문링크

행정원, “政院通過「台灣人口對策新戰略」等相關報告”: 행정원 보도자료 링크

국가발전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국가발전위원회 보도자료 링크

행정원 제4005차 회의 국가발전위원회 뉴스稿 PDF: 국발회 뉴스稿 PDF 링크

행정원 제4005차 회의 국가발전위원회 설명자료 PDF: 국발회 설명자료 PDF 링크

노동부, 성별평등근로법·고용보험법 개정 설명: 노동부 보도자료 링크

내정부, 2025년 12월 호구통계 분석: 내정부 통계자료

내정부 호정사, 장기 인구·출생·사망·출산을 통계: Statistics—HISTORY

행정원 주계총처, GDP 및 경제성장률 개정·전망 자료: DGBAS GDP 자료

국가발전위원회,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역년 자료: NDC 통계연감 자료

UNICEF Data, China, Taiwan Province of China 2025년 연령·성별 인구자료: UNICEF/UN WPP 자료

OECD 경제전망 및 한국 재정정책 제언¹⁰⁰⁾

김 명 규 연구위원

작성시점 : 2026.6.4.

(1) 세계 경제 전망

■ 세계 GDP 성장률 전망은 2025년 3.4%, 2026년 2.8%, 2027년 3.1%

- OECD 경제 성장률은 2025년 1.8%, 2026년 1.5%, 2027년 1.7%로 전망
 - 유로지역과 일본은 2026년 성장률이 1% 미만에 머물러 경기 대응 여력을 제약함
- OECD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6년 4.3%로 높아져 통화정책 완화 여지를 제약함
- 에너지 가격이 2026년 중반 이후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경로를 전제

■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및 핵심 원자재 공급충격을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시

- 에너지 가격 상승과 원자재 공급차질이 성장 둔화와 물가 재상승 압력을 동시에 유발
- 공급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비용, 가계 실질소득, 교역 흐름에 동시 부담이 발생
- 세계 교역 증가율 둔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 보편적 가격보호와 세금감면은 재정비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 유인을 약화

100) OECD,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6 Issue 1: Under Pressure, Preliminary version, 2026년 6월 보고서를 발췌·요약 정리함.

표 1 OECD 세계경제 주요 전망

(단위 : 전년대비 %)

항목		2025	2026	2027
경제 성장률	세계	3.4	2.8	3.1
	OECD	1.8	1.5	1.7
	미국	2.1	2.0	1.8
	유로지역	1.4	0.8	1.2
	한국	1.0	2.6	1.9
	일본	1.1	0.6	0.8
	중국	5.0	4.5	4.3
	인도	7.6	6.3	6.4
G20 소비자물가 상승률		3.4	4.0	3.1
OECD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4.3	3.0
세계 교역 증가율		5.0	3.1	2.9

주 : 세계 교역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량 기준

자료: OECD(2026). Table 1.1.

(2) 한국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은 2026년 2.6%*, 2027년 1.9%로 전망

* 국내기관 2026년 전망: 정부 2.0%(1.9.), 한국은행 2.0%(2.26.), KDI 2.6%(5.13.)

** 이전 OECD 2026년 전망치인 1.7%에 비해 0.9%p 상향

- 2026년 성장률 반등은 반도체 수출, 민간소비 회복, 민간투자 반등, 순수출 기여 확대에 기반
 - 2026년 1분기 GDP는 순수출, 소비, 민간투자에 힘입어 전기 대비 1.7% 성장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6년 2.6%*, 2027년 2.2%로 전망
 - * 이전 OECD 2026년 전망치인 2.7%에 비해 0.1%p 하향 조정
- 실업률은 2026년 2.8%, 2027년 2.7%로 전망

■ 반도체와 조선을 제외한 제조업 업황은 악하고 소비자신뢰도 악화를 동반할 것으로 전망

- 2027년에는 수출 증가율 둔화로 성장률이 1.9%로 낮아질 전망
- 에너지 가격 상승은 2026년 4월 소비자물가 2.6% 상승의 주요 압력으로 작용함

■ 상방 요인

- AI 투자 확대는 고부가가치 메모리와 관련 설비투자를 자극
- 첨단 반도체 수요 확대는 2026년 성장률의 전망치 상회 요인으로 작용
- 경상수지는 2026년 GDP 대비 12.3%, 2027년 9.9%로 높은 흑자 흐름을 유지할 전망

■ 경제 정책 제언

- 반도체 수출 회복세를 투자, 전력, 인력, 공급망 정책과 연계 적용 필요
- 제조업 부진 업종은 금융지원보다 생산성 개선과 수요 전환 지원 중심으로 적용
- 물가 압력 대응은 에너지 가격 신호를 점검하면서 취약계층 지원

표 2 한국 주요 거시경제 전망

(단위 : %, %p, GDP 대비 %)

항목	2024	2025	2026	2027
실질 GDP 성장률(%)	2.0	1.0	2.6	1.9
민간소비 증가율(%)	1.1	1.3	2.2	2.1
정부소비 증가율(%)	2.1	3.0	2.9	2.1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0.8	-3.3	2.1	2.2
총내수 증가율(%)	0.2	0.6	1.9	2.1
수출 증가율(%)	6.8	4.2	6.0	1.9
수입 증가율(%)	2.5	3.9	4.4	2.1
순수출 성장기여도(%p)	1.8	0.3	1.0	0.1

항목	2024	2025	2026	2027
GDP 디플레이터(%)	4.1	3.1	7.6	1.5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2.1	2.6	2.2
근원물가 상승률(%)	2.2	1.9	2.5	2.3
실업률(%)	2.8	2.8	2.8	2.7
일반정부 재정수지(GDP 대비 %)	-1.5	-2.5	-2.1	-2.1
일반정부 총부채(GDP 대비 %)	48.5	45.8	48.2	50.2
경상수지(GDP 대비 %)	5.3	6.6	12.3	9.9

자료: OECD(2026). p.213.

(3) 한국 재정정책 제언

■ 한국 재정상황 관련 언급

- OECD는 한국이 2026년 중동 위기 대응으로 GDP의 1%를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시행했다고 설명
- OECD는 휘발유 세율 15% 인하, 경유 세율 25% 인하, 연료가격 규제 등 에너지 가격 완화 조치를 언급
- 일반정부 재정수지(GDP 대비)는 2026년 -2.1%, 2027년 -2.1%로 전망
- 일반정부 총부채(GDP 대비)는 2026년 48.2%, 2027년 50.2%로 전망

■ 주요 제언 내용

- 에너지 충격 대응은 취약 가구와 충격 흡수에 취약한 기업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
- 광범위한 가격보조, 유류세 인하, 가격규제는 단계적으로 원상 회복하는 원칙 적용을 강조
 - 보편적 가격보조와 유류세 인하는 단기 충격 완화 효과가 있으나 재정비용과 가격왜곡을 유발

- 가격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절약 유인과 민간부문의 조정 능력을 약화할 수 있음
- 재정준칙은 고령화 지출 확대를 반영한 중장기 정치적 합의 구조로 적용
 - 고령화에 따른 연금, 보건, 돌봄 지출 확대는 중장기 재정지속가능성에 부담으로 작용
- 장기 재정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해 경기조정 순대출 한도와 독립재정기구 감시 체계를 적용

표 3 한국 재정정책 권고 사항

정책 영역	OECD 평가	정책 방향
에너지 보조	보편적 가격보조와 유류세 인하는 단기 충격을 완화하지만 재정비용과 가격왜곡을 유발	취약계층 중심의 현금성 또는 소득연계 지원으로 전환하고 가격신호를 복원
추가경정 예산	GDP의 1% 이상 규모 지원은 경기와 물가 충격 완화에 기여하나, 장기화되면 재정건전성에 부담	한시성, 표적성, 재원조달 계획을 전제
재정준칙	적자 누적과 고령화로 중기 재정경로 관리가 필요	경기조정 순차입 한도, 지출 증가율 관리, 독립 재정기구 감시 체제 도입
에너지 전환 투자	에너지 안보와 물가안정을 위해 공급 다변화와 재생 에너지 확대 필요	전력망, 저장설비, 인허가, 전력시장 규제를 개혁해 민간투자를 유도

일본 특별 예산 체계의 특징

김 명 규 연구위원
작성시점 : 2026.6.26.

(1) 일본 특별 예산 체계의 특징

■ 총리가 발표(6.24.)한 특별 예산 체계는 재정관리 프레임워크에 가까움

- 일반회계 전체를 별도 회계로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위기관리투자·성장투자를 통상세출과 구분해 예산편성과정에서 별도로 요구·심사·관리하는 장치
 - 경제안보상 특히 중요한 일부 분야는 GX, AI·반도체 사례에 이어 특별회계에서 별도관리
 - 상환재원이 뒷받침된 가교국채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 2026년 6월 25일 현재 공개자료 기준으로는 골태방침(骨太方針)과 2027회계 연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구체화될 사안이며, 세부 법령·예산액·대상분야가 모두 확정된 단계는 아님

표 1 운용 구조

구분	일반 투자 관리분	경제안보상 중요분야 별도관리분
성격	통상세출과 별도로 식별되는 위기관리·성장투자	특별회계에서 별도관리하는 경제안보 핵심 투자
대상	17개 전략분야, 8개 횡단과제, 지역미래전략 등	GX, AI·반도체 사례에 이어 조선·양자·중요광물 등 검토
예산 요구	2027회계연도 개산요구 기준에서 요구상한을 두지 않고 소요액 요구 가능	동일하게 투자필요액을 제시하되 별도 자원·법적 장치 필요
기간	투자 성격과 정책효과 발현시기를 고려해 필요한 충분한 실시기간 설정	복수년도에 걸쳐 자원 확보 후 관리

구분	일반 투자 관리분	경제안보상 중요분야 별도관리분
집행 수단	당초예산 반영, 기금 활용, 기존 사업 재구조화	특별회계, 추가 세외수입, 상환재원 있는 가교국채
재정 지표	원칙적으로 일반 재정지표에 반영	일본 정부 시산상 PB·공채 등 잔고 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식 제안
통제 장치	예산편성과정에서 투자수익·민간투자 유발효과·EBPM 심사	상환재원, 발행근거법, 국회 의결, 별도 성과관리 필요

(2) 자원·사용처·다년도 관리와 재정건전성과의 관계

▣ 부처 예산 한도가 없고 다년도 편성을 한다면 특정 연도에 집중 집행하고 다른 해에는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 일본의 '한도 없음'은 집행 자유화가 아니라 요구단계의 상한 완화를 의미하며, 다년도 계획을 세워 필요 연도에 지출을 집중할 수는 있지만, 연도별 예산·기금 조치와 국회 승인, 성과관리의 틀 안에서 가능
 - 부처 한도 제한 없음은 예산요구 한도를 두지 않는 의미로,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려면 예산편성이 확정되어야 함
 - * 일본은 다른 나라의 중기재정계획처럼 부문, 사업별 다년도 지출한도 제도는 없음
 - 다년도 편성은 사업기간과 효과발현 시기를 고려해 예산·기금·계약을 설계한다는 뜻으로 보임
 - * 일본의 연도별 단년도 예산의결 원칙은 유지
 - 특정 연도 집중집행은 대형 프로젝트 특성상 발생할 수 있으나, 사전 계획·예산조치·법적 근거·집행진도·성과관리 절차를 거쳐야 함
- 계속사업비로 전체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집행시기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현행법상 5년 이내로 한정

표 2 한국 일본 계속사업비 비교

구분	한국 계속사업비	일본 (계속비, 継続費)
근거 법률	국가재정법 제23조	재정법 제14조의 2
적용 대상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 제조, 연구개발(R&D) 등	공사, 제조 등 완성에 수 회계연도를 요하는 사업
지출 연한	원칙 5년 이내 (예외적 10년, 필요시 국회 의결로 추가 연장 가능)	원칙 5년 이내 (국회 재의결로 연장 가능)
지출·계약 권한	다년도에 걸친 '계약 체결 권한' 과 '지출 권한'을 동시에 부여	다년도에 걸친 '계약 체결 권한' 과 '지출 권한'을 동시에 부여
잔액 처리	사업 완성 연도까지 계속해서 다음 해로 이월 가능	사업 완성 연도까지 순차적으로 이월 가능
실제 운용 현황	도로, 철도 등 일반적인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광범위하게 활용됨	재정 경직성 우려로 극도로 제한. 최근에는 방위성의 대형 함정(잠수함 등) 건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됨

■ 수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 국채발행으로 해결하는 구조인가?

- 통상분은 매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국채발행액을 정하고, 별도관리분의 가교국채도 상환재원과 법적 근거 필요
 - 통상 세입·세출 전망과 채무잔고/GDP 경로하에서 국채발행액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
 - 보정예산은 긴요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하고, 기본적으로 국채 증액 발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음
- 일본이 시도하는 것은 '채무/GDP 관리하의 투자 확대'이지, 수지 악화를 자동 국채로 충당하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별도관리분의 가교국채도 미래 상환재원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앞당겨 조달하는 장치이지, 적자를 자동 보전하는 장치가 아님

■ 별도관리분(경제안보전략분야) 예산을 재정지표 산정 제외에 대한 비판

- 별도 관리분을 일본 정부 자체 기준의 재정지표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발표(보조 지표인지 불명)하였고, 내부적으로 세출 확대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 단, IMF 등 국제기준의 일반정부 채무에는 포함됨
- 기초재정수지(PB) 복수연도 관리는 대규모 정부지출 시 일시적 악화를 smoothing 하게 허용한다는 방침
 - 단년도 흑자 목표를 버리고 복수연도 관리로 전환
 - 국가채무 비율의 안정적 감소를 보조지표로 활용
- 긍정적 측면에서는 ‘성장 우선주의’ 관점에서 실기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결단으로 보임
 -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이 단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라는 경직된 목표 경도되었다는 판단
 - 글로벌 반도체 및 IT 경쟁에서 정책적 대응이 늦었다는 평가
- 부정적 시각에서는 재정 규율 붕괴 및 착시 논란을 피할 수 없음
 - 일본 정부 자체 기준으로는 재정지표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표면적인 재정 지표를 좋게 포장해 무분별한 세출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우려
 - 다년도 PB 관리로 전환하고 일시적 적자를 허용한다는 것은 현재의 재정건전성 이슈를 미래세대로 넘기는 것을 의미
 - 시장에서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재정건전성 관리를 포기했다고 판단할 경우, 국채 가치 하락,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작용 가능
- 재정지표 산정 제외는 ‘재정 분식(Fiscal Window Dressing)’에 가까울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처럼 엄격한 관리가 아닌 느슨한 관리로 비춰질수 있다는 점
- 별도관리분 산입 범위에 따른 새로운 재정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
 - 현행 예산관리체계에서 GX, AI·반도체 사례에 이어 조선·양자·중요광물 등 관련 사업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전체 사업대비 비중만큼 영향이 있음
 - 예를들어, GX, AI·반도체 집중 투자기에는 새로운 재정지표가 기존 지표보다 수치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2026.4.13 경제재정자문회의 자료: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26/0413agenda.html>

2026.6.24 합동회의 자료: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26/0624agenda.html>

2026.6.24 관저 총리 발언: https://www.kantei.go.jp/jp/105/actions/202606/24keizai_seichyou.html

2026.6.25 경제재정자문회의 자료: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26/0625agenda.html>

일본 재무성, 국채 개요: <https://www.mof.go.jp/jgbs/summary/kokusai.html>

일본 재무성, 예산 단년도 원칙·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 FAQ: <https://www.mof.go.jp/faq/budget/01an.htm>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骨太方針)2026 내용 및 시사점

김민경 부연구위원
작성시점 : 2026.7.6.

(1) 거시경제 운영과 재정정책 방향

■ 다카이치 내각은 종래의 재정건전화 우선 기조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국정 운영의 최상위 원칙으로 확립하며 산업정책의 근본적 재설정을 선언

- (정책기조 전환) “강한 경제”의 실현을 강조하는데 이는 단순히 경기회복이나 성장률 제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경제의 공급역량과 국민의 체감경기를 함께 높이는 것을 의미
 - 일본 정부가 말하는 “강한 경제”는 국내투자를 확대하여 공급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 기업수익과 임금상승이 소비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의미
 - 이러한 관점에서 거시경제 운영은 단순히 수요를 관리하는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생산능력과 혁신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문제로 설정
- (정부역할 재정의) 방침에서 “시장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민 연계 대규모·장기 재정지출 산업정책이 큰 조류가 되고 있다”고 명기하며 “정부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 관민이 손을 잡고 전략분야 투자를 진행한다”는 표현으로 관민 파트너십에서 정부의 능동적 역할을 재정의
 - 종래 시장주의적 접근은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에 국한되는 성격
 - 따라서 정부는 예산, 세제, 금융, 규제개혁, 공공조달을 결합하여 민간투자

유도 및 장기적 성장기반을 만드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

■ 「책임 있는 적극재정」은 거시경제 운영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으로 적극적 재정투자과 재정지속가능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확장재정과 구분

- (적극재정의 성격) 일본 정부는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투자를 확대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무제한적 재정책대로의 의미는 아님
 - 위기관리 투자는 재난, 안보, 에너지, 공급망, 필수서비스와 같이 국가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투자이며 성장투자는 첨단기술의 사회실장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의미
 - 두 투자 모두 단기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공급력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지출확대와 구분
- (책임성의 의미) 방침에서의 책임성은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출의 목적과 효과를 분명히 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
 - 국가·지방 채무잔고의 GDP 대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을 핵심 재정목표로 설정하고 경제성장률, 금리, 세수, 이자지출, 공채의존도 등의 종합적 관리
 - 따라서 책임 있는 적극재정은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그 투자가 성장과 재정기반 강화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재정운영”을 의미

■ 일본의 재정건전성 논의는 재정지속성으로 전환되어 단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 여부에만 초점을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채무경로와 경제성장력을 함께 보는 방식으로 이동

- (재정목표의 재구성) 문서에서는 재정운영의 핵심 목표를 국가·지방 채무잔고의 GDP 대비 비율의 안정적 관리
 - 기초재정수지, 즉 PB는 여전히 중요한 지표이지만 단년도 흑자 달성 여부만을 기계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채무잔고 GDP 대비 비율의 안정적 하락을

확인하는 보조적 지표로 활용

- 이는 경제성장률과 금리, 세수 증가, 투자효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고 재정수지만 보는 방식으로는 성장형 경제에 맞는 재정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기초
- (복수 재정지표의 활용) 일본 정부는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하나의 지표가 아니라 여러 재정·경제지표를 함께 분석
 - 채무잔고 GDP 대비 비율, PB, 재정수지, 이자지출, 공채의존도, 국채발행액, 세수, 명목 GDP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필요
 - 이는 재정건전성 판단을 단순한 지출삭감 여부가 아니라 경제규모 확대와 재정위험 관리의 결합 문제로 접근하려는 방향

■ 예산편성 방식에 대해서는 재정 단년도주의와 보정예산 의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략투자에 대해서는 복수연도 관점에서 예측가능한 재정지원이 필요

- (단년도 예산주의의 한계) 일본 정부는 단년도 예산주의가 민간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장기적 연구개발과 대규모 설비투자를 제약
 - 전략산업이나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불확실성이 높아 정부의 지원이 매년 불안정하게 변하면 민간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움
 - 정부가 중장기 정책방향과 재정지원 경로를 명확히 제시해야 민간투자가 실제로 유발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
- (보정예산 의존 축소) 대규모 보정예산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항구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은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방향
 - 보정예산은 경기급변이나 긴급상황 대응에는 필요하지만 반복적으로 활용될 경우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재정투명성을 약화
 - 일본 정부는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투자를 당초예산 중심으로 제도화하고 보정예산은 긴요성이 높은 사안에 한정하려는 방향

■ 2027년도 예산을 “책임 있는 적극재정 원년”으로 설정한 것은 일본 정부가 예산편성 방식을 단순한 연례 절차가 아니라 경제구조 전환의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미

- 2027년도 예산은 기존의 디플레이션·저성장 시대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성장형 경제에 맞는 예산편성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예산
 - 물가와 임금 상승을 예산단가에 반영하고 행정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위탁비, 보조비, 공공조달 단가 등을 조정
 -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비용은 반영하되 정책효과와 구조개혁을 통해 지출의 질을 높이려는 접근
- (투자예산의 별도 관리)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투자를 위한 별도 투자틀을 마련하고 이를 일반적인 세출통제 방식과 구분
 - 투자는 전년도 예산액에 얽매이지 않고 복수연도 계획과 민간투자 유발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설계
 - 다만 재정규율 약화로 이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정책효과 검증, 성과지표, 지출 우선순위 조정, 기존사업 구조조정이 함께 요구

■ 금융정책과의 관계에서는 정부와 일본은행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디플레이션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물가안정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방향

- (물가와 임금의 선순환) 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임금도 함께 오르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성장형 경제로 전환 가능
 - 단순히 물가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상승과 생산성 향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가운데 2% 물가안정 목표가 지속적으로 달성되는 것을 목표
 - 이는 물가상승을 경제위험으로만 보지 않고 임금과 투자, 소비가 함께 움직이는 경제구조 전환의 일부로 이해하는 접근
-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분담) 일본은행이 경제·물가·금융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적절한 금융정책을 운영할 것을 기대한다고 제시

- 정부는 재정·산업·규제·인재정책을 통해 공급력을 높이고 일본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거시경제 운영의 역할분담을 설정
- 일본의 거시경제 운영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분리된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성장형 경제 전환을 위한 결합된 정책조합으로의 관점

(2) 성장력 강화와 안전·안심 확보

■ 강한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정책, 외교안보, 국민안전의 3대 축을 각론적으로 규정하는 방침으로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투자의 지출대상을 정의

- (관민투자 370조엔·GDP 1,100조엔 목표) 17개 전략분야¹⁰¹⁾ 62개 주요 제품·기술 분야에 대해 2040년도까지 누계 370조엔 초과와 관민투자를 상정하며 성장전략 효과가 충분히 발현될 경우 2040년도 국내 민간설비투자 연 230조엔, GDP 1,100조엔에 육박하는 경제성장이 실현 가능하다고 명기
-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재원을 확보한 별도관리 예산 외에 매년도 실질 10조엔의 추가 지출을 상정한 시안이 제시되어 향후 예산 규모의 대략적 방향성 확인
- 기존성장전략의 “중점분야” 추상적 나열에서 벗어나 예산·세제·규제·조달·인재 지원을 일체적으로 결합하는 패키지 접근으로 전환

■ “피지컬 AI”를 축으로 하는 전산업 AI 트랜스포메이션(AX)을 관민투자의 가속장치로 배치하여 미국·중국과 구별되는 일본 특유의 AI 산업전략을 확립

- (피지컬 AI 축 설정) 방침은 “피지컬 AI(특히 AI 로봇)”를 62개 주요 제품·기술의 필두에 배치하고 이를 축으로 하는 AX를 전산업에서 가속하여 인구감소 하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도모
- 미국의 대형언어모델(LLM) 우위가 하드웨어 통합 기술이 필요한 물리적 AI 영역에는 자동 확장되지 않는 점을 활용하여 일본의 현장 데이터와 제조업

101) AI·반도체, 정보통신, 양자, 방위산업, 항공·우주, 해양, 조선, 소재, 바이오, 창약·첨단의료, 자원·에너지 안보·GX, 퓨전에너지, 방재·국토강인화, 항만로지스틱스, 푸드테크, 콘텐츠

기반이라는 강점을 결합한 국가전략을 채택

- “열린 AI 주권” 개념 하에 EU의 규제 우선 접근이나 미국의 시장방임 접근과 구별되는 균형 접근을 지향하며 디지털행정재정개혁회의 개편을 통해 총리 직속의 다부처 프레임으로 격상

■ 「지역미래전략」을 신규 도입하여 기존 지방창생과 차별화된 산업기반 구축형 지역정책으로 전환하고 실질임금 연 1% 상승과 최저임금 1,500엔 목표로 임금인상 사회분위기 정착

- (지역미래전략) 기존의 지방창생에 더해 강한 지역경제 구축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접근으로 「지역미래전략」을 강력 추진하며 광역블록 단위의 「전략산업 클러스터 계획」과 지역발 「지역산업 클러스터 계획」을 이원적으로 운영
 - 기존 이주·인구유입 지원과 지방교부금 확대 중심의 재정이전 접근에서 조선 도크·로켓 발사장 등 민간 클러스터 거점 정비와 공급망 기업 투자지원을 대담하게 진행하는 산업기반 구축형 접근으로 전환
 - 임금인상은 2029년도까지 실질임금 연 1% 상승을 정착시키고 최저임금 1,500엔의 2030년대 전반 조기 달성을 재확인하되 관공수 부문 「가격전가·거래적정화 가속화 플랜」에 따라 2027년도 말까지 실세가격 반영 예정가격 작성 100% 실시를 통해 공공부문 선도의 실행력 확보

■ 국가정보회의·국가정보국 신설과 5년 이내 방위력 근본 변혁을 통해 인지전 시대의 안보역량을 근본적으로 확충하며 경제안보를 산업정책과 표리일체로 재편

- (정보자원확충 및 경제안보 일체화) 국가정보회의·국가정보국 설치를 명기하며 인적정보(HUMINT) 등 대외정보수집 기능 확충과 정보수집위성 기수 증가를 통한 정보력 근본 강화를 예고
 - 경제안보를 위기관리 투자·성장 투자와 “표리일체”로 규정하여 산업정책과 경제안보를 통합 정책영역으로 재편하고 국가안전보장국을 사령탑으로 하는 추진체제를 확립

■ 방재청 신설과 부수도(副首都) 정비를 통해 대규모 재해 및 수도 기능 정지 리스크에 대비하는 국토 이중화 프레임 확립

- (방재청·부수도 정비) 방재청 설치를 통해 사전방재의 철저한 추진과 발재시부터 복구·부흥까지 일관된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고 종래 내각부·소방청·국토교통성 분산 구조의 사령탑 취약성을 개선
 - 국가사회기능 계속성 확보와 다극분산형 경제권 형성 관점에서 관련 법안 성립을 전제로 수도중추기능 대체지역 및 부수도 정비를 진행하며 부수도를 활용한 선진적 규제개혁 실장을 병행하여 상시적 다극분산 프레임의 제도화

(3) 「2027-2040 중장기 경제재정계획」과 재정운영 프레임 근본 개편

■ 「중장기 경제재정계획」을 통합하여 2027~2040년도의 14년 계획기간에서 재정 운영·사회보장·주요 분야별 시책을 관통하는 재정정책의 핵심으로 배치

- (계획기간 확장) 종래 「경제·재정 신생계획」을 쇄신하여 방침 제3장 자체를 “책임 있는 적극재정에 기반한 「중장기 경제재정계획」”으로 자리매김하고 계획기간을 2027~2040년도의 14년간으로 설정하여 장기 산업정책 사이클과 정합적인 재정운영 기반을 확립
 - 종래 5년 단위 편성으로 인한 반도체·바이오·에너지 전환 등 장기 투자 사이클과의 시간축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재정운영 목표·투자틀·기금물·사회보장·교육·사회자본을 통합적으로 규정
 -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원칙 5년마다 포괄적 검증과 반년마다 「중장기 경제재정 시산」 공표를 통한 상시 점검의 이중 검증 체계를 확립하여 장기 계획의 유연성 확보

■ 통상 세출과 별도의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틀』 창설을 통해 요구실링을 폐지하고 잠재성장률 인상 효과가 높은 정책 예산요구 가능

- 위기관리 투자·성장 투자를 예견가능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통상 세출과는 별도의 특별 프레임으로 요구상한(실링)을 설정하지 않으며 필요액을 적절히 요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
 - 종래 전년도 수준 기준의 실링 방식으로 인한 예산 규모의 하방 경직성과 상방 억제성 동시 작동 문제를 해소하고 재정건전화 명분으로 봉쇄되어 온 전략분야 대규모 지출의 정책여지를 대폭 확대
 - 경제안보상 특히 중요한 분야는 특별회계에서 별도 관리하고 “연결국채” 발행을 통해 필요자금의 선행 조달을 가능화하되 채무비율·PB 등 지표에서 별도 관리하는 방식으로 표면상 재정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여 재정 투명성 관점의 논란 여지 존재

■ 보정예산 의존 탈피와 기금 3년 룰 재검토를 통해 예산 투명성·규율을 회복하는 동시에 장기 투자에 최적화된 예산제도 재설계

- (보정예산 규율화 및 기금룰 재검토) 방침은 종래 대규모 경제대책 기반 보정예산 의존 운영에서 탈피하여 보정예산은 “긴급성 높은 것에 한정”하며 항상적 시책은 당초예산에서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2026년 내 예산편성 기본방침 개정에 반영
 - 기존 성장전략·지역대책 등 항상적 시책까지 폭넓게 편성되어 실질적 재정책장 수단으로 기능하던 보정예산의 긴급성 요건을 엄격 적용하되 필요한 위기관리·성장 투자는 투자틀을 통해 별도 확보하는 이원적 구조로 재편
 - 기금에 대해서는 성과관리·자금효율·투명성 강화를 통한 거버넌스 확립을 전제로 “예산조치는 원칙 3년 이내” 현행 룰을 불적용하는 방안을 포함

■ **현역세대 보험료율 상승 억제 방침 하에 급부·부담 개혁의 세부 스케줄을 제시하고 사회보장 관계비에 물가·임금 상승 반영을 명시하여 종래 억제 물을 실질적으로 완화**

- (사회보장 개혁) “현역세대 보험료율의 상승을 멈추고 인하해 간다”는 방침 하에 거시적 사회보장 부담률 목표 검토를 진행하고 2026년도 중 개혁의 구체화와 공정 명확화를 도모
 - 의료보험 창구부담 재검토는 202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개호보험 2할 부담 판단기준 재검토는 2026년도 중, OTC 유사약 보험급부 대상범위 확대는 2027년도 이후 결론을 명기하며 2028년도 이후 지역실정 고려한 의학부 정원 삭감은 인구감소기 의료인력 공급 조정의 정책신호로 작용
 - 사회보장 관계비에 대해 고령화 자연증분에 경제·물가동향 반영 대응분을 가산하는 방식을 명시하여 종래 “고령화 자연증 이내 억제” 물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되 2027년도 사회보장 부담률이 2025년도 대비 상승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이중 규율 구조를 채택

■ **인문사회계 다운사이징과 교직조정액 10% 인상을 통해 대학 재편과 교사 처우 개선을 병행하며 R&D 투자 목표를 정부 60조엔·관민 180조엔으로 확정**

- (대학 개혁 및 교사·R&D 투자) 2030년까지를 제1기로 대학의 기능강화·규모 적정화를 총합적으로 추진하며 대도시권 대학의 성장분야 중시와 “인문사회계 다운사이징 및 이수분야 병수를 통한 질 향상”을 명기하여 학문분포의 중대한 재편 신호를 발신
 - 이공·디지털 인재 육성, 17개 전략분야 고도인재 육성, 실수요 대응 리스킬링, 경쟁력 상실 대학 철수 유도를 통해 고등교육 구조조정을 국가 차원에서 유도
 - 교사 처우 측면에서 2029년도까지 시간외 재교시간 월 30시간 축소, 교직 조정액 2030년도까지 10% 인상 목표를 제시하고 R&D 투자는 2030년도까지 정부 60조엔·관민 180조엔으로 설정하며 연구비 전면 기금화를 통한 연구 시간 확보 도모

(4) 2027년도 예산편성지침

■ 2027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개산요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청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규정

- 2027년도를 “책임 있는 적극재정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고 예산편성 방식의 근본 개편을 반영하는 첫 예산으로 편성하여 정책기조 전환의 실질적 첫 시험대로 위치
 - 기존 다단계 절차를 거쳐 구체화되던 개산요구 기준 및 예산편성 방침의 내용을 실무 지침 수준으로 확보하여 방침과 예산의 시간차를 최소화하고 실행력을 확보
 - 2025년도 명목 GDP 4% 초과 증가와 실질 GDP 0.8% 증가로 민간주도 순환 발생을 확인하되 중동정세 등 해외 리스크와 인구감소 등 경기 구조적 과제 이슈와 원유 대체조달·비축 방출을 통한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기동적 대응을 명기

■ 일률억제형 요구를 폐지하고 물가·임금 상승을 개산요구에 적확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인건비·청비·보조비·위탁비 등 세부 단가 개정을 명시

- 기존 일률억제형 요구 방식을 재검토하여 행정서비스 수준의 실질적 유지가 가능하도록 물가·임금 상승을 적확 반영하고 공정가격·기준액·역치의 필요한 점검·재검토를 진행한다고 명기
 - 인건비·청비 등 행정기관 운영경비와 보조비·위탁비 등 사업경비 각각에 적절한 단가 개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출의 실질가치 유지를 제도화
 - 정책별 코스트 정보를 활용한 PDCA*·EBPM** 기반 기존사업 부단한 재검토와 “조세특별조치·보조금·기금의 재검토” 자기점검 결과를 개산요구에 반영하여 정책효과 높은 분야로 중점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처 스스로의 사업 재검토 책임을 예산요구 단계부터 명확화

* Plan(계획)-Do(실행)-Check(점검)-Act(개선)**의 4단계 순환 관리 프레임으로 정책·사업의 지속적 개선을 도모하는 관리 기법

** Evidence-Based Policy Making(증거기반 정책결정)

■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틀』 구체화와 보정예산·당초예산 구분 명확화 기금 3년 룰 불적용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하는 3대 핵심 과제 제시

- (투자틀·보정예산·기금룰 3대 과제)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틀』에 대해 「일본성장전략」·「지역미래전략」 등을 반영하되 그 규모는 재정지속가능성을 실현하면서 필요충분한 규모를 확보한다고 명기하며 실링 없이 사항요구까지 허용하는 요구 방식과 함께 국제경쟁 관점을 개산요구 단계부터 도입
 - 보정예산 의존 탈피를 예산 투명성·규율 제고 조치로 긴급성 높은 시책에 한정 하되 지방재정 운영과 원활한 사업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지방재정 조치를 병행하며 2026년 내 예산편성 기본방침 개정에 반영
 - 기금룰 근본 재검토의 실행 시점을 2027년도 예산편성으로 확정하여 “예산조치는 원칙 3년 이내” 현행 룰의 불적용을 포함한 재검토를 실시하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따른 검증·평가를 실시하고 연말 예산 반영 상황과 경제사회 정세 변화를 반영한 예산편성 기본방침의 필요한 개정을 실시하여 예산편성 과정 자체의 상시 검증 체계를 확립

(5) 시사점

■ 일본이 20년 이상 사용해 온 “재정건전화(財政健全化)” 용어를 완전히 폐기하고 “재정지속가능성(財政の持続可能性)”으로 전환한 것은 재정정책 언어·지표·프레임의 통합적 재설계를 상징

- “재정건전화”는 2001년 고이즈미 내각 이후 20년 이상 「골태방침」의 중심 재정철학으로 특정 시점의 PB 흑자화 달성이라는 규범적·목표지향적 재정정책을 상징하였으나 이번 방침에서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고 “재정지속가능성”으로 통일된 것은 아베노믹스 이후 재정정책 패러다임의 근본 전환을 의미
 - “재정건전화”는 흑자 달성이라는 flow 개념이고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와 결합되어 사용되었으나 “재정지속가능성”은 채무 상환 능력의 지속 유지라는 상태 관리적 stock 개념으로 채무잔고 대비 GDP 비율 관리 프레임과 정합

□ 통상 예산지출과 별도로 창설된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틀』은 요구실링 폐지·사항요구 허용·복수년도 계획을 결합한 전략투자 예산 별도관리 프레임으로 한국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첨단산업 지원 예산편성 방식 및 도입예정인 미래대응기금에의 시사점 제공

- 일본이 통상 세출과 분리된 특별 프레임을 창설하고 실링 없이 허용하는 방식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장기 투자 사이클을 가진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예산제도의 신속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접근
 - 한국은 반도체특별법·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개별 산업 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 부처의 사업예산 형태로 편성하여 부처 간 조정과 우선순위 재조정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 기반의 산발적 지원 방식이 정책자원 동원력의 한계
 - 일본식 통합 투자틀은 국민 투자 로드맵과 예산편성의 직접 연계를 통해 정책 정합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구조지만 연결국채 별도관리 방식은 재정 투명성 관점의 논란 여지가 있어 지표 관리와의 정합성 확보 방안 병행 검토 필요

□ 보정예산 의존 탈피와 항상적 시책의 당초예산 조치 원칙 확립은 아베노믹스 이후 관행화된 대규모 보정예산의 규율 회복 조치로 한국의 추경예산 편성 관행에 대한 시사점 제공

- 일본이 보정예산을 “긴급성 높은 것에 한정”하고 항상적 시책은 당초예산에서 조치하는 원칙을 명확화한 것은 종래 성장전략·지역대책 등 항상적 시책까지 보정예산으로 폭넓게 편성해온 관행을 시정하려는 조치로 예산 투명성·규율 제고 관점에서 중요
 -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수년간 추가경정예산이 경기대응·재난대응 목적을 넘어 세수결손 보전·항상적 지출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어 일본과 유사한 예산 규율 회복 논의의 정책적 함의를 지님
 - 다만 일본이 보정예산 축소와 병행하여 위기관리·성장 투자를 투자틀을 통해 별도 확보하는 이원적 구조를 채택한 점은 단순한 예산 축소가 아닌 예산 배분 구조 자체의 재설계가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

2026-2027년 유로존 재정 기초 평가¹⁰²⁾

김 명 규 연구위원
작성시점 : 2026.7.9.

(1) 경제 전망 및 거시경제 지표

■ 실질 GDP 성장률 및 수요 구성

- (성장 둔화)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025년 1.4%에서 2026년 0.9%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2027년에는 1.2% 전망
- (수요 요인) 임금 성장과 고용 확대로 민간 소비는 성장 요인이거나, 구매력 저하와 차입 비용 상승으로 투자 증가세 둔화와 순수출 부진은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 예상

■ 인플레이션 현황

- (HICP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은 2025년 2.1%에서 2026년 3.0%까지 상승 후, 2027년 2.3%로 완화 전망
* 조화소비자물가지수(HICP)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물가 지표로, EU 국가 간에 통일된 방법론에 따라 산출
- (GDP 디플레이터) 생산 요인을 반영하는 GDP 디플레이터는 2026년 2.3%에서 수익 증가 영향으로 2027년 2.4%로 상승 전망

102) 2026. 7. 8. EC, 발간 보고서, "An Assessment of the Euro Area Fiscal Stance in 2026 and 2027 amid an Energy Supply Shock", European Economy Economic Brief 91.

그림 1 유로존 경제성장을 및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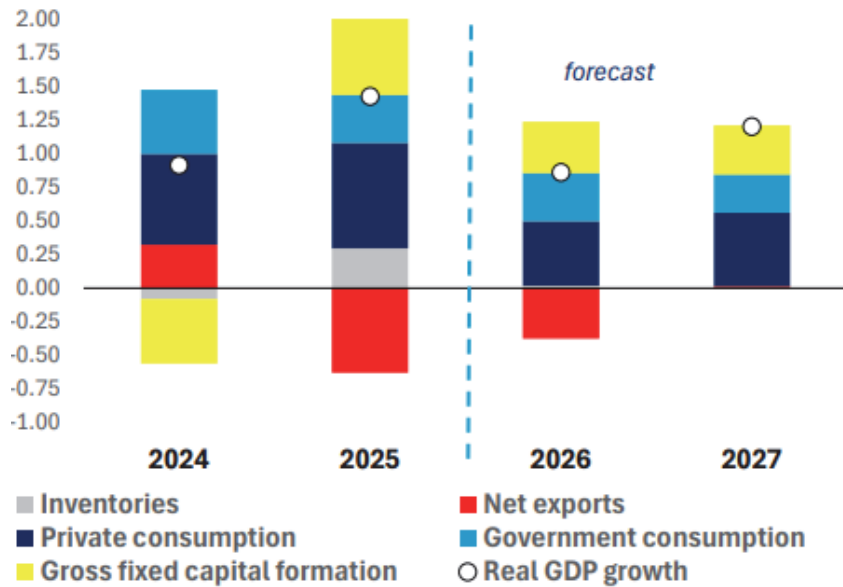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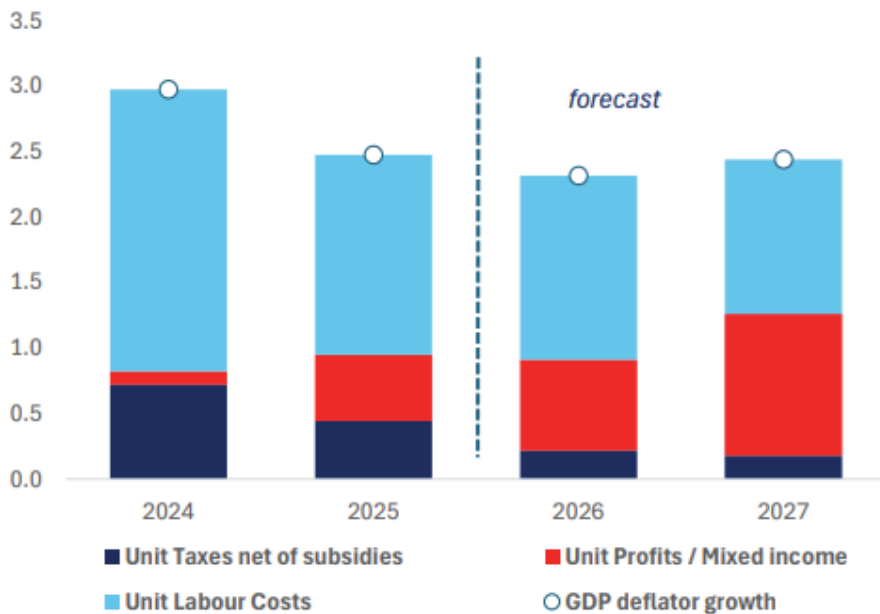


그림 2 유로존 GDP 디플레이터 성장 및 요인



자료 : European Commission Spring 2026 Forecast.

(2) 에너지 가격 충격의 재정적 영향

■ 인플레이션과 세수입 감소 영향

-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과 수요 위축의 악순환이 발생
- 기업 이익 감소로 법인세(CIT)가 줄어들고, 노동 시장 약화로 소득세와 사회 보장 기여금이 감소, 비에너지 소비 감소로 부가가치세(VAT) 수입이 상쇄

■ 재량적 재정지원 압박

-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피해 완화를 위한 재정 압박
 - 타겟팅되지 않은 광범위한 지원은 상당한 재정비용 초래

■ 통화-재정 상호작용 경로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 통화 정책과 재정 완화 압력 사이의 긴장 발생
 - 일시적이고 표적화된 재정 대응이 요구

■ 금융 시장 경로

-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은 특히 고채무 국가의 차입 비용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제한

(3) 유로존 재정 기조 평가(2025-2027)

■ 2026년 확장 기조 : 소폭 확장

- 경제 환경 악화와 불확실성 증대를 고려할 때, 2026년의 중립~약간의 확장 기조는 거시경제 안정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평가

- 확장 요인으로서는 에너지 관련 지원, 일부 회원국의 재량지출 확대, EU 차원의 투자 프로그램, 국방 및 에너지 안보 지출 증가 등
- 다만, 과도한 확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켜 통화 정책과의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을 견지
- 高 부채 회원국의 경우 재정 여력이 제한
 - 단기 대응 정책도 재원 조달 방안과 일몰 장치 명시 필요
 - 또한 공공투자는 유지하되 경상지출의 구조적 증가 억제 필요

■ 2027년 재정기조 : 중립 전망

- 재정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회원국은 권고된 수지 경로를 준수하기 위해 2027년 예산에서 추가적인 긴축 조치를 채택
 - 계획대로 이행 시 유로존 전체 기조는 약 0.5%의 긴축 성향
- 에너지 충격이 장기화되거나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재확대 시 2027년에도 추가 재정 수요가 발생 가능성
- 중립적 기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임시 조치*의 종료,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

* RRF(회복부흥기금) 자금 지원,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지원 조치, 민간 투자 보조금

표 1 유로존 재정기조 요약 : 2025-2027

연도	재정 기조	주요 원인 및 특이사항
2025	광범위한 중립	순 경상지출 조정(긴축)과 RRF 및 국가 투자 증가(확장)가 상쇄됨.
2026	약간의 확장 (0.27%)	RRF 지출 가속화, 국방 지출 확대, 에너지 지원 조치 반영.
2027	중립 (정책 불변 시)	RRF 종료에 따른 긴축 효과를 국가 재정 국방 지출이 일부 상쇄.

주 : 회복부흥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은 NextGenerationEU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림 3 유로존 재정기조(%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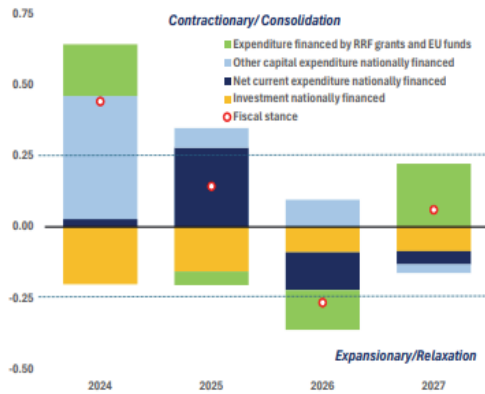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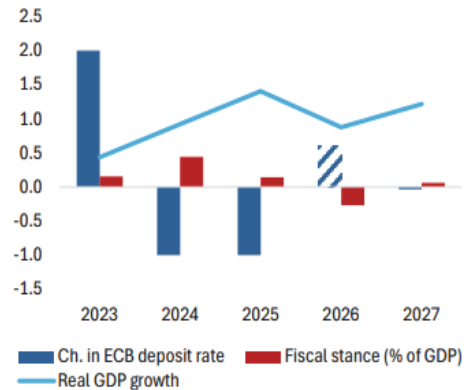


그림 4 유로존 재정기조와 이자율(%)



주 : 재정 기조는 GDP의 -0.25%에서 +0.25% 범위 내에 있을 때 대체로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
 2026년 및 2027년 ECB(유럽중앙은행) 예금 금리 변동은 전망 당시의 시장 기대치
 ECB는 2026년 6월 11일에 금리를 25bp(베이스스 포인트) 인상했으며, 현재 금융 시장은 2026년 말까지 25bp의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반영

자료 : European Commission Spring 2026 Forecast.

□ 국가별 재정 기조의 이질성

- (2025년)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8개국은 긴축, 슬로베니아, 벨기에 등 9개국은 확장 기조
- (2026년) 에스토니아, 그리스 등 11개국은 확장 기조가 예상되는 반면, 프랑스, 벨기에 등 고적자/고채무 국가는 순 경상지출 성장을 억제하며 긴축 기조 전망

□ 국방 지출 및 국가 면제 조항(NEC)

- 유럽의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 면제 조항*(National Escape Clause)’이 국방 지출에 적용
 - * 회원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예외적 상황 시, 재정준칙(수지, 채무) 규정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완화하는 조치
 - 벨기에, 독일,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등 유로존 14개국을 포함한 18개 EU 회원국에서 활성화

- 유로존(EA21) 평균 총 국방 지출은 2024년 GDP의 1.4%에서 2027년 1.9%로 증가할 전망
 - 에스토니아(5.4%), 라트비아(5.5%), 리투아니아(3.5%) 등 발트해 연안 국가들의 지출 비중이 높음

(4) 시사점

▣ 유럽은 에너지 충격 대응 과정에서 전면적 보조금보다 선별적·한시적 지원으로 정책 초점 이동

- 물가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으로 평가

▣ 재정정책은 통화긴축 또는 물가안정 기조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될 필요

- 2026년 소폭 확장 재정은 경기 방어 성격이 강하나, 고물가 위협으로 인해 전통적 의미의 적극적 경기부양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평가

▣ 향후 유럽 각국은 재정준칙 복귀와 전략 분야 투자 확대 사이에서 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에너지 안보와 국방 지출 확대는 유럽 재정운용의 새로운 구조적 부담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

▣ 한국의 재정운용에도 에너지·민생 지원의 대상 설정, 일몰 설계, 재원 보전, 총량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 대외 에너지 가격 충격이 수입물가, 산업 원가, 수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 지원 정책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계 필요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AI 활용 동향

– 집행 적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서 영 빈 부연구위원

작성시점 : 2026.8.5.

(1) 배경 및 필요성

■ (재정지출 효율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지출을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주요 재정운용 과제

- 재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오류, 중복·부적정 지급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지출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 필요

- 주요국 사례에 따르면, 부정·오류에 따른 재정손실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재정집행 과정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식별·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관리 필요성이 확대

* 영국은 2025/26년 복지급여의 부정·오류에 따른 순손실은 약 86억 파운드로, 전체 급여지출의 2.8% 수준(영국 노동연금부, 2026)

* 미국의 부정 지출로 직접적인 재정손실을 추정한 결과, 연간 약 2,330억~5,210억 달러로 연평균 지출액의 약 3~7% 수준(미국 회계감사원, 2024)

■ (AI 활용 확대) 데이터 기반 재정집행 관리를 위한 AI 활용 가능성 확대 추세

- AI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오류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식별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는 등 재정집행의 적정성 제고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
- OECD는 공공부문에서 AI가 업무 효율화뿐 아니라 부정행위 탐지, 감사·감독 지원 등 재정관리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 (분석 방향) AI를 활용한 재정집행 적정성 관리 사례와 운영체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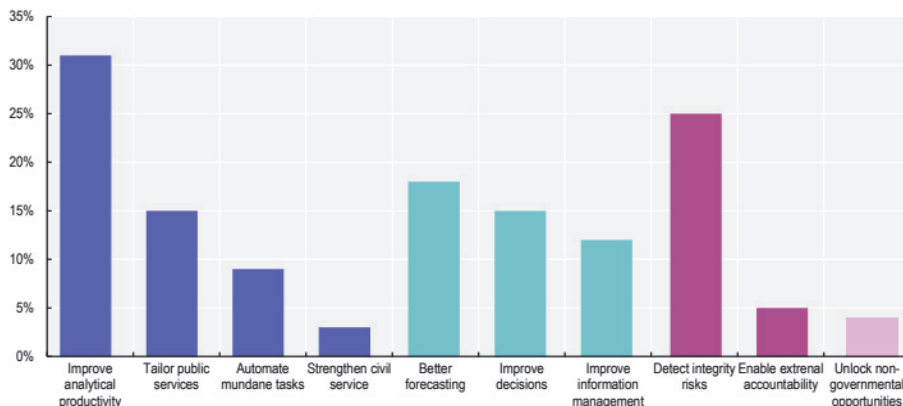
- OECD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AI 활용 분야와 방식, 운영특징 등 동향 정리
- 영국·미국·EU 등 주요국 사례를 통해 AI 기반 부정·오류 탐지, 점검 대상 선별, 분석 결과 검증 및 활용 방식 등을 살펴보고, 재정집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2) AI 활용 동향

▣ (활용 분야) 재정집행 관리 및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AI 활용 확대

- OECD 분석 결과, 공공부문에서 AI는 행정업무 자동화·프로세스 개선뿐 아니라 부정행위 탐지, 감사·감독 지원 등 재정관리 분야에서도 활용
 - * 공공부문 AI 활용 사례는 업무 자동화·프로세스 간소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효율성 제고 목적의 활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부정행위 탐지 및 책임성 강화 부문에서도 나타남
 - 다만, 부정행위 및 책임성 강화에 관한 AI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 다수 기관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제한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 * 39개 국가의 59개 기관 중 약 50%(30개 기관)는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지 않고 활용 가능성을 검토 중

그림 1 공공부문의 AI 활용 분야



자료: OECD(2026)

■ (활용 방식)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험 식별 및 검토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활용

-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 패턴, 거래·행동 패턴 및 숨겨진 연관관계를 식별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활용
- 부정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보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석도구로 활용
 - 위험도가 높은 대상을 우선 선별하여 조사·감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 AI 분석 결과는 담당자의 추가 검토와 후속조치를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

■ (운영 원칙)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강조

- AI 활용 과정에서 담당자의 검토, AI 판단 과정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가 주요 원칙으로 제시
 - 데이터 품질 관리와 모델 성능 검증을 통해 AI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
 - AI 활용 범위와 담당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및 후속 조치가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

(3) 국가별 사례

■ (개요) 최근 정책자료와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재정집행 관련 AI 활용 방식과 관리 체계를 검토

- 주요국은 AI를 활용하여 재정집행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담당자 검토와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책임 있는 활용체계를 마련
 - 영국·미국·EU의 운영 사례와 활용 동향 및 국내 사례를 검토하여 AI 활용 분야와 특성을 도출

■ (영국) AI 기반 위험 분석을 통해 복지급여 지급 전 부정·오류 위험을 식별하고 효율적인 점검체계를 운영

- (활용분야) 복지급여의 부정·오류를 줄이고 지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머신러닝을 활용
 - 노동연금부(DWP)는 복지급여 선지급금* 신청을 대상으로 AI 활용하여 지급 전 부정위험을 평가하고, 조사 대상을 선별
 - * 선지급금: 복지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첫 급여를 받기 전까지 생계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미리 지급하는 무이자 선급금으로, 이후 지급되는 복지급여에서 분할 상환하는 제도
 - AI가 지급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지원 수단으로 활용
- (위험관리) AI를 활용하여 지급 전 위험 분석을 통해 조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 머신러닝 모델이 신청 건의 위험도를 분석하여 위험도가 높은 사례를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례에 자원을 집중
- (운영특징) AI 활용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며, 알고리즘 기록과 모델 효과성 평가를 공개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체계를 마련
 - 노동연금부는 모델의 운영 효과와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능 저하 또는 통계적 불균형이 확인될 경우 모델을 재학습하는 등 AI의 신뢰성을 지속 관리
 - AI 활용 목적, 판단 지원 범위 및 운영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미국) AI 및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재정지원사업의 위험을 관리하고 재정집행의 적정성 제고

- (활용분야) 재정지원사업의 부정·오류 관리 및 재정집행 적정성 제고를 위해 AI에 기반한 분석 결과를 활용
 - 보건복지부(HHS)는 2026년 5월 감사·위험관리 프로그램(AERO)을 출범하고,

차세대 AI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연방 재정지원사업의 감사자료 분석 및 위험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

* 보건복지부 사업 추진 중 2025년에 약 973억 달러 규모의 부적정한 지급이 발생하였으며, Medicaid와 Medicare 프로그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회계감사원(GAO)은 AI가 부정 및 오류 지급 대응, 위험 분석 및 재정프로그램 관리 개선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시
- (위험관리) AI 분석으로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사후 검증 결과를 재정관리 개선에 적용
 -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의 감사자료를 AI로 분석하여 반복적인 내부통제 미흡, 미해결 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례를 식별
 - 분석 결과, 일부 내부통제 미흡 사항은 3년 이상 반복되었으며, 수백 개의 보조금 수혜기관에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등 재정의 낭비(Waste), 부정(Fraud), 남용(Abuse) 등의 위험요인을 확인
- (운영특징) AI 활용결과를 후속조치와 연계하여 재정집행의 책임성 강화
 - AI 분석 결과로 반복되는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행정·재정적 후속조치를 연계함으로써 재정지원사업의 책임성과 적정성을 강화

■ (EU) 회원국의 AI 활용 사례 공유를 통한 부정방지 역량 강화

- (활용분야)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AI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위험분석과 부정방지 사례를 공유
 - 체코·이탈리아·포르투갈은 국가 반부정 전략에 AI 활용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벨기에·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헝가리·슬로베니아 등은 반부정 관리 절차에서 AI를 활용
 - 회원국은 농업·관세 분야를 중심으로 이상징후 탐지, 위험 분석, 감사 지원, 부정 가능성 예측, 위험점수 산정, 네트워크 분석, 자동 송장 검증 등에 AI를 활용

- (위험관리) AI를 활용하여 위험도가 높은 대상 식별 및 점검 효율성 제고
 - AI 분석을 통해 이상징후가 있는 거래와 사업을 식별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례를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위험 기반 관리에 활용
 - 다만, 회원국별 AI 활용 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며 현재는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 경험을 축적하는 초기 단계인 경우가 다수
- (운영특징) 회원국 간 AI 활용 경험과 위험분석 방법을 공유하여 AI 기반 부정방지 역량을 강화
 - 국고보조금 집행에서는 중복수급, 자격요건 및 부정징후를 탐지하기 위해 e나라도움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운영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 AI 기반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하여 부정수급 위험을 예측하고, 부정 의심 사례를 선별하여 현장조사와 연계

(4) 시사점

■ (AI 활용 기반 마련) 데이터 기반 구축과 AI 분석 역량 및 공유 체계 구축 등 AI 활용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 필요

- 재정사업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관리, 분석 기반 구축 및 AI 활용 역량 확보 등 안정적인 운영 기반과 통합 체계 구축 필요
 - 영국은 데이터 품질과 모델 검증을 AI 활용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정확한 분석을 위한 데이터 관리와 지속적인 성능 검증을 강조
 - EU는 회원국 간 AI 활용 경험과 위험분석 기법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AI 활용을 위한 공통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 AI 분석 결과와 사후 점검 정보를 재정관리 개선에 활용하는 환류체계 마련 필요
 - 미국은 감사 과정에서 축적된 부정지출 관련 정보를 향후 재정지원 프로그램 관리 및 위험분석에 활용하는 등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강화를 추진

■ (재정관리 자원의 효율적 배분) AI를 활용한 선별·집중 관리체계 마련 필요

- AI를 활용하여 부정·오류 가능성이 높은 대상과 추가 점검이 필요한 사례를 선별하고, 한정된 조사·관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체계 마련 필요
 - 영국은 복지급여 신청 과정에서 AI를 활용하여 위험도가 높은 사례를 우선 선별하고, 조사 인력을 집중 배분
 - EU 회원국은 AI 기반 이상징후 탐지, 위험분석 등을 감사·점검 대상 선정에 활용

■ (책임 있는 AI 활용체계 구축) AI 기반 분석과 담당자 판단을 연계하는 운영체계 마련 필요

- AI는 도구로 활용하고, 담당자의 검토 절차와 분석 모형의 검증 등을 통해 최종 결과에 정확성 및 책임성 제고
 - 영국은 AI를 복지급여 지급 전 위험 선별에 활용하되, 지급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담당자가 수행
- * 영국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주택급여에 관해 AI가 탐지한 고위험 사례의 약 3분의 2가 정상 지급 건으로 확인되어, 검증체계의 중요함을 확인
- AI 활용 목적, 분석 결과의 활용 범위 및 판단 절차 등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 마련 필요
 - 영국은 AI 활용 목적과 적용 범위, 운영 방식 및 성능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체계를 구축

참고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26.3),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Outlook 2026.

영국 노동연금부(DWP), (2026.7), Effectiveness assessment of Universal Credit Advances model

_____, (2026.5), Fraud and Error in the Benefit System: Financial Year Ending (FYE) 2026 Estimates.

_____, (2025.12), DWP: Universal Credit Advances Model

미국 보건복지부(HHS), (2026.5), HHS Cracks Down on Years of Unchecked Audit Findings.

_____, (2026.2), FY 2025 HHS Agency Financial Report.

미국 회계감사원(GAO),(2026.5), Fraud and Improper Payments: Data Quality and a Skilled Workforce Are Essential for Rea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s Benefits (GAO-26-10885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2026.6), 37th Annual Report on the Protection of the European Union's Financial Interests and the Fight against Fraud, 2025.

참 고

국내 재정집행 적정성 관련 AI 활용 사례

■ 국고보조금 부정 사업 탐지

-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하여 허위신청, 중복지원 및 부적정 집행 등 이상징후를 분석하고, 점검 대상 선정에 활용
- 기획예산처는 차세대 e나라도움을 AI·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하여 보조금 교부부터 사후관리까지 AI 기반 부정 의심사업 상시 탐지체계를 구축 추진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6.2.)

■ 복지급여 조사대상 선정

-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급여 및 사회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여 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
- 보건복지부는 AI와 데이터 기반 분석을 활용하여 복지급여의 자격관리, 이상징후 탐지 및 부정수급 예방체계를 고도화 추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6.7.)

■ 사회보험급여 적정 지급 관리

- AI를 활용하여 대규모 청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상징후를 점검하는 등 보험금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제고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데이터 연계와 AI 기반 위험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을 효율적으로 선정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체계 구축 추진(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6.6.)

재정·통화정책의 비동조화 사례 분석

김 명 규 연구위원
작성시점 : 2026.8.13.

(1) 서론

■ 확장적 재정 추진 상황과 긴축적 통화 기조 상황이 동시에 발생

- 최근 확장재정기조, 통화 긴축 전환으로 '27 예산안 발표 전후 우리나라 재정·통화정책 비동조화(decoupling)에 대한 다수 지적 제기 전망
- * “통화는 ‘긴축’·예산은 ‘역대 최대’…재정 엇박자 우려도”(연합뉴스, 7.17)
“3년반 만에 긴축 돌입…통화·재정 정책 엇박자 경계해야”(서울경제, 7.17)

■ 재정·통화 정책 기조 비동조화의 의미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방향이 반대라는 사실만으로 정책 실패를 뜻하지는 않음
 - 확장재정은 총수요와 물가를 높여 중앙은행의 추가 긴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책효과가 상쇄 될 수 있음
 - 그러나 취약계층에 대한 일시·선별 지원, 공급능력 확충 투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는 통화정책과 목표·파급경로가 달라 반대 방향의 조합이 합리적일 수도 있음

■ 반대 방향의 정책이 합리적일 수 있는 조건

- 중앙은행은 총수요와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재정은 물가충격에 취약한 계층의 실질소득을 선별적으로 보전

- 에너지 인프라, 노동공급, 생산성 투자처럼 잠재산출을 높이는 재정지출은 단기 수요효과와 중장기 공급효과를 분리해 평가
- 디플레이션 시 금융완화와 동시에 중장기 증세·지출개혁을 실시하면, 단기 수요와 장기 부채 지속가능성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를 분담 가능

■ 분석 목적

- 재정 기조와 통화정책 변화의 부호가 반대인 사례 분석
 - 유로지역, 일본, 영국 사례 중심
- 재정 총량의 변화와 재정기조를 판단하고, 통화 기조와 비교하여 엇갈림 상황 판단
- 해외 유사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 검토

■ 재정기조 판단 기준

- 당해연도 기준, 전년대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 가지 방식으로 판단하고,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판단
 - 기준① 관리재정수지 적자(당해연도 확장) 또는 흑자(당해연도 긴축)
 - * 전년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상승(전년대비 확장적)
전년대비 관리재정수지 흑자 비율 하락(전년대비 긴축적)
 - 기준② 총지출 증가율 > 총수입 증가율(전년대비 확장적)
총지출 증가율 < 총수입 증가율(전년대비 긴축적)
 - 기준③ 총지출 증가율 > 경상성장률(전년대비 확장적)
총지출 증가율 < 경상성장률(전년대비 긴축적)

(2) 주요국의 사례 분석

가. 유로지역(2022-2023년)

■ 확장 재정정책 기조, 긴축 통화정책 기조

- 2022년 총재정기조를 명확히 확장적, 2023년을 대체로 중립적으로 설명
 - 2022년 에너지 지원의 직접 재정비용은 유로지역 GDP의 1.3%, 2023년 계획은 0.9%로 추정¹⁰³⁾
- ECB는 2022년 7월부터 금리를 올려 예금금리를 2022년 6월 -0.5%에서 2022년 12월 2.0%, 2023년 9월 4.0%까지 인상
 - ECB 추정으로 2022-2023년 에너지·물가 대응 재량조치의 총지원 규모는 각 연도 GDP의 약 2%에 근접 판단

표 1 유로지역 재정총량과 통화정책 추이: 2021-2025

항목	2021	2022	2023	2024	2025
총지출 (십억 USD)	7,800	7,268	7,868	8,199	8,964
총지출 증가율 (%)		-6.8	8.3	4.2	9.3
총수입 (십억 USD)	7,035	6,776	7,307	7,692	8,423
총수입 증가율 (%)		-3.7	7.8	5.3	9.5
재정수지 (십억 USD)	-765	-492	-561	-507	-541
재정수지 (GDP 대비 %)	-5.1	-3.4	-3.5	-3.1	-3.0
총부채 (십억 USD)	14,031	12,969	13,814	14,379	15,668
총부채 (GDP 대비 %)	93.4	88.9	86.5	86.6	87.1
명목GDP 증가율 (%)		-2.9	9.4	4.0	8.4
ECB 예금금리 변동	08/31 (-0.5%)	01/31(-0.5%), 07/29(0.0%), 09/30(0.75%), 10/31(1.5%), 12/30(2.0%)	01/31(2.0%), 02/28(2.5%), 03/31(3.0%), 05/31(3.25%), 06/30(3.5%), 07/31(3.75%), 09/29(4.0%)	01/31(4.0%), 06/28(3.75%), 09/30(3.5%), 10/31(3.25%), 12/31(3.0%)	01/31(2.75%), 03/31(2.5%), 04/30(2.25%), 06/30(2.0%)

103) Eurogroup, "Statement on Draft Budgetary Plans for 2023", 2022.12.5

항목	2021	2022	2023	2024	2025
재정기조① 재정수지	확장	확장	확장	확장	확장
재정기조② 총지출 vs 총수입		긴축	확장	긴축	긴축
재정기조③ 총지출 vs 경상성장률		긴축	긴축	확장	확장
재정정책 기조(종합)	확장	긴축	확장	확장	확장
통화정책 기조	완화 유지	긴축 전환	긴축	완화 전환	완화

주 : 일반정부 기준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ECB 기준금리(Bloomberg).

□ 지적사항

- 유럽재정위원회(EFB)는 광범위한 재정지원으로 ECB가 금리를 더 높일 수 있음을 경고¹⁰⁴⁾
 - 가격상한과 에너지 부가가치세 인하는 2022년 물가를 약 1%p, 2023년 약 0.5%p 낮췄지만, 지원 철회는 2024년 물가를 약 0.7%p 높일 것으로 언급
 - 광범위한 소득지원은 소비와 임금압력을 높여 근원물가의 지속성을 키울 수 있다고 평가

□ 대응 및 조정 사항

- Eurogroup의 공식 답변은 비동조화 정책이 아니라는 전면 반박보다 지원의 목적·설계·출구전략을 제시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충격에서 취약가구와 생존 가능한 기업 보호 차원
 - 2023년에는 광범위 총수요 부양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지원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하고 2단계 에너지가격제 등 절약 유인을 보존하는 방식 조건 검토
 - 에너지가격 압력이 낮아지면 지원을 단계적으로 철회하고,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축소와 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 투자 병행 약속

104) European Fiscal Board, "Assessment of the Fiscal Stance Appropriate for the Euro Area in 2024", 2023.6.28, pp.10-11.

□ 평가

- 긴급 보호조치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실제 선별 비중이 낮았다는 점에서 초기 정책은 통화정책 부담 확대
- 일시적·선별적·가격신호 보존·단계적 철회 등으로 대응

나. 영국(2022년)

□ 확장 재정정책 기초, 긴축 통화정책 기초

- 정부는 2022년 9월 23일 “Growth Plan”에서 6개월간 약 600억 파운드로 추정된 에너지 지원과 대규모 감세를 발표¹⁰⁵⁾
 - 차입으로 일시적 에너지 조치를 조달
- 영란은행은 2021년 12월 0.1%였던 기준금리를 2022년 9월 2.25%, 11월 3.0%로 올리고 보유국채 축소 추진¹⁰⁶⁾
 - 에너지요금 보장이 단기 CPI를 직접 낮추지만 민간수요를 지지해 비에너지 재화·서비스의 물가 압박

표 2 영국 재정총량과 통화정책 추이: 2020-2024

항목	2020	2021	2022	2023	2024
총지출 TME (십억 GBP)	1,048	1,043	1,116	1,216	1,263
총지출 증가율 (%)		-0.4	7.0	9.0	3.8
공공부문 경상수입 (십억 GBP)	773	868	997	1,050	1,088
총수입 증가율 (%)		12.2	14.9	5.3	3.6
공공부문 순차입 (십억 GBP)	-274	-175	-119	-166	-175
순차입 (GDP 대비 %)	-12.9	-7.5	-4.6	-6.0	-6.1
총부채 (십억 GBP)	2,226	2,403	2,517	2,721	2,888
총부채 (GDP 대비 %)	104.8	103.4	97.5	98.9	99.9
명목GDP 증가율 (%)		9.3	11.1	6.6	5.0

105) HM Treasury, “The Growth Plan 2022 Speech”, 2022.9.23;

106)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Report, 2022.11.

항목	2020	2021	2022	2023	2024
BOE 기준금리 변동		08/31(0.1%), 12/31(0.25%)	1/31(0.25%), 2/28(0.5%), 3/31(0.75%), 5/31(1.0%), 6/30(1.25%), 8/31(1.75%), 9/30(2.25%), 11/30(3.0%), 12/30(3.5%)	1/31(3.5%), 2/28(4.0%), 3/31(4.25%), 5/31(4.5%), 6/30(5.0%), 8/31(5.25%)	01/31(5.25%), 08/30(5.0%), 11/29(4.75%)
재정기조① 재정수지	확장	확장	확장	확장	확장
재정기조② 총지출 vs 총수입		긴축	긴축	확장	확장
재정기조③ 총지출 vs 경상성장률		긴축	긴축	확장	긴축
재정정책 기조(종합)	확장	긴축	긴축	확장	확장
통화정책 기조	완화 유지	긴축 전환	긴축	긴축	완화 전환

주 : 일반정부 기준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ECB 기준금리(Bloomberg).

지적사항

- IMF는 2022년 9월 27일 물가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대규모·비선별 재정패키지를 권고하지 않으며,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서로 반대 목적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 지적¹⁰⁷⁾
 - 고소득층에 유리한 감세는 불평등도 높일 수 있으므로 더 선별적인 지원과 감세안 재검토 권고

대응 및 조정 사항

- 초기 정부는 문제 에너지 조치로 물가 인하가 가능하며, 잠재성장률 달성 의지를 피력하며 대응하였으나, 결국 재무장관 경질(10.14)·총리 사임(10.20)
 - 에너지요금 보장이 물가 정점을 약 5%p 낮출 수 있으므로 물가 대응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주장

107) IMF, "Statement on the UK", 2022.9.27. <https://www.astrid-online.it/static/upload/imf-/imf-statement-on-the-uk-27-9-22.pdf>

- 감세·규제·인프라 개혁으로 공급 측을 확대해 중기 추세성장률 2.5%를 달성하겠다는 주장
- 새 정부는 아직 입법되지 않은 감세안 대부분을 철회해 연간 약 320억 파운드의 비용 감축(2022.10.17.)¹⁰⁸⁾
- 11월 Autumn Statement에서 “재원 없는 감세도 재원 없는 지출만큼 위험하다”고 명시하고, 단기 에너지·생계 지원 뒤 중기 재정긴축으로 전환

■ 평가

- 단기 물가상한·장기 공급확대 논리는 일부 경제적 근거가 있었지만, 비선별 감세와 불명확한 재정경로가 결합하면서 통화정책 부담·재정신뢰 문제로 발전
 - 정책 발표 직후 영국 국채금리와 파운드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이후 OBR은 대부분의 감세 철회와 2022년 11월 재정계획 이후 영국의 상대적 국채 스프레드가 되돌아왔다고 평가
- 사례는 독립적 비용추계, 재원, 선별성, 출구전략이 없는 주장이 왜 설득력이 약한지를 보여줌

다. 일본(2014)

■ 확장 재정정책 기초, 긴축 통화정책 기초

- 일본 정부는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함에 따른 명시적 긴축조치
- 일본은행은 통화기저를 연 60-70조 엔, 국채보유액을 연 약 50조 엔 늘리는 QQE(양적·질적 완화)¹⁰⁹⁾를 계속해 2% 물가목표 달성을 추진

108) HM Treasury, “Chancellor Brings Forward Further Medium-Term Fiscal Plan Measures”, 2022.10.17.
HM Treasury, “The Autumn Statement 2022 Speech”, 2022.11.17.

109)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asing, 기준금리가 이미 제로인 상태에서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에 더해, 매입 자산의 구성을 위험자산까지 넓히는 질적완화를 결합한 경기 부양책

표 3 일본 재정총량과 통화정책 추이: 2012-2016

항목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정부 총지출 (조 엔)	194	198	200	201	203
총지출 증가율 (%)		2.0	0.9	0.7	1.0
일반정부 총수입 (조 엔)	152	158	170	181	183
총수입 증가율 (%)		4.0	7.3	6.3	1.2
재정수지 (조 엔)	-42	-39	-30	-20	-20
재정수지 (GDP 대비 %)	-8.2	-7.6	-5.6	-3.6	-3.6
총부채 (조 엔)	996	1,035	1,076	1,099	1,124
총부채 (GDP 대비 %)	197.1	201.2	203.6	200.1	202.1
명목GDP 증가율 (%)		1.8	2.7	3.9	1.3
BOJ 정책금리 (%)			0.1	0.1	-0.1
재정기조① 재정수지	확장	확장	확장	확장	확장
재정기조② 총지출 vs 총수입		긴축	긴축	긴축	긴축
재정기조③ 총지출 vs 경상성장물		확장	긴축	긴축	긴축
재정정책 기조(종합)	확장	확장	긴축	긴축	긴축
통화정책 기조	완화	완화 확대	완화 확대	완화	완화 확대

주 : 일반정부 기준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BOJ 기준금리(Bloomberg)

□ 당시 상황

- 당시 ‘재정·통화 비동조화’보다 1997년 소비세 인상 뒤와 같은 소비 급감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
 - BOJ는 2014년 3월 경제가 1997년보다 충격에 강하고, QQE를 계속하면 2% 물가목표에 접근할 것으로 판단¹¹⁰⁾
 - IMF도 2014년 5월에는 일본이 소비세 인상의 영향을 잘 견디고 있으며 기초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¹¹¹⁾

110) Bank of Japa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netary Easing: Importance of Fiscal Consolidation”, 2014.3.19

111) IMF, 2014 Article IV Mission Concluding Statement, 2014.5.30.

□ 대응 및 조정 사항

- 경기위축*이 확인된 뒤 아베 총리는 2014년 11월 예정됐던 2차 소비세 인상(8%→10%)을 2015년 10월에서 2017년 4월로 연기

* 소비세 인상 뒤 소비와 GDP가 예상보다 크게 위축, OECD는 2015년 3월 보고서에서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 뒤 급격한 경기수축이 발생했다고 평가¹¹²⁾

□ 평가

- 이 사례는 방향상 비동조화에는 해당하지만, 통화정책이 재정긴축의 경기충격을 완충하고 재정은 장기 신뢰를 확보하도록 설계된 의도된 역할분담
- 문제는 정책 방향성보다 소비세 인상의 단기 충격이 예상보다 컸고 보완대책이 이를 충분히 상쇄하지 못한 데 있었음

라. 일본(2026)

□ 확장 재정정책 기조, 긴축 통화정책 기조

- IMF는 2026년 일본의 기초재정적자가 GDP 대비 2025년 0.9%에서 2026년 1.5%로 확대되고, 추경(2025.12)이 전년 추경보다 GDP의 약 1%만큼 커지면서 재정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¹¹³⁾
 - 2025-2026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아 양(+)의 산출갭이 형성되고, 확장적 재정이 근원물가를 압박할 수 있다고 분석
- BOJ는 2025년 12월 정책금리를 0.75%로 올린 뒤 2026년 6월 1.0%로 추가 인상

112)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2015.3, p.7.

113) IMF, Japan: 2026 Article IV Consultation, Country Report No. 26/75, 2026.4, paras. 18-21.

표 4 일본 재정총량과 통화정책 추이: 2022-2026

항목	2022	2023	2024	2025 (추정)	2026 (전망)
일반정부 총지출 (GDP 대비 %)	40	38	37	37	38
일반정부 총지출 (조 엔)	235.2	232.7	236.6	244.6	254.9
일반정부 총수입 (GDP 대비 %)	36	35	36	36	36
일반정부 총수입 (조 엔)	210.5	218.0	226.1	237.7	241.0
재정수지 (GDP 대비 %)	-4	-2	-2	-1	-2
재정수지 (조 엔)	-24.7	-14.8	-10.6	-7.0	-13.9
총부채 (GDP 대비 %)	228	220	214	207	204
총부채 (조 엔)	1,332.6	1,357.1	1,360.3	1,370.8	1,384.7
명목GDP 증가율 (%)		5.3	3.0	4.7	2.1
BOJ 정책금리 변동	1/31(-0.1%)	1/31(-0.1%)	1/31(-0.1%), 3/31(0.05%), 8/31(0.25%)	1/31(0.5%), 12/31(0.75%)	1/31(0.75%), 6/30(1.0%)
재정기조① 재정수지	확장	확장	확장	확장	확장
재정기조② 총지출 vs 총수입		긴축	긴축	긴축	확장
재정기조③ 총지출 vs 경상성장률		긴축	긴축	긴축	확장
재정정책 기조(종합)	확장	긴축	긴축	긴축	확장
통화정책 기조	완화	완화	긴축 전환	긴축	긴축

주 : 일반정부 기준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BOJ 기준금리(Bloomberg).

IMF 권고사항

- 확장적 재정이 정상시 불필요한 부양을 제공하고 근원물가를 오래 지속시켜
금리 정상화 부담을 높일 수 있음
 - 2026-2027년 기준선보다 매년 GDP의 0.2%, 2028년 이후 0.3%씩 추가
재정조정
 - 선별성이 낮은 에너지 보조금의 폐지와 추경의 대형 예산의 충격 대응 목적 제한
 - 에너지 충격 지원은 재정중립적·일시적·피해계층 선별 방식으로 설계
 - 고품질 인적·물적 투자와 중기 재정준칙을 통해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

■ 일본정부 답변¹¹⁴⁾

- 내각부 전망상 기초재정수지는 FY2026에 대체로 균형, FY2027에는 흑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무차별적인 확장이 아니라 효과가 약한 조세지출·보조금은 재검토하고, 생활 지원과 성장기여도가 높은 조치를 우선하는 접근이라고 설명
- 중·저소득층 대상 환급형 세액공제를 검토하고, 그 전까지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한시 정지하는 방안도 적자국채 없이 재원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논의한다고 밝힘
- 관행적 추경 의존 축소와 다년도 지출계획 개선을 통해 재정체계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답변

■ 평가

- 일본 정부는 “총지출 확대가 곧 무차별 부양은 아니다”라는 구성·재원 논리와 중기 재정경로를 제시
- 그러나 IMF와 일본 정부의 기초수지 전망 차이가 크므로, 비동조화 논쟁을 해소하려면 독립적 전제 비교와 추경 집행률·재원·선별성의 사후 검증 필요

(3) 시사점

■ 사례 종합

- 유로지역 2022년과 영국 2022년은 확장재정이 통화긴축의 물가안정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이론과 실제 지적이 일치한 사례
 - 광범위·비선별 지원과 재원 없는 감세가 문제로 지적

114) IMF, Japan: 2026 Article IV Consultation, Country Report No. 26/75, 2026.4, Staff Report, “Authorities’ Views.” para. 36, pp. 20–21.

- 각국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 단기 헤드라인 물가 억제, 잠재산출 확대를 근거로 답변
 - 다만 실제 정책 신뢰는 선별성, 자동일몰, 재원, 독립 전망이 뒷받침될 때 유지
- 일본 2014년은 반대 방향의 정책이 재정신뢰와 경기안정이라는 목표를 분담할 수 있음을 시사
 - 동시에 재정긴축의 단기 경기충격을 과소평가하면 통화완화만으로 충분히 상쇄하기 어렵다는 교훈
- 일본 2026년은 금리가 오르고 있어도 실질금리와 금융여건이 여전히 완화적일 수 있음을 시사
 - 한국 사례도 단순한 확장재정+금리 인상보다 정책 수준과 파급효과를 함께 판단할 필요

■ 한국의 상황에 대비한 점검사항

- 총지출 증가율뿐 아니라 경기조정 기초수지, 이자지출 제외 기초수지, 재량조치별 재정 기초 등을 활용해 대응
- 물가효과를 요인 분해하여 세금·가격보조에 따른 직접 CPI 효과와 가치분소득·총수요를 통한 근원물가 효과를 별도로 추계하여 대응
- 전체 지원 중 소득하위계층, 한계기업이 아닌 생존가능 피해기업, 공급제약 완화 투자에 실제로 배분되는 비중 등을 활용
- 신규 사업 및 일몰사업 등 종료시점, 연장 조건, 세입·지출 구조조정 재원, 중기 부채경로를 예산안과 동시에 제시

대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양극화 지표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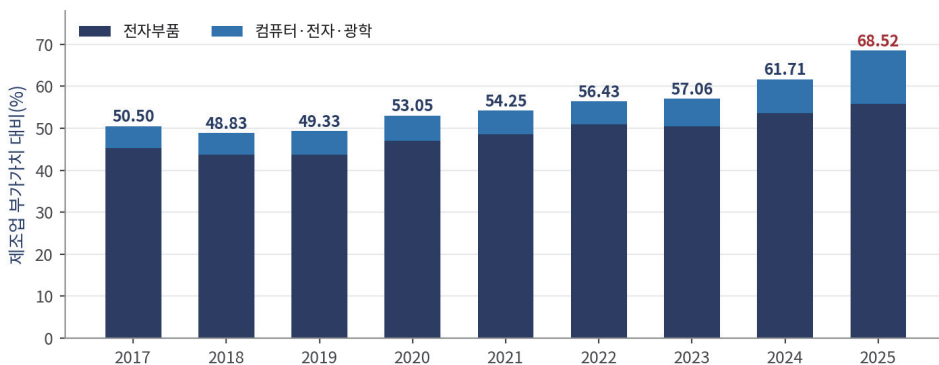
김민경 부연구위원
작성시점 : 2026.8.22.

(1) 산업·부문 구조

■ 대만의 최근 호황은 산업 전반의 균등한 확장보다 반도체·ICT 제조업과 관련 수출의 비중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형태로 전개

-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제조업 부가가치 중 전자부품과 컴퓨터·전자·광학의 합계 비중은 2017년 50.50%에서 2025년 68.52%로 18.02%p 상승
 - 컴퓨터·전자·광학은 2024년 8.16%에서 2025년 12.62%로 1년 만에 4.46%p 급등하여 AI 서버 수요의 영향이 직접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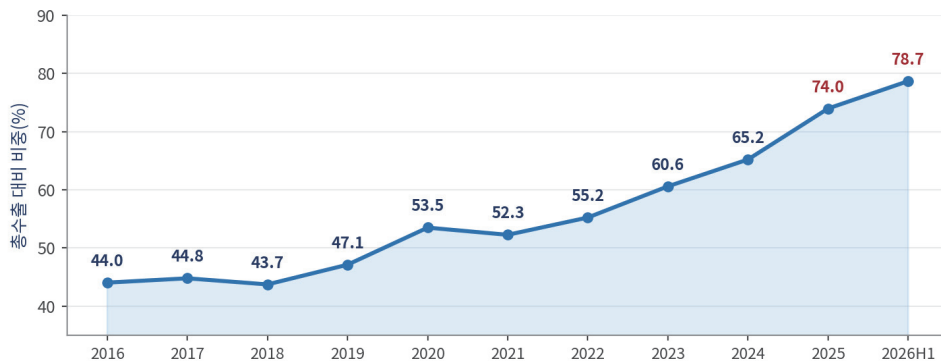
그림 1 제조업 부가가치 중 정보전자 산업 비중



자료: 경제부 통계처「제조업 부가가치 구조 변동 - 중분류별」 https://www.moea.gov.tw/Mns/DOS/content/wHandMenuFile.aspx?file_id=38738 / 동일 산업분류 공식 시계열이 2017년부터 확인되어 2016년 제외

- (수출액 대비 산업별 비중) 전자부품과 ICT의 합계 수출비중은 2016년 44.05%에서 2025년 73.98%로 상승하고 2026년 상반기 78.69%에 도달하여 부가가치보다 집중 속도가 빠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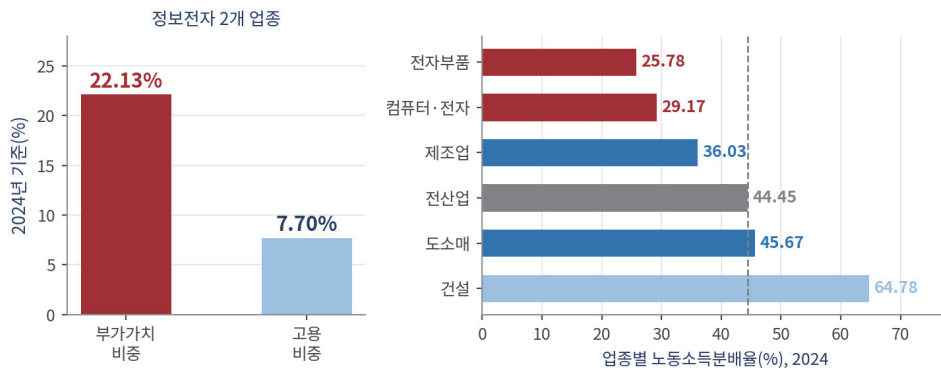
그림 2 총수출 중 전자부품·ICT 비중



자료: 재정부 통계처「해관진출구무역통계」 <https://service.mof.gov.tw/public/Data/statistic/trade/monthly/11412/%E9%9B%BB%E5%AD%90%E6%9B%B8.pdf> / 2026H1은 1~6월 누계

- (반도체 GDP 비중) 2024년 전자부품 제조업의 명목 GDP는 4조 4,145억 NT\$로 명목 GDP의 17.15%, 컴퓨터·전자·광학 포함 시 22.13%인 반면 두 업종의 고용비중은 7.7%로 명목 GDP의 3분의 1 수준
- (업종별 노동소득분배율) 2024년 전자부품 25.78%, 컴퓨터·전자·광학 29.17%로 전산업 44.45% 대비 각각 18.67%p, 15.28%p 낮은 반면 건설공사업 64.78%, 도매·소매업 45.67%로 전산 업을 상회
 - 부가가치와 고용의 괴리는 정보전자 산업의 높은 자본집약도에 기인하며 동 산업의 확장이 임금소득 확산으로 직결되지 않는 구조적 이유를 형성

그림 3 정보·전자 산업의 부가가치·고용 비중과 업종별 노동소득분배율(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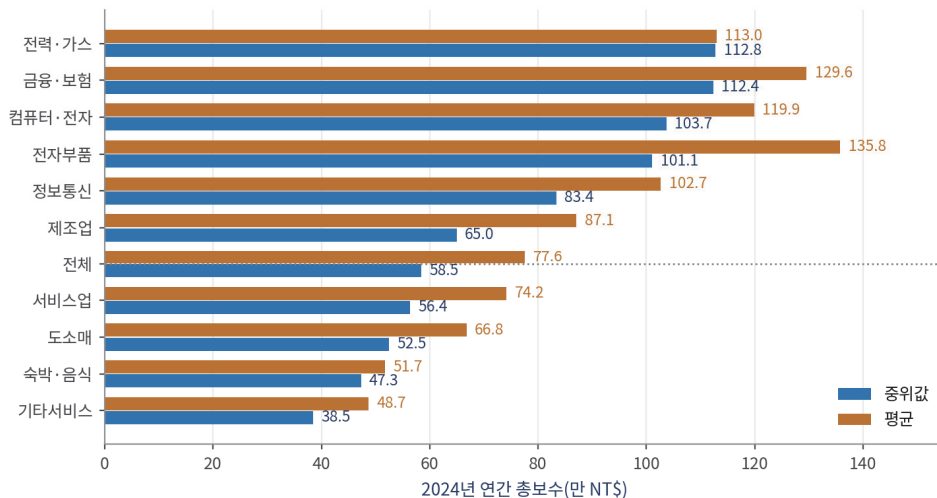
자료: 주계총처 「국민소득통계연보 113년」 제4표 국내생산총액 및 요소소득 업종별
<https://www.stat.gov.tw/cl.aspx?n=2672> /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해당 업종 GDP

(2) 노동시장과 임금

■ 산업집중이 노동시장의 임금측면에서도 확인가능하며 업종 간 격차와 업종 내부 격차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

- (업종 간 임금격차) 2024년 전자부품 제조업의 중위 총보수는 101.1만 NT\$로 전체 중위값 58.5만 NT\$의 1.73배, 평균 총보수는 135.8만 NT\$로 전체 평균 77.6만 NT\$의 1.75배
- (업종 내부 분산도) 전자부품 제조업의 Q3/Q1은 2.20배, 중위/평균은 74.4%로 전체(2.08배, 75.4%)보다 분산이 커 고임금 업종일수록 내부 격차도 확대
 - 숙박·음식업은 중위/평균 91.5%, Q3/Q1 1.59배로 내부 분산이 작으나 수준 자체가 낮아 중위값이 전체의 80.9%에 그침
 - 업종 평균만으로는 보상구조 판단이 곤란하므로 중위값과 분산도의 병행 관리가 필요

그림 4 2024년 업종별 연간 총보수: 중위값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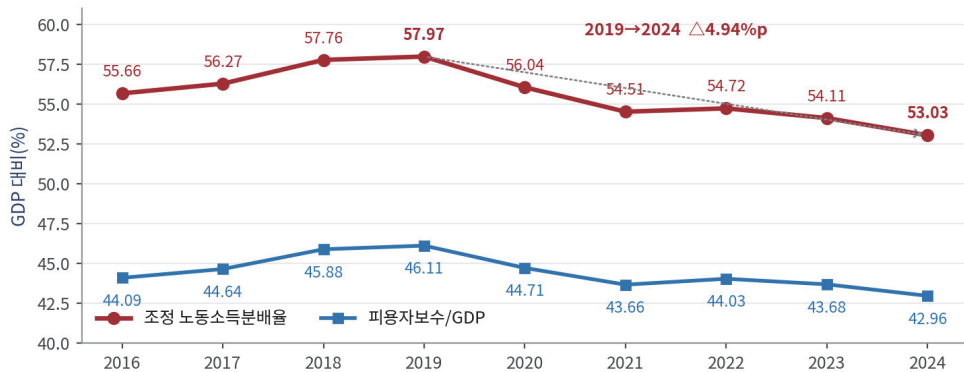
자료: 주계총처 「전일제 본국적 피용자 연간 총보수 사분위 통계」 표 6(2024년) https://www.stat.gov.tw/News_Content.aspx?n=3703&s=235514 / 중위/평균과 Q3/Q1은 원자료로부터 산출

- (노동소득분배율)¹¹⁵⁾은 2019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2024년은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피용자보수/GDP로 산출한 노동소득분배율은 2016년 44.09%에서 2019년 46.11%까지 상승한 후 2024년 42.96%로 하락
 -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소득을 보정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2016년 **55.66%**에서 2019년 **57.97%**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2021년 54.51%, 2023년 54.11%, 2024년 **53.03%**까지 하락

115) 조정 노동소득분배율 = (피용자보수 / GDP) × (전체 취업자 / 임금근로자) × 100

-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만을 GDP와 비교할 경우 자영업자·고용주 등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소득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체 취업자와 임금근로자 수의 비율을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보정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을 산출한 본 보고서의 계산값
 -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DGBAS)의 국민소득통계에서 명목 GDP와 피용자보수를 활용하고 인력자원조사의 「歷年就業者之從業身分」에서 전체 취업자와 임금근로자(paid employees) 수를 결합하여 산출
 -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1인당 노동보수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다고 가정에 기반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절대수준보다 시계열 변화를 보는 의미

그림 5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원계열과 조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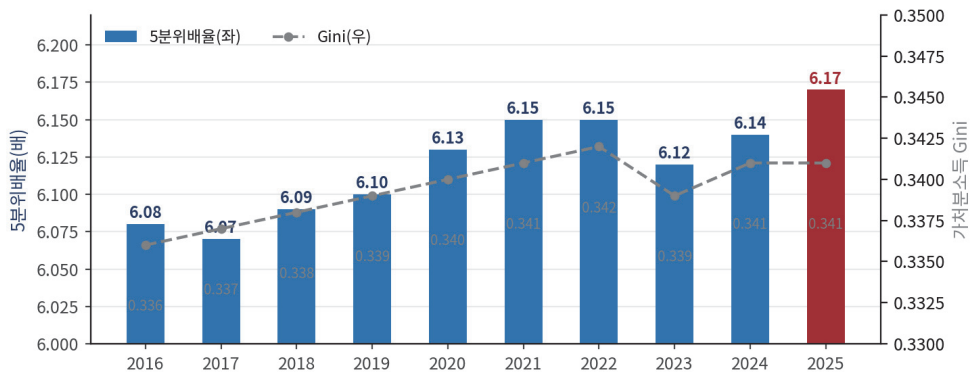
자료: 주계총처 「국민소득통계연보」 및 「인력자원조사」 제9표 <https://www.stat.gov.tw/cl.aspx?n=2672> /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주계총처 「인력자원조사」 제9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의 자영업자 노동소득을 보정하여 산출 <https://www.stat.gov.tw/cl.aspx?n=2700>

(3) 소득분배

■ 공식 가계조사 기준 최종 가처분소득 불평등은 2016년 이후 악화되지 않았으나 시장소득 단계·절대금액·분위 내부 구조로 구분할 경우 방향이 상이하게 나타남

-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2016년 0.336에서 2022년 0.342까지 상승한 후 2023년 0.339, 2024~2025년 0.341을 기록
- (5분위배율) 6.08배에서 6.17배로 소폭 상승에 그쳤으나, 최저 20% 소득점유율은 2018년 6.66%를 정점으로 2025년 6.56%까지 하락하고 최고 20%는 40.36%에서 40.47%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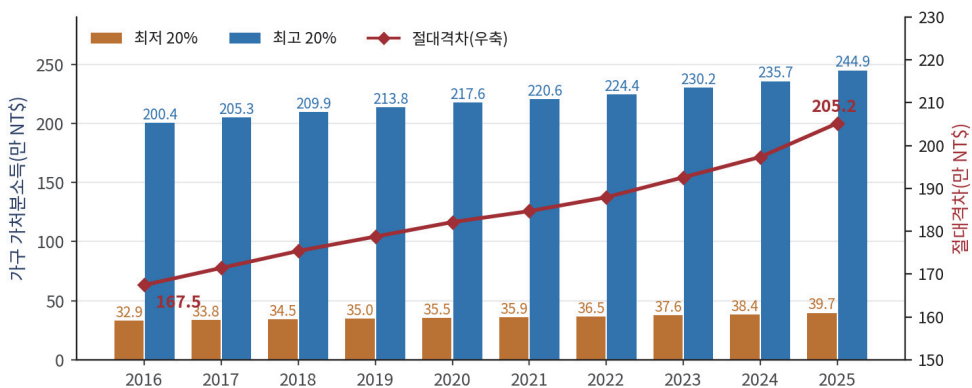
그림 6 가처분소득 5분위배율 및 지니계수



자료: 주계총처 「가계수지조사」 제4표·제6표 <https://www.stat.gov.tw/cl.aspx?n=2693>

- (절대격차) 최고 20%와 최저 20% 가구의 가처분소득 차이는 2016년 167.5만 NT\$에서 2025년 205.2만 NT\$로 37.7만 NT\$(22.5%) 확대
 - 확대분은 최저 20% 가구의 연간 소득(39.7만 NT\$)에 상당하는 규모로 배율은 안정적이나 체감 격차가 확대되는 이유를 설명

그림 7 분위별 가구 가처분소득 및 절대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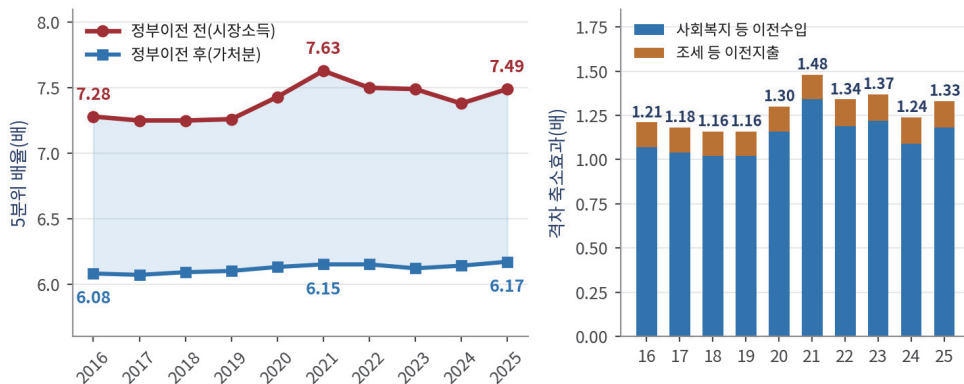


자료: 주계총처 「가계수지조사」 제3표 호수 5등분위조별 평균 가구 가처분소득
<https://www.stat.gov.tw/cl.aspx?n=2693>

■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대만이 산출하지 않으나 가계수지조사 제6표의 ‘정부이전 전 배율’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2016년 이후 연속계열로 확보

- (정부이전 전 배율) 2016년 7.28배에서 2021년 7.63배까지 확대된 후 2024년 7.38배로 하락하였다가 2025년 7.49배로 재확대되어 이전 후 배율(6.08→6.17배)보다 변동폭이 큼
- (재분배 효과) 2016년 1.21배에서 2021년 1.48배까지 확대된 후 2025년 1.33배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사회복지 등 이전수입¹¹⁶⁾의 기여가 1.18배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조세 등 이전지출의 기여는 0.15배에 그침
 - 조세의 재분배 기여가 10년간 0.14~0.15배로 사실상 고정되어 있어 대만의 격차 축소가 지출 측면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

그림 8 정부이전 전·후 5분위배율과 재분배 효과 분해



자료: 주계총처 「가계수지조사」 제6표 정부의 가계에 대한 이전수지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https://www.stat.gov.tw/cl.aspx?n=2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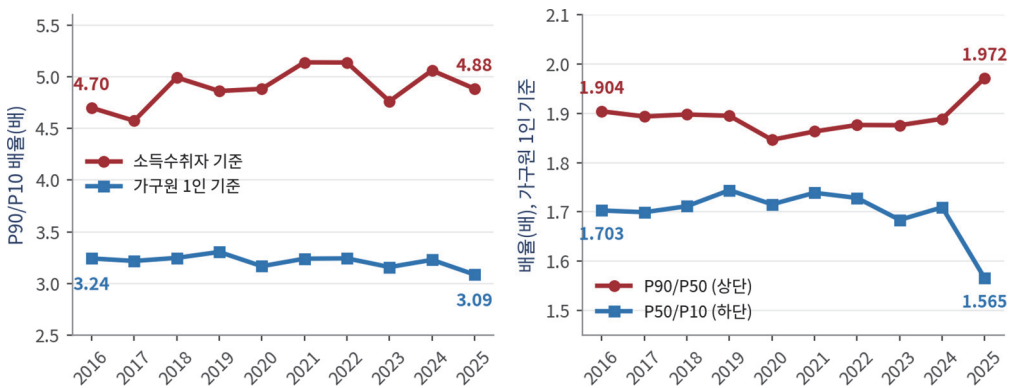
■ 10분위 소득구분으로 관찰할 경우 분포의 상단과 하단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

- (P90/P10 배율) 가구원 1인 기준으로 2016년 3.242배에서 2025년 3.086배로 축소되었으나, 소득수취자 기준으로는 4.699배에서 4.884배로 확대

116) 대만 통계작성기구인 주계총처의 원문 및 설명문에 따라 ‘정부이전수입’은 사회복지, 현물, 현금 등의 정부에서 가계로의 이전을 의미하고 ‘정부이전지출’은 소득과 자산 기반 조세와 같은 가계에서 정부로의 이전을 의미

- 가구원 1인 기준 P50/P10은 1.703배에서 1.565배로 축소된 반면 P90/P50은 1.904배에서 1.972배로 확대되어 하단 개선과 상단 확대가 동시에 진행
 - 가구 단위에서는 가구 내 소득공유와 저소득 고령가구에 대한 이전이 하단을 지지하나 개인 소득 단위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
 - 두 기준의 방향이 상이하므로 격차의 완화 또는 악화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하단은 정책으로 지지되고 상단은 시장에서 확대되는 구조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

그림 9 십분위 배율 추이((P90/P10))



(4) 자산·부동산

■ 분배격차가 가장 크게 관찰되는 영역은 소득이 아닌 자산이며 분포지표는 기준시점 조사이나 자산구성은 연간 계열로 확보 가능

- (자산 상하위 20% 격차) 2021년 상위 20%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51.33백만 NT\$, 하위 20%는 0.77백만 NT\$로 66.7배 차이가 발생하고 상위 20%가 총자산의 62.68%를 보유
- (순자산 지니계수) 2021년 0.606으로 같은 해 가처분소득 5분위배율 6.15배를 감안할 때 순자산 5분위 배율은 가처분소득 5분위배율 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
 - 2022년 이후 갱신이 중단되어 대만 주가가 급등한 2022~2025년 구간의 자산분배 통계 수치 파악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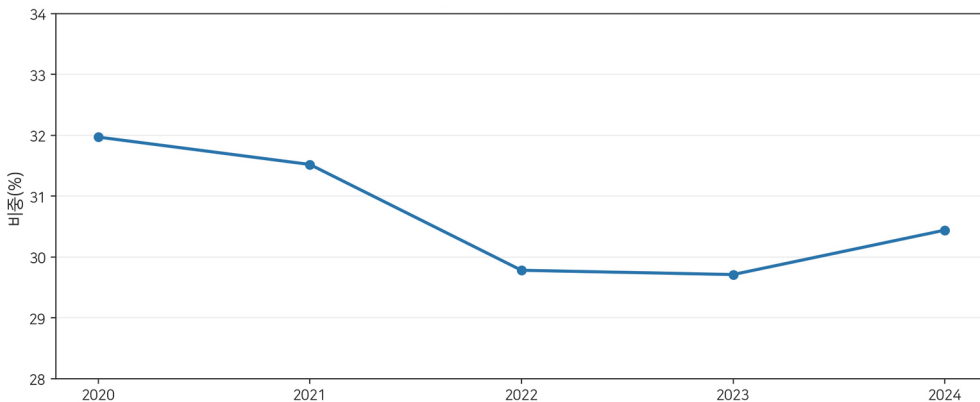
표 1 자산분배 지표

구분	2021년 말
순자산 5분위 배율(배)	66.93
순자산 지니계수	0.606
상위 20% 가구 순자산(백만NT\$)	51.33
하위 20% 가구 순자산(백만NT\$)	0.77
상위 20% 자산점유율(%)	62.68
가구 평균 순자산(백만NT\$)	16.38
가구 순자산 중위(백만NT\$)	8.94

자료: 주계총처 「가정재분배통계」(2024.4.29. 공표, 2021년말 기준)
<https://www.stat.gov.tw/cl.aspx?n=2771>

- 가계부문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1.97%에서 2023년 29.71%까지 하락한 뒤 2024년 30.44%로 소폭 반등
 - 부동산 자산의 절대 규모는 2020년 48조 4,708억 대만달러에서 2024년 55조 337억 대만달러로 증가했으나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전체 가계자산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자산구성 상 부동산 비중은 1.53%p 감소¹¹⁷⁾

그림 10 가계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



자료: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DGBAS), 「家庭部門資產結構(가계부문 자산구조)」, 최종소유권 기준.
<https://www.stat.gov.tw/cp.aspx?n=2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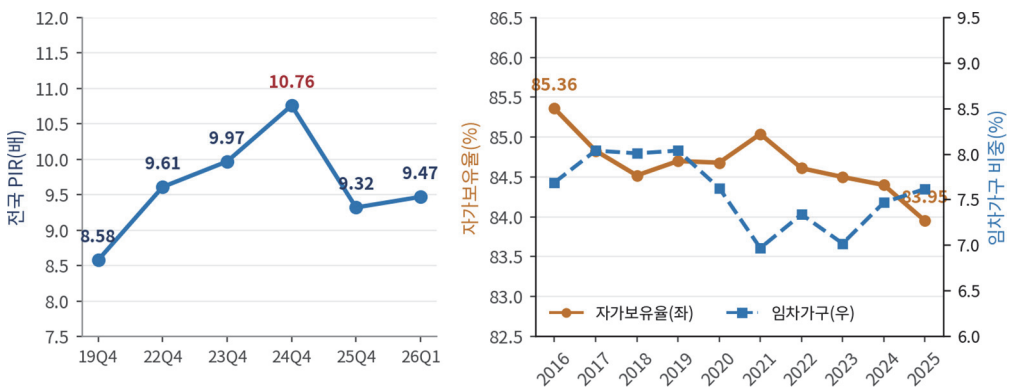
117) 자산분포 조사가 2021년에서 중단되어 금융자산 비중이 상승한 2022~2024년 구간의 분포 변화는 확인이 안되므로 금융자산 보유 여부에 따른 격차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5) 주거

▣ 주택구입 부담은 팬데믹 이전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자가보유율은 완만한 하락세 지속

- (주택가격소득비율) 전국 PIR¹¹⁸⁾은 2019년 4분기 8.58배에서 2024년 4분기 10.76배까지 상승한 후 조정되었으나 2026년 1분기 9.47배로 2019년 수준을 상회
 - 2025년 4분기 9.32배에서 재상승한 점은 조정국면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후속 분기 관찰이 필요
- (자가보유율) 2016년 85.36%에서 2025년 83.95%로 1.41%p 하락
- (임차가구 비중) 7.69%에서 7.62%로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별거 중인 직계 존속 소유 주택 거주 가구는 4.11%에서 5.61%로 1.50%p 상승
 - 자가보유율 하락분이 임차 증가가 아닌 직계존속 소유 주택 거주 증가로 흡수된 점은 주거비 부담이 세대 간 자산이전 형태로 완충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자산이 없는 청년층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완충장치

그림 11 전국 PIR 및 자가보유율·임차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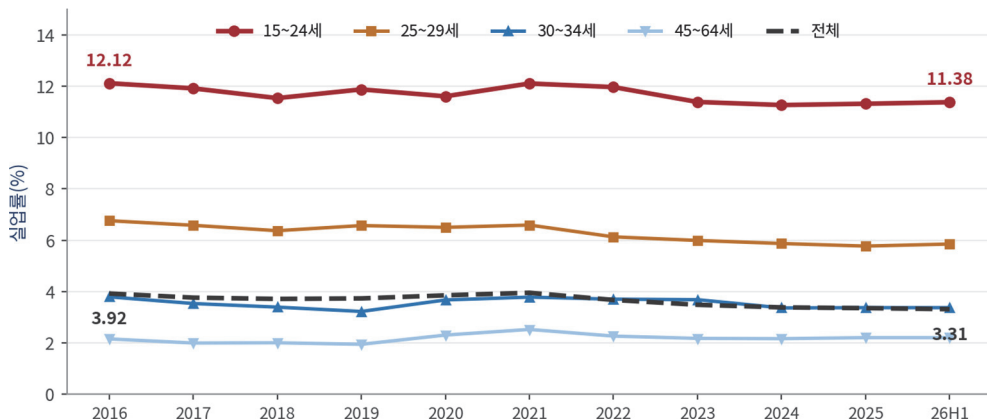
118) Price-to-Income Ratio

(6) 세대

■ 전체 고용여건 개선과 달리 청년층의 상대적 노동시장 진입 격차는 장기간 유지

- (청년-전체 실업률 격차) 전체 실업률은 2016년 3.92%에서 2025년 3.35%로 0.57%p 하락한 반면 15~24세는 12.12%에서 11.32%로 0.80%p 하락에 그쳐 격차는 8.20%p에서 7.97%p로 유지되고 2026년 상반기 8.07%p로 재확대
- 25~29세는 6.76%에서 5.77%로 0.99%p 하락하여 청년층 중 개선폭이 최대이고, 30~34세는 3.79%에서 3.37%로 전체 수준에 수렴한 반면 45~64세는 2.15%에서 2.20%로 소폭 상승

그림 12 연령대별 실업률 추이(2016~2026H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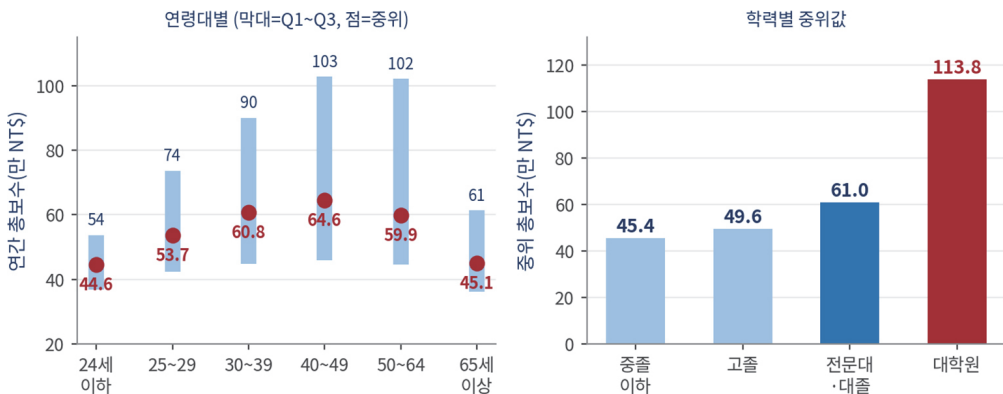
자료: 주계총처 「인력자원조사」 제10표 연령조별 실업률

<https://www.stat.gov.tw/cl.aspx?n=2700> / 2026H1은 1~6월 평균

- (연령대별 소득) 2024년 24세 이하 중위 총보수는 44.6만 NT\$인 반면 40~49세는 64.6만 NT\$로 약 45% 높은 수준
- 격차는 중위값보다 상위 구간에서 확대되어 Q3 기준 24세 이하 53.7만 NT\$ 대비 40~49세 102.8만 NT\$로 1.91배이며, 청년층은 중위 수준의 열위보다 상방 기회의 제약이 큼

- 학력별로는 대학원 중위값이 113.8만 NT\$로 중졸 이하 45.4만 NT\$의 2.51배, 전문대·대졸 61.0만 NT\$의 1.87배

그림 13 2024년 연령대별·학력별 연간 총보수



자료: 주계총처 「전일제 본국적 피용자 연간 총보수 사분위 통계」 표 6
https://www.stat.gov.tw/News_Content.aspx?n=3703&s=235514

(7) 지역

□ 지역별 격차는 전국 평균만으로 파악이 어렵고 주택가격·인구밀도·가구소득을 결합하는 접근이 필요

- (지역별 집값) 2025년 4분기 주택가격지수는 타오위안 156.25, 타이난 152.22, 타이중 150.73, 가오슝 148.45로 전국 145.52를 상회하는 반면 타이베이 125.32로 최저
 - 동 지수는 기준시점 대비 상승률이므로 가격 수준이 아닌 상승 속도의 지역차를 나타냄
- (지역별 인구밀도) 타이베이는 2016년 9,918명/km²에서 2025년 8,975명/km²로 943명 감소한 반면 신주현은 384명에서 418명으로 상승하고, 신주시는 확인 가능한 시점에서 4,200~4,400명/km²의 높은 밀도를 유지

- 타이베이 지역의 인구 유출과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가격지수 상승률, 신주 지역의 인구 유입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축으로 한 공간 재편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표 2 2025년 4분기 지역별 주택가격지수

지역	주택가격지수	지역	주택가격지수
타오위안	156.25	신베이	140.27
타이난	152.22	타이베이	125.32
타이중	150.73	-	-
가오슝	148.45	전국	145.52

자료: 내정부 부동산정보플랫폼 지역별 주택가격지수 <https://pip.moi.gov.tw/Publicize/Info/E1060>

표 3 지역별 인구밀도(명/km²)

연도	타이베이	신주시	신주현	타이난	가오슝
2016	9,918	-	384	861	942
2017	9,872	4,235	387	861	941
2018	9,818	4,279	390	860	940
2019	9,732	4,309	395	858	939
2020	9,575	-	400	855	937
2021	9,288	4,346	403	850	930
2025	8,975	4,376	418	845	-

자료: 내정부 호정사 인구통계 <https://www.ris.gov.tw/app/portal/346> / 누락 연도는 미보간

(8) 시사점

■ 현시점의 대만의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분배문제를 “반도체 호황 이후 지니계수가 급등한 양극화”로 규정하는 것은 공식통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동시에 “호황이 소득분배를 개선하였다”는 평가도 수치로는 확인 불가

- 전자·ICT 수출비중이 44.05%에서 73.98%로 상승하는 동안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36에서 0.341로 거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음

- 정부이전 전 배율은 7.28배에서 7.49배로 확대되고 상·하위 계층 간 절대소득 격차와 가구원 1인 기준 p90/p50도 상승하여 재분배 이전 단계에서는 소득격차 확대 징후가 확인
- 통계를 기반으로 현시점에서는 “시장 및 이전 전 단계의 격차 확대는 정부 이전이 완충 작용하여 최종 가처분소득 분배지표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지지 않은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특정 산업분야 성장의 귀착을 노동시장과 가계소득으로 어느 정도로 확산되는지 관리할 필요

- 2024년 정보전자 2개 업종이 명목GDP의 22.13%를 생산하면서 고용의 7.7%만을 흡수하고 해당 업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25~29%로 전 산업 44.45%를 크게 하회

■ 정부이전을 통한 2025년 기준 소득격차 축소효과 1.33배 중 사회복지급여·연금 등 이전수입에 의한 효과가 1.18배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조세 등 이전지출에 의한 효과는 0.15배에 불과

- 조세에 의한 격차 축소효과는 2016~2025년 동안 0.14~0.15배 수준에서 거의 변화하지 않아, 대만의 소득재분배가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를 통한 격차 축소보다는 복지·연금 등 이전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완하는 방식에 상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
-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정체된 상태에서 자산 축적이 진행될 경우 소득지표가 안정적이어도 격차가 확대되므로 자본소득·자산 과세의 재분배 효과 점검이 필요

▣ 낮은 수준의 전체 실업률 지표만으로는 세대 격차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움

- 청년-전체 실업률 격차가 10년간 8%p 내외에서 유지되고 보수 측면에서도 청년층은 중위값보다 상위구간(Q3 기준 1.91배)의 차이가 큼
- 자가보유율 하락분이 직계존속 소유 주택 거주 증가로 흡수되고 있어 주거 부담이 세대 간 자산이전으로 완충되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자산 없는 가구에는 해당이 안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

▣ 성장과 분배를 평가하는 통계를 분석함에 있어 “GDP·수출 증가”에서 “증가한 부가가치가 임금·세대·지역·주거·자산을 통해 누구에게 귀착되는가”로 확장할 필요

금리 상승에 따른 주요국의 재정부담과 대응

서영빈 부연구위원
자료지원: 김도일 연구원
작성시점: 2026.8.26.

1. 주요국 국고채 금리 현황

주요국 국채금리는 통화정책 방향 등에 따라 국가별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장기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미국·영국) 단기금리는 고점 대비 하락한 반면, 10·30년물 장기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일본)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장·단기 국채금리가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며, 장기물의 상승세가 부각

그림 1 주요국 국고채 금리 현황(2010-2026)





주: 국채금리는 Bloomberg Generic Bond Yield Index 기준

출처: Bloomberg

2. 주요국 사례

(1) 영국

▣ ('21~'23년) 금리 상승에 따른 정부의 이자부담 확대 등 재정부담 증가

- (기준금리 인상) 영란은행은 높은 물가상승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21년 12월 0.1%에서 '23년 8월 5.25%까지 인상
 - '23년 8월 이후 '24년 7월까지 5.25%를 유지하였으며, 8월부터 금리 인하
- (재정부담 확대) 높은 정부부채와 금리 상승이 결합하면서 정부의 이자지출이 증가
 - 영국 예산책임처(OBR)는 높은 정부부채와 '21년 이후 급격한 금리 상승이 결합하면서 정부의 이자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
 - 이자지출은 '19/20년 390억 파운드에서 '24/25년 1,060억 파운드로 약 2.7배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도 1.7%에서 3.6%로 상승
 - 일반정부 총부채는 '19년 1조9,136억 파운드(GDP 대비 84.9%)에서 '24년 2조 8,878억 파운드(99.9%)로 증가하였으며, 재정적자도 같은 기간 536억 파운드(2.4%)에서 1,697억 파운드(6.1%)로 확대

표 1 영국의 금리 인상 전후 주요 재정지표 변화

항 목	금리인상 전('19)	금리인상 후('24)	증 감
기준금리(%)	0.1('21.12)	5.25('23.8)	5.15%p
총부채(억 파운드)	19,136	28,878	9,742
총부채(GDP 대비 %)	84.9	99.9	15.0%p
이자지출(억 파운드)	390	1,060	670
이자지출(GDP 대비 %)	1.7	3.6	1.9%p
재정적자(억 파운드)	536	1,697	1,161
재정적자(GDP 대비 %)	2.4	6.1	3.7%p

주: 1. 이자지출은 영국 회계연도(FY, 4월~익년 3월) 기준

2. GDP 대비 총부채·재정적자는 IMF(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6), 이외 지표는 각 국가별 자료 활용

■ ('24~'25년) 재정준칙 강화와 세입·지출 조정을 통한 재정부담 관리

- (재정준칙 개편) '24년 10월 높은 차입·부채 및 이자비용 등 재정압력에 대응하여 경상지출을 세입으로 충당하고 중기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재정준칙 개편
 - 경상예산의 균형·흑자를 목표로 하는 안정성 준칙(Stability Rule)과 GDP 대비 순금융부채 감소를 목표로 하는 투자 준칙(Investment Rule)을 도입
- (재정 조정) 세입 확충과 중기적인 지출 관리를 통해 정부차입을 축소하고 재정여력을 확보
 - '24년 예산에서 연간 약 360억 파운드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FY2024/25 이후 기초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FY2027/28에는 GDP 대비 0.7%의 기초재정수지 흑자로 전환할 계획
 - '25년 3월 정부는 부채이자지출이 1,060억 파운드에 달하는 상황에서 향후 부채와 차입을 줄여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

(2) 미 국

■ ('22~'23년) 금리 상승에 따른 연방정부의 이자부담 확대

- (기준금리 인상) 미 연준(Fed)은 물가상승에 대응하여 연방기금금리 목표범위를 '21년 12월 0~0.25%에서 '23년 7월 5.25~5.50%까지 인상
 - '23년 7월 이후에도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발행·차환하는 국채의 조달금리도 상승
- (재정부담 확대) 높은 금리가 국채의 신규 발행 및 차환에 반영되면서 연방 정부의 순이자지출이 크게 증가
 - 순이자지출은 '21년 3,520억 달러에서 '24년 약 8,900억 달러로 약 2.5배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도 1.5%에서 3.1%로 상승

- 미 의회예산처(CBO)는 정부부채 증가와 함께 만기도래 국채가 기존보다 높은 금리로 차환되면서 정부부채에 적용되는 평균금리가 상승한 것을 이자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

표 2 미국의 금리 인상 전후 주요 재정지표 변화

항 목	금리인상 전 (‘21)	금리인상 후 (‘24)	증 감
기준금리 (%)	0~0.25 (‘21.12)	5.25~5.50 (‘23.7)	5.25%p
총부채 (억 달러)	284,289	354,647	70,358
총부채/GDP (%)	125.0	122.3	-2.7%p
이자지출 (억 달러)	3,520	8,900	5,380
이자지출/GDP (%)	1.5	3.1	1.6%p
재정적자 (억 달러)	27,750	18,328	-9,422
재정적자/GDP (%)	11.5	7.9	-3.6%p

주: 1. 총부채·순이자지출·재정적자 금액은 미국 회계연도(FY, 전년 10월~당해년 9월) 기준
 2. GDP 대비 총부채·재정적자는 IMF(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6), 이외 지표는 각 국가별 자료 활용

□ ('24년 이후) 재량지출 제한 등을 통한 재정적자 및 부채 관리

- (재정지출 조정)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of 2023)」에 따라 '24~'25년 재량지출에 법정 한도를 설정하는 등 재정적자 및 부채 증가 완화를 추진¹¹⁹⁾
 - 코로나19 대응 미집행 예산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
 - CBO는 해당 법률로 '24~'33년 누적 재정적자가 약 1.5조 달러 감소하고, '33년 민간보유 연방부채가 GDP 대비 119%에서 115%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
- (이자부담 관리) 재정적자 축소에 따른 정부차입 감소를 통해 향후 부채 및 이자비용 증가를 완화

119) FRA는 금리 상승이나 '24년 이자지출 증가에 직접 대응하여 도입된 정책은 아니며, 부채한도 조정과 함께 재정적자 및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3년 제정되어 '24년부터 재량지출 한도에 관해 적용

- 미 의회예산처(CBO)는 FRA에 따른 지출 감소가 정부차입을 줄여 부채상환 비용(debt-service costs)을 추가로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
- 다만 FRA는 금리 상승에 직접 대응하여 도입된 정책이라기보다 재정적자와 부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향후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

(3) 캐나다

▣ ('21~'24년) 금리 상승에 따른 정부의 이자부담 확대

- (기준금리 인상) 캐나다 중앙은행은 물가상승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21년 12월 0.25%에서 '23년 7월 5.0%까지 인상
 - '23년 7월 이후 '24년 6월까지 5.0%를 유지하는 등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
- (이자부담 확대) 금리 상승이 정부부채의 조달비용에 반영되면서 이자비용(public debt charges)이 크게 증가
 - 정부 이자지출은 '21/22년 245억 캐나다달러에서 '23/24년 473억 캐나다달러로 약 1.9배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도 1.0%에서 1.6%로 상승
 - 캐나다 재무부는 '23/24년 이자비용이 전년 대비 123억 캐나다달러(35.2%)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이자부담부채의 평균 유효금리 상승을 제시
- (재정수지) 다만 이자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정적자는 축소되어,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재정수지 악화보다는 재정여력 제약의 형태
 -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21/22년 902억 캐나다달러에서 '23/24년 619억 캐나다달러로 감소하였으며, IMF 기준 GDP 대비 재정적자도 '21년 3.1%에서 '24년 2.1%로 하락
 - 즉, 전체 재정수지는 개선되는 가운데 이자비용에 투입되는 재원이 증가하면서 다른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축소

표 3 캐나다의 금리 인상 전후 주요 재정지표 변화

항 목	금리인상 전 (‘21)	금리인상 후 (‘24)	증 감
기준금리 (%)	0.25 (‘21.12)	5.00 (‘23.7)	4.75%p
총부채 (억 캐나다달러)	11,345	12,362	1,017
총부채/GDP (%)	112.6	110.0	-2.6%p
이자지출 (억 캐나다달러)	245	473	228
이자지출/GDP (%)	1	1.6	0.6%p
재정적자 (억 캐나다달러)	902	619	-283
재정적자/GDP (%)	3.1	2.1	-1.0%p

주: 1. 총부채·이자지출·재정적자 금액은 캐나다 회계연도(FY, 4월~익년 3월) 기준
 2. GDP 대비 총부채·재정적자는 IMF(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6), 이외 지표는 국가별 자료 활용

▣ (‘24년 이후) 금리위험을 고려한 정부부채 관리¹²⁰⁾

- (금리위험 관리) 높은 금리가 지속될 경우 기존 부채의 차환 등을 통해 이자비용이 추가로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을 재정전망에 반영
 - ‘24년 예산에서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1%p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재정수지가 1년차 37억 캐나다달러, 5년차 77억 캐나다달러가 추가 악화될 것으로 분석
 - 현재 재정적자가 개선되더라도 높은 금리가 지속될 경우 이자비용 증가가 향후 재정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을 제시
- (부채관리) 정부의 자금수요를 안정적이고 낮은 비용으로 조달하기 위해 국채 만기구조 등을 조정하여 차환 및 금리위험을 관리
 - ‘24/25년 장기채 발행 비중을 확대하는 등 국채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중장기적인 자금조달 안정성과 부채비용을 관리

120) 캐나다의 부채관리 조치는 금리 상승에 대응하여 새롭게 도입된 단일 정책이라기보다 기존 부채관리 체계의 일환이며, 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차환·금리위험을 관리하는 성격

3.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비교

■ 최근 재정압박은 이자비용 증가가 중심인 반면, 2010년대 유럽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재정위험이 증폭

- (발생 배경) 최근에는 높은 물가에 대응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이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파급된 반면, '10년 재정위기에서는 재정·금융부문의 취약성과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국채시장의 불안으로 연결
 - 최근사례는 '21~'22년 이후 중앙은행의 통화긴축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기존 저금리 국채의 차환과 신규 발행 과정에서 정부의 이자비용이 증가
 - 반면 '10년 재정위기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확대된 가운데 일부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스프레드와 조달금리가 급격히 상승
- (재정압박 경로) 최근에는 높은 금리가 이자지출을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여력을 제약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유럽 재정위기에서는 재정건전성 우려와 국채금리 상승이 상호작용하면서 재정위험이 확대
 - 최근사례는 통화긴축 → 시장금리 상승 → 국채 차환·신규발행 비용 증가 → 이자지출 증가 → 재정여력 축소의 경로가 중심
 - '10년 재정위기에서는 재정건전성 우려 → 국가 위험프리미엄 상승 → 국채금리 상승 → 이자부담 증가 → 재정건전성 추가 악화가 발생
- (시장 접근성) 최근 주요국은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채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은 유지되는 반면, '10년 재정위기는 일부 국가가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
 -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 등은 국채금리 상승과 시장실패 악화로 EU·IMF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
 - 이에 따라 재정조정과 구조개혁 등이 추진되는 등 최근 주요국의 재정압박보다 정부의 재정운용 제약이 크게 확대

참고자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Statements

미국 재무부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Y2024

미국 의회예산처(CBO) –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4 to 2034

영국 중앙은행, Bank Rate history and data

영국 통계청(ONS), UK government debt and deficit

영국 예산책임처(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영국 재무부(HM Treasury), Autumn Budget 2024

_____, Spring Statement 2025

캐나다 중앙은행, Policy interest rate

캐나다 재무부, Annual Financial Report of the Government of Canada FY
2021–2022

Bloomberg L.P ,Bloomberg Generic Bond Yield Index data, 01/01/10 to
31/07/26

IMF,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6

참 고

최근('26년) 국채금리 상승의 재정 영향

■ 최근 국채금리 상승은 재정 총량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어, 이자비용과 국채 만기·발행구조 등을 통해 재정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음

- BIS는 「Annual Economic Report 2026」('26.6.)에서 금리 상승은 정부 이자지출 증가와 재정전망 악화를 가져올 수 있고, 부채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 상승이 재정비용으로 전이되는 속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제시
 - 높은 정부부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정부 이자지출을 증가시키고, 높아진 이자지출은 다시 재정전망을 악화시킬 수 있음
 - 특히 부채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 상승이 재정비용으로 전이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을 지적
- 이를 고려하면, ① 이자지출의 기존 전망 대비 변화, ② 국채의 발행·잔존 만기 변화, ③ 단기·장기물 발행비중 변화 등을 통해 최근 금리 상승의 재정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음
 - 이자지출의 기존 전망 대비 실적 : 이자지출의 전망 상회는 예상보다 재정부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
 - 발행·잔존만기 단축 및 단기물 비중 확대 : 만기 단축 및 단기물 비중 확대는 높은 금리가 향후 재정비용으로 보다 빠르게 전이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줌

■ 영국, 일본 사례는 국채금리 상승의 재정 영향이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이자지출과 국채 발행·만기구조 등 일부 관련 지표의 변화를 확인

- (영국) '26년 부채 이자지출이 기존 전망을 상회한 가운데, 국채 발행계획에서는 단기물 비중이 확대되고 장기물 비중이 축소

- '26/27년 4~5월 정부차입은 '26년 3월 OBR 전망보다 상회하였으며, 중앙정부 지출의 전망 상회분 가운데 24억 파운드는 예상보다 높은 부채 이자지출에 기인¹²¹⁾
 - * 이자지출('26년 4~5월): '26년 3월 OBR 전망 대비 +24억 파운드
 - * 정부부채('26년 4~5월): '26년 3월 OBR 전망 대비 +77억 파운드
- 단기물 발행비중 확대는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조정은 아니나, 금리 상승이 재정비용에 전이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단기물 발행비중: ('25/26년) 37.1% → ('26/27년) 38.6%(+1.5%p)
 - * 장기물 발행비중: ('25/26년) 13.4% → ('26/27년) 9.1%(-4.3%p)
- (일본) '26년에 장기국채의 발행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발행 국채의 평균 발행만기도 과거보다 단축**
 - 국채 입찰 결과, 20년물 평균 낙찰수익률이 상승하는 등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실제 국채 발행금리에도 반영되었으나 최근 금리 상승을 반영한 이자지출 전망의 상향이나 재정수지·부채 등 총량지표의 뚜렷한 변화는 확인이 어려움
 - * 20년물 평균 낙찰수익률: ('26년 6월) 3.542% → (7월) 3.626% → (8월) 3.698%
 - 시장발행 국채의 평균 발행만기 단축으로, 높은 금리로 발행·차환되는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아질 가능성
 - * 평균 발행만기: ('24년) 8년 5개월 → ('25년) 7년 4개월 → ('26년) 7년(계획)
 - '26년 평균 발행만기 단축은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조정은 아니나, 높은 금리가 향후 재정비용으로 전이되는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존재

121) 다만, 부채 이자지출의 전망 상회에는 예상보다 높은 물가에 따른 물가연동국채 비용 증가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므로, 국채금리 상승만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데에 유의

FIS 해외재정동향

2026년 5-8월

발행연월 2026년 9월

발행인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Tel. 02-6908-8200)

인쇄처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스쿨프린팅그룹(주)

(Tel. 02-2258-3366) <http://schoolpt.co.kr>

FIS 한국재정정보원



